

정책연구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趙明哲 · 梁文秀 · 鄭勝鎬 · 朴淳讚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책연구 05-17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趙明哲 · 梁文秀 · 鄭勝鎬 · 朴淳讚



서 언

탈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을 남북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 관계 특히, 경제관계를 한반도 통일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현실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중국은 북한에 있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이 사라진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이전과 달리 다양한 형태를 띠고 밀접화되고 있습니다. 무역은 기존의 국가무역 중심에서 벗어나 변경무역, 중개무역, 보세무역, 지방무역, 되거리무역(덤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도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기간산업과 유통, 서비스, 인프라, 심지어 지하자원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북지원도 규모와 다양성, 지속성에 있어 가장 큰 기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중 경제관계 발전은 중국의 시장지향적 경제정책과 한반도 외교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 이해관계의 근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

계는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급속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고 있는 북·중 경제관계의 밀접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지나친 대중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의존관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 관계개선이나 경제협력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는 남북한 경제통합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본 연구는 최근 심화되어 가는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현장조사와 자료 및 통계 분석,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북한 현장체험자들과의 심도 있는 면담과 설문을 통해 북·중 경제관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명철 본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과 양문수 경남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연구과정에 협조하여 주신 박순찬 공주대학교 교수, 본원의 정승호 연구원과 이현숙 연구조원, 그리고 연구 자문역할을 해주신 임강택 통일연구원 박사, 이상준 국토연구원 박사, 이영훈 한국은행 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성의 있고 정열적인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부족, 현장검증 불가능 등 수많은 애로요인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가적·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인 만큼 널리 양

해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조언과 충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보고서가 정책담당자들과 북한과 중국을 연구하는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5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院長 李 景 台



국문요약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이 받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역 및 투자 의존도,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의존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정도,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북한의 소비 시장에는 이미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이 광물, 에너지 등 북한의 전략적 자원 부문에까지 진출하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북한경제가 중국의 예속경제, 중국의 동북4성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간다면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중국의 예속경제로 전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북한경제를 민족경제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남북경제통합이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적

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여기에서 핵심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착수된 연구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결정짓는 양국간 정치관계의 기초를 역사적으로 접근·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및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하였다.

넷째, 현재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교역과 투자, 지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의 산업생산, 유통, 서비스, 운송, 소비생활 등 경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만한 충분한 자료나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현상을 대략적이지만 광범위하게 연구, 분석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대중국 의존도 수준을 설문방식을 통해 조사·연구하였다.

다섯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측화 정책으로 정립되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방적 지원이나 거래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기업 차원의 방안들을 연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절에서는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동북아의 안보구도 변화 △각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전략 변화 △국내 권력관계의 변화 △자국의 경제력 수준 △한국과의 상호이해관계 증가 △국가지도자의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의 수준 등이 양국 경제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 변수들은 상호 결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책방향과 정책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며 그 정책은 시기마다 결과가 점검되면서 정책의 재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절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초를 분석하고 △1970~2000년대까지의 북한의 시기별 대중국 경제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북한 인식의 변화와 대북한 경제정책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절에서는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 의존도 변화 추이를 주변국 특히 중국과 베트남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이나 시장경제로입국가들의 경제동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혁정책의 주요 목표가 사회주의 시절 폐쇄적 경제운영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추이에서 특기할 사실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증가하는 데 비해, 전반적인 대외무역 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인은 중국과의 대외경제적 연계가 깊어지는 반면, 다른 국가와의 경제적 연계는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을 무역, 투자, 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무역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무역추이와 함께

수출입별 품목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중 무역의 상징적 특성을 보여주는 변경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북·중 무역관계를 보면, 지난 2003년에 북-중 무역은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004년에는 13억 8,521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4%로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중 수출은 5억 8,570만 달러로 전년 보다 48.2%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보다 27.4% 증가한 7억 9,9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북-중 무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의 48.7%(남북교역 포함 시 39%)로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003년의 42.8%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의존도 증가 추세는 2005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2005년 상반기 중·북간 무역규모는 7억 4,15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3%나 증가하였다. 이중 수출은 2억 3,001만 달러, 수입은 5억 1,15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8%, 48.0% 증가하였다. 200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규모는 2억 8,155만 달러로써 이미 2004년 전체 무역적자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북·일 관계 악화로 인해 대일 수출 물량이 상당 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제품의 시장가격이 싸고 거래조건이 양호하며 물류 등 교역여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로서는 어패류, 철강, 광과 슬래그 및 회, 의류, 광물성 연료, 아연 등이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들로서는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 식용육류,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량 및 부속품, 인조 필라멘트 섬유, 곡물, 제분공업 생산물, 철강 가공품, 채유용 종자

및 과일류 등이 수입 상위 품목에 속한다.

북·중간 무역을 설명함에 있어서 변경무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중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교역량에 있어서나, 거래품목의 수에 있어서나, 참여 기업의 수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변경무역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양국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교역을 하는 형태로서 거래품목이 다양하고 교역의 규모가 커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북·중 무역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 북·중 변경무역은 단둥, 지안, 장백, 연변 등 10개의 세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변경무역은 중국의 국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경무역에 참여하려 한다. 현재 변경무역은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혜택이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물품이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에 수출될 경우, 일반무역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통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업들도 대거 변경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변경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변경무역권은 변경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무역회사에 제공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역권을 얻어 교역에 참여하는 형태도 많다. 그만큼 변경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북·중 무역에서는 교역의 형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변경무역 및 일반무역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2002년과 2003년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했으나, 2004년 들어서는 50%대로 떨어졌다. 반면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중국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은 광물 및 철강, 목재 등으로서 대부분 천연자원이

거나 1차 가공품들이다. 최근 주요 수출대상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철강의 경우 전년보다 149.6%나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의 대북투자를 보면,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1억 7,35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폭증하였다. 2000년대부터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북한의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열기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중국의 여러 개 성에서 대북한 투자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북한 투자열기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동북3성과 남방지역의 기업들이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 수는 120여개이며 항주 외하하집단, 하남성 일타집단,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 장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대련화흥집단, 화풍집단, 장춘 이달공모유한회사, 장춘만달제약,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산둥성 초금집단 등 비교적 큰 기업체들이 있다.

둘째, 중국 기업들이 북한 자원개발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에서는 북한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 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고 연변의 남평 세관을 통하여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이 기업은 2004년 60만 톤의 철광분을 수입하였고 2005년에는 200만 톤의 수입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철광분 수송을 위하여 3,5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무산광산으로부터 남평제련소로 통하는 13km에 달하는 철광분 수송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은 어업자원에 대한 합작투자도 하고 있다. 북한 상명 무역총회사와 중국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는 어업영역에서의 공동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인 원산 앞바다를 중국 어선에 개방하여 2009년까지 5년간 입어로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는 조건으로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셋째,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최대의 농업기계 제조업체인 하남성 일타집단 대표단이 지난 2003년 11월에 북한 금성트랙터공장을 방문하고 트랙터의 조립, 디젤엔진, 오일 펌프 등의 영역에서 합작 생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 중국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와 장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가 공동으로 북한에 투자하여 세운 슬레이트공장도 현재 생산 중에 있다. 선양조선족기업인 화신그룹은 2002년 북한에 젓가락공장과 두부공장을 세웠으며 연변 담배공장에서도 북한에 담배합작공장을 세워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넷째,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상무역, 합작투자 형태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북한투자 중국기업들은 북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현존하는 투자제도나 거래관행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 무산광산간의 합작, 산둥성 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청년동광산간의 합작 등에서 투자항목을 보면, 모두 보상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복건성의 북한 무연탄광산에 대한 투자도 중국 측 기업이 15톤급 트럭 20대, 지게차 3대, 디젤 100톤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매달 1만 톤의 무연탄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투입산출 주기가 짧으며 상호 해산도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작방식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무역의 한 형태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상무역형태의 투자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며 본격적인 투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상호 신용관 잘 지키면 현재 북한 상황에 맞는 경제합작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중국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대북투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의 중국방문 기간에 북·중간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주의를 끈 바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

식으로 대북투자문제를 접근하는 새로운 양식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정부 차원의 대북투자로 북한의 남포시에 유리공장을 세우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중국 국무원 우의 부총리가 방북하여 남포친선유리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공장은 중국정부가 2,400만 달러 정도를 무상 투자하여 중국의 설비와 기술, 기술자들의 지원하에 건설되었으며, 연간 생산규모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린성정부는 북한의 나진과 훈춘을 연결하는 도로공사에 투자하는 대신 나진항 제3부두를 임차한다는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북3성, 특히 지린성은 바다와 잇달아 있지 않아 교통운송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맺은 계약이 성사된다면 지린성의 동해 진출이 대단히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적 연계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 외에도 랴오닝성정부 차원에서 압록강 철교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와 도로교량을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증대하는 데 대비하는 목적도 있지만, 장차 한국과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대북한 지원을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 지원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1950년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김일성의 중국방문 때 대규모 경제지원이 있었고 1980년대와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에 소원해졌던 북·중 경제관계는 수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중간 무역은 급신장을 보여 현재는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투자도 제1위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지원에 바탕을 둔 북·중간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다. 즉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개입이 증대됨에 따라 북한경제의 위기 속에서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그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대북원조의 추이를 보면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지원이 줄어들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늘어나고, 반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늘어나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액상으로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큰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상원조가 두 국가 고위층의 상대국 방문의 경우 북한에 선물 형식으로 주어지는 등 비정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3절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해 보았다. 무역특화지수는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지수로 사용될 수 있는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무역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를 근거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1998~2004년 기간 북한의 대중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보면, 2004년도 대중국 수출특화품목이 15개로서, 1998년 13개, 1999년 9개에 비해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입특화품목은 2004년에 78개로서, 1998년 81개, 1999년 86개에 비해 약간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약간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워낙 미미한 차이로서 확실한 경쟁력 증대로는 보기 힘들다.

둘째, 동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특화품목(1998~2004년 평균)은 HS 96개 품목 중에서 어패류 0.89, 철강 0.02, 금속광물 0.57, 아연 0.30, 목재 0.85 등 12개 품목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중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인 품목은 어패류, 금속광물, 목재, 견, 골동품 등 5개 품목에 불과하다. 즉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중국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중국 수입특화품목(1998~2004년 평균)은 84개로 수출특화품목 12개의 7배에 달하며 이들 중 무역특화지수가 -0.5 이하인 품목의 수는 71개에 달한다. 특히 무역특화지수가 -0.9 이하인 품목이 50개로서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4절에서는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6~2003 연간 시계열 데이터(time series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의 기본모형으로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import-augmented production function)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과의 교역이 1% 증가하면 북한의 전체 교역은 0.485%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약 0.112%, 소득은 약 0.19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2004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중국의 교역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인해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추정치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경제의 내부적인 작동에 있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통상적

인 경우라면 국민경제 재생산구조 혹은 국민경제 순환구조와 대외무역,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국민경제의 재생산구조가 상당 부분 붕괴된 상태이다. 사실 국민경제라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분절화,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접근방식은 주로 미시적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특히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고찰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 즉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02년 7월의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이후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계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관찰이지만, 연구대상의 특성상 참여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중 경제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연계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적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중국 단둥, 선양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다. 중국의 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북·중 무역에 관계하고 있는 조선족 및 한족 기업인, 화교, 남한 기업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북·중경제관계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체제는 대단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통계적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북한 내부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분석에 의하면 산업생산, 상품유통, 서비스 및 운송, 금융 등 북한내 제반 경제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나타난 북·중 경제관계의 실태분석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편중현상은 구조적으로 고착화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다른 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불안정하다. 3장 1절에서 보듯이, 이것은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십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보였다. 북한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대중 적자현상은 북한의 산업구조가 수출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적 산업구조인데다가 경제난이 심각하여 수출보다는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주로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저부가가치의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입품목은 산업 원자재와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 2절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 산업원자재는 내수용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수출품목개선은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렵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 품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나 산업이 적어서 북·중 무역의 고급화는 상당기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중 경제협력은 유리한 거래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장과 3장의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북·중 경제관계에서 유리한 환경은 △북한과 중국은 유일한 우호적 접경국가이며 △양국 모두 정치, 안보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으며 △접경국가에 걸맞는 각이한 우대적 제도(변경무역 제도, 세금 및 관세우대, 통행, 통관, 통신, 물류 등)를 가지고 있으며 △접경지역으로 인한 거래코스트가 낮고 △많은 부분에서 상호 보충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개인이 모두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환경은 북한 중앙당국의 지나친 대외무역권한의 집중과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의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양국이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경제협력을 하면서도 기대만큼 양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절대적인 대외무역규모가 적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투자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1억 7,350만 달러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지만, 투자 추이상 나타나는 중국의 대북투자는 기복이 대단히 심하다. 이것은 같은 기간 무역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상이한 현상이다. 예컨대 2003년에 중국의 대북투자가 130만 달러에 불과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에 보여지는 영세성은 △규모의 영세성 △투자업종의 영세성 △투자방식의 영세성 △투자관리의 영세성 △투자회수 방식의 영세성 등에서 잘 나타난다. 중국의 대북한 투자가 영세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규모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원인은 중국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북한 채무를 받아내려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즉 현물로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돈이 되는 자원이나 산업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생산물을 가져가려는 전략이다.

여섯째, 중국의 대북지원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음적이며 기복이 있다. 중국의 대북지원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이 사실이며, 북한의 산업 각 부문에 중국의 지원으로 개발된 시설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지원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대북지원이 전략적인 점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상반되게 규모와 시기가 정해지는 패턴을 보이며 △자국의 정치, 외교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양국, 특히 최고 지도자의 관계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받으며 △국제정치적 현안과 적절히 연계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외형상 나타나는 의존도 심화보다는 내부적

으로 고착화되는 의존도 심화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4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미치는 중국 상품들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공식 생필품 수입물량은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에 공급할 만한 물량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또 다른 공급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앞서서 지적했듯이 비공개 지원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소위 변경지역에서 가장 흔히 행하고 있는 보따리 무역일 수도 있다. 보따리 무역은 1990년대 전기간 북·중교역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었다. 북한 주재 화교, 방중 북한 주민, 방북 여행객, 친척 방문객 등에 의해 주로 일어나는 보따리 무역은 가장 많을 경우, 전체 변경무역의 절반 정도일 때도 있었다는 현지 세관의 주장도 있다. 그리고 보따리 무역의 대부분은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의 주장이다.

본 보고서가 연구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는 북·중 경제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비중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지만,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적인 의존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존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시기에 따라, 대외정책에 따라, 국제환경에 따라 그 대상이 변화하였으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주변국과 한국의 대북경제정책 여하에 따라 향후 북한의 의존대상국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대남 의존도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밀접화는 제도와 행정적 규정의 유리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분산시키려면 북·중경제

관계에 적용되는 교역제도나 규정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정으로 북한과의 경협에 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만일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사항들이 풀리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경쟁력 있는 제도구축을 통해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문제를 남북경협 확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북·중 경제관계의 밀접성은 다양한 물리적 연계인프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중 연계 인프라보다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남북연계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중 무역은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각이한 형태의 물리적 연계 인프라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양국 무역관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중간에는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다양한 연계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중국과의 무역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한도 서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만큼 북·중 사이의 연계 인프라보다 더 크고 효율적이며 기동적인 연계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편중현상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교역 통로를 개발해야 한다. 북·중 무역은 접경지역에 10개 이상의 무역 통상구를 설치하고 물자의 통관과 검역, 사람의 통행을 비교적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이 통상구들은 접경지역의 각 성과 지역의 기업, 사람들에게 북한과의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통로들은 북·중 무역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도 인접지역에 다양한 통상구를 설치하여 지역마다 남북교역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 경협에서 다양한 거래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북·중간에는 일반무역과 함께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보따리 무역 등 다양한 거래형

태가 존재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북·중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변경무역에서 보따리 무역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무역형태가 북·중 무역에 이바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섯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남북경협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참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을 넓혀 주어야 한다. 북·중 경제관계에서 접경지역인 동북3성 지방정부의 참여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동북지역 지방정부는 각자 북한과의 경협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현실성 있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도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기업 및 개인의 남북경협 참여도를 높여주기 위한 제도 구축이나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곱째, 북·중 경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경협은 투자의 선점으로 나가야 한다. 물론, 북핵문제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황에 맞춰 대북 투자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해야 하겠지만, 대북 투자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크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5장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에 비하여 우리의 대북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제시되었다.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새로운 물류, 통행, 통신, 통관체계의 확립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남북한 산업 의존성 확대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의 활용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등이 대응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현재 북·중간 경제적 연계의 환경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제

도적,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활용하거나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관계를 남북경협관계의 확대로 해결하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합리적 협력자세를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유도해내지 않고서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대중 의존 현상을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차 례

서언	5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35
1. 문제제기	36
2. 연구의 범위	38
3. 연구의 전제	39
4. 연구의 방법	43
제2장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	45
1.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	46
가. 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변화	47
나. 동북아의 정세변화	49
다. 양국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	50
라. 양국의 경제력 수준	52
마.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가	53
바. 지도자간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의 쇠퇴	55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	56
가. 대중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56
나. 새로운 대중국 경제정책	62
3.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64

가. 대북한 인식변화	64
나. 대북한 경제정책	66

제3장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71

1.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72
2.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77
가. 무역	77
나. 투자	109
다. 원조	119
3.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평가	125
4. 양국간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132
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132
나. 대외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135
다. 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137

제4장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139

1. 생산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140
가. 공장의 원자재, 설비 조달	140
나. 군수공장의 기계·설비 조달	145
다. 개인수공업의 원자재·설비 조달	147
2. 상품유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152
가. 북한내 유통망과 중국상품 유입	152
나. 화교 및 중국자본과 상품유통	166
3. 서비스·수송 분야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170
가. 소규모 서비스업체의 확대와 중국상품 유입	170
나. 수송 분야	171

4. 금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172
가. 화교와 사금융	172
나. 상품수출 조건부 금융	175
제5장 한국의 대응과제	177
1. 북·중 경제전망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178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184
3.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189
가. 긍정적 측면	189
나. 부정적 측면	193
4. 정책적 대응과제	198
가.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	200
나.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203
다. 새로운 물류·통행·통신·통관체계 확립	205
라.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207
마. 남북한 산업의존성 확대	210
바.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 활용	211
사. 남·북·중 3각협력 추진	212
제6장 결론	217
참고문헌	221
부록: 북·중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225
Executive Summary	247



표 차례

표 3-1.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73
표 3-2. 북한의 GNI 대비 무역비중	73
표 3-3. 북한의 주요 거시경제 추이(1990~2004년)	74
표 3-4. 북한의 무역의존도 추이(1985~2004년)	75
표 3-5. 베트남의 GDP 대비 무역비중	76
표 3-6. 중국의 GDP 대비 무역비중	76
표 3-7. 북·중간 무역추이	78
표 3-8. 북한의 주요국별 교역실적	81
표 3-9. 대중국 수출 상위품목	87
표 3-10. 대중국 수입 상위품목	89
표 3-11. 북한의 대중국 석탄·석유류 수입 현황	89
표 3-12. KEDO의 대북 중유지원 현황	91
표 3-13. 한국정부 차원의 대북 비료지원 추이	100
표 3-14. 북·중 무역과 변경무역 현황(1997~2003년 기준)	101
표 3-15. 북·중 변경무역을 담당하는 주요세관 현황(2003년 기준)	102
표 3-16. 무역형태별 대중 수출 추이	104
표 3-17. 무역형태별 대중 수입 추이	106
표 3-18.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출품 (HS 2단위)	107
표 3-19. 변경무역을 통한 주요 대중 수출품목(HS 6단위)	107
표 3-20.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입품목(HS 2단위)	108
표 3-21. 변경무역을 통한 주요 대중 수입품목(HS 6단위)	109

표 3-22. 북경조화우련문화교류유한공사의 북한 투자대상산업 목록	110
표 3-23.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112
표 3-24. 중국의 대북한 원조 추이	124
표 3-25. 국가별 정부 차원 대북 지원액 비교(1995. 6~2004. 7)	124
표 3-26. 연도별 최대 식량공급국가 및 전체 도입량에서의 비중	125
표 3-27.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126
표 3-28.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상품 무역특화지수	127
표 4-1. 7·1조치 이후 기업의 원자재·설비 조달방식	141
표 4-2. 기업의 중국산 원자재·설비 조달방식	142
표 4-3. 시장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설비 중 중국산 비율	142
표 4-4. 개인의 중국산 원자재·설비 수입 증가	148
표 4-5. 기존 농민시장에 대한 제품공급 루트	153
표 4-6. 시장판매 공산품 중 밀수품의 비율	154
표 4-7. 시장판매 공산품 중 절취·유출 물자 비율	155
표 4-8. 시장유통 제품 중 중국산 비율	156
표 4-9. 시장유통 식량 중 중국산 비율	157
표 4-10. 국경·비국경지역간 중국산 물품의 비중 차이	158
표 4-11. 7·1조치 이후 상행위 종사자 증가율	159
표 4-12. 7·1조치 이후 시장유입상품량 증가율	159
표 4-13. 7·1조치 이후 시장유통량 최대증가 품목	160
표 4-14. 국영상점의 수매상점 전환비율	164
표 4-15. 수매상점 판매상품 중 중국산 비중	164
표 4-16. 국경·비국경 지역의 수매상점 차이	165
표 4-17. 사실상의 화교장악 수매상점 비중	167
표 4-18. 화교도매상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 비중	167

표 4-19. 소규모 서비스업체 설비의 중국산 비중	171
표 4-20. 돈주 중 화교의 비중	173
표 4-21. 사채업자 중 화교의 비중	174
표 4-22. 공장·기업소에 대한 화교의 자금대여	175
표 5-1. 반입금지품목	202
표 5-2. 반출금지품목	203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의 GDP, 재정지출 및 국방비 증가율 비교	53
그림 3-1. 북한의 국내총생산과 수출입 추이	74
그림 3-2. 북한의 국가별 교역비중(2004년)	80
그림 3-3.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	86
그림 3-4. 북한의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88
그림 3-5. 북한의 광물성 생산물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90
그림 3-6. 북한의 식료품 생산물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91
그림 3-7. 북한의 식물성 생산물(식량포함) 중 중국의 비중(2004년)	92
그림 3-8. 북한의 섬유제품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93
그림 3-9. 북한의 대중국 섬유원료 수입 현황	93
그림 3-10.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현황	94
그림 3-11. 북한의 전자·기계류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95
그림 3-12. 북한의 기계, 전기·전자제품 수입 국가별 비중(2004년)	96

그림 3-13. 북한의 비금속류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96
그림 3-14. 북한의 대중국 철강 수입 현황	97
그림 3-15. 북한의 비금속류 수입 국가별 비중(2004년)	98
그림 3-16. 북한의 화공제품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99
그림 3-17. 북한의 대중국 주요 화공제품 수입액 추이	99
그림 3-18. 북·중 변경무역 추이	101
그림 3-19. 무역형태별 대중 수출비중	105
그림 3-20. 무역형태별 대중 수입비중	106
그림 4-1.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개인수공업의 의류 생산·유통과정	149
그림 4-2.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개인수공업의 사탕 생산·유통과정	150
그림 4-3.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개인수공업의 담배 생산·유통과정	151
그림 4-4.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개인수공업의 병과류 생산·유통과정	152
그림 4-5. 중국산 소비재 유통과정	169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범위

3. 연구의 전제

4. 연구의 방법

1. 문제의 제기

과거 이념과 제도, 정치와 안보의 이익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서서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북·중 관계에서는 이념과 불록이 우선적 고려대상이었다면, 현재의 관계에서는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실리가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북·중 경제관계에서는 과거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거래제도나 거래의식, 거래방식과 결제방식에서 과거의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

북·중 경제관계의 근본 틀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는 북·중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북 및 대중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을 목표로 남북 경제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동시에 남북통일 이전 과정에서도 북한과 타국과의 경제관계가 남북한 경제통합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우리의 경제통합에 불리하게 작용되도록 방지할 수는 없다.

우리는 남북한 경제통합 이전에 불합리하게 형성될 수도 있는 북·중 관계, 특히 경제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북·중 경제관계를 남북 경제통합과 통일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 및 남북관계라는 양자간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중 3각관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북·중 관계의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북·중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북 및 대중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지금까지 북·중 경제관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정치적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경제관계는 꾸준히 확대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무역과 투자, 지원 등 경제 전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 있어 중국은 제1위의 교역상대국 지위를 15년 넘게 유지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투자에 있어서도 선두에 올라서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급격히 발전하는 현상은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일정한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급격한 발전과정이 자칫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북한경제의 애속화를 구조적으로 고착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걱정하게 된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무역이나 투자도 중국이 제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북한의 전략적 지하자원에도 중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나타나게 될 부작용이다. 경제적 의존도 심화가 정치적 의존도 심화를 초래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통일경제 추구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경제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 국가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이 받게 될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가에 대한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역 및 투자 의존도,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의존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 정도,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최근 중국이 대북 투자와 교역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북한의 소비시장에는 이미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이 광물, 에너지 등 북한의 전략적 자원 부문에까지 진출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보면서 사회 일부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북한경제가 중국의 예속경제, 중국의 동북 4성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간다면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중국의 예속경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경제를 민족경제의 한 부분으로 보면서 남북 경제통합이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여기에서 핵심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해답을 찾고자 착수된 연구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결정짓는 양국간 정치관계의 기초를 역사적으로 접근 분석하였다. 북·중 경제관계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양국의 정치적 및 전략적 이해관계와 역사적 친분관계에 의해 수준과 실천이 이루어져 왔다.

둘째,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전개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및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하였다. 여기에서는 북·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 의존도 등이 분석되었다. 현재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정치적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넷째, 현재 북한의 대중국 의존 현상은 교역과 투자, 지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생산, 유통, 서비스, 운송, 소비생활 등 전 경제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충분한 자료나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 심화현상을 대략적이지만 광범위하게 연구·분석하기 위해 북한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대중국 의존도 수준을 설문방식을 통해 조사·연구하였다.

다섯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측화 정책으로 정립되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방적 지원 혹은 거래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 차원의 방안을 연구·제시하고 있다.

3. 연구의 전제

북한 연구에 있어 누구나 겪는 애로는 자료부족과 현장조사의 불가능이라고 본다. 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있긴 하지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분산되어 있고, 기관마다 통계자료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이 발표하는 통

계자료가 거의 없어 외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체의 신뢰도가 항상 논쟁거리가 된다. 특히 북한이 폐쇄사회이다 보니 통계자료나 선행연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 제기되는 이러한 본질적 문제가 당장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남북통일을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면서 그 준비를 꾸준히 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한에 관한 연구를 중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연구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좀더 다양한 노력을 했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될수록 중국과 국내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발표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발표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노력을 했다. 현재까지 보고서에서 이용한 국내외 발표자료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만한 자료, 특히 북한의 발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둘째, 북·중 경협에 관한 현장 정보나 자료는 국가기관보다는 현지 기관이나 언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나 자료를 활용하였다. 단,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신뢰도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될수록 현장 확인을 하려고 하였다.

셋째, 연구의 대상기간을 최근까지의 경제관계 변화에 맞추면서도 분석에 있어서는 1990년대와의 비교를 통해 논리전개를 하였다. ‘최근까지의 경제관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역 통계자료는 2005년 6월까지를 의미하며 △투자관련 자료는 8월까지로 한정하며 △기타는 11월 중순까지 발표된 일부 자료도 활용하였다.

넷째, 중국의 대북한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보다는 기본적인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흐름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주로 북·

중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에 한정하였다. 북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정량적 평가를 하자면 북한의 산업생산 전반에 대한 수많은 시계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앞서 지적한 애로를 다소 해소하기 위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향평가대상 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북한의 산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의 대중 수입의존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영향 정도를 보충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부자재 수입물자가 대부분 주요 산업생산의 가동을 위한 재료로 쓰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입 원부자재가 최종 소비재로 쓰일 수도 있고, 중간재로도 쓰일 수 있으며, 일부는 국내소비 없이 수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원자재가 대부분 국내 산업생산에 쓰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수입원자재 분석을 기초로 산업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여섯째, 자료부족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관계에 관한 통계만으로 그 의존도를 정상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조사 방법으로 북한 내부의 대중국 의존 상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고,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 대략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국 의존 현상을 그들만큼 아는 집단이나 기관 및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의미나 신뢰도가 대단히 낮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처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도 하였다.

일곱째, 현재의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균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어떠한가에 따라 긍정적 측면을 부정적 측면으로, 혹은 부정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보편타당한 경제적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함에 있어 연구자의 객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 생각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오랜 연구과정에서 연구자 나름대로 인식된 입장이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될수록 객관성을 보장하되, 주관적 입장은 연구자의 생각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여덟째,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정확한 현실 파악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대응과제를 발굴함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측면과 함께 전술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단기적인 실천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대응과제는 북한과 중국이라는 두 대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함도 요구된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현상에 대응하는 방안은 북한을 보는 상이한 성향의 사람과 집단에 의해 서로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다. 이는 구체적 대안 제시를 함에 있어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경제제재 유도를 통하여 북·중 경제관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등 다양한 선택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재 방법과 협력확대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평가하여 그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 중

한 가지만 선택하고 그 전제하에서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의 문헌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였다. 기존의 국내 및 해외 문헌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청, 통일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에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코트라, 무역협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통계도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국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뿐만 아니라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성 등 동북3성의 신문과 중국의 통계기관 및 세무기관의 자료도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내부 접근적인 조사방법을 시도하였다. 북한체제는 대단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통계적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의 산업생산과 유통, 운송과 자금조달 등에서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5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대중국 의존도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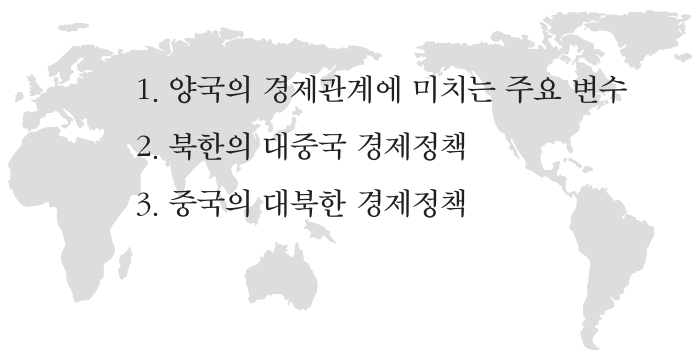
본 연구를 위해 10여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였으며 2차례 이상의 심의회의를 거치면서 연구의 방향과 범위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고 수정·보충하였다.

또한 본 연구진은 선양, 단둥의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기업관계자들에 대한 면담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경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역과 거래방식에 대

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3차례의 연구심의회를 개최, 심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

제2장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



1.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
3.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1.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

탈냉전 이후 북·중 관계는 변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이 변화는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 본질적 변화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질적 변화란 과거 냉전시대에 이념과 동맹을 기준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 국제경제관계의 보편적 질서에 맞추어 나가는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본질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대북한 경제정책에 영향을 주고,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이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의 전반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대북한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변화된 대북정책을 구사한다고 하지만,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거래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상대이며, 특히 중요한 점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안정을 바라는 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이 변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요구에 맞춰나가지 않으면 북한 경제에 더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는 양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외요소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나아가 전반적 대외정책과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양국의 상호 정책에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동북아의 안보구도 변화 △각국의 발전전략 변화 △국내 권력관계의 변화 △자국의 경제력 수준 △한국과의 상호이해관계 증가 △국가지도자의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 수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변수들은 상호 결합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책방향과 정책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며, 그 정책은 시기마다 결과가 점검되면서 재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북·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변수는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핵심적인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한정하여 설명하려 한다.

가. 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변화

북·중 경제관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양국이 지향하는 경제발전전략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은 국내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소득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빠른 기한 내에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이고, 이를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외경제관계에서도 이념과 동맹을 기초로 관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중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솔직하면서도 현실성 있게 관계의 수준을 정해간다는 것이다. 즉 내적 및 외적 역량을 모두 자국의 경제력 향상에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 요체다.

한편 북한의 경제정책은 단기와 장기전략이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외부의 도움을 최대한 유인하여 당장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강성대국’¹⁾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 목표는 차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북한의 경제전략이 상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개발전략에 따라 외부지원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형편이지만, 경제난이 극심한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발전전략의 차이로 인해 1990년대 전 기간 양국 경제관계는 다양한 지리적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정치관계에까지 영향을

1) 북한은 ‘강성대국’의 내용으로 정치대국, 군사대국, 경제대국을 내세웠다.

미쳤다. 사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1978년 제11차 3중전회에서 1979년부터 당의 공작 중심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고 선언하였다.²⁾ 이러한 정책의 변경은 이념이나 군사·안보적 시각 위주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보다 실리적인 기준에서 국제관계와 양자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 중심의 대외정책에 의한 대북정책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현실로 나타난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제도 폐지, 경화결제 요구 및 우호가격제 축소로 나타나며, 다른 하나는 과거 정치·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있던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경제적 실리창출을 중심으로 선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실리주의적 대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의해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국제시장 상품가격에 준하는 지급을 경화로 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예컨대 1993년 약 9억 달러였던 북·중간 교역규모가 경화결제 시스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 3억 7천만 달러까지 위축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북아 국제정세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이에 맞서 중국은 경제이익중심적 대북정책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안보중심적 대북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안보중심적 대북정책은 과거와 같이 대북 지원과 교역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교역의 증가는 과거 경제거래제도의 부분적 부활을 동반하게 된다. 과거의 우호적 거래제도를 부활시키지 않고는 북·중 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없고, 북·중 경제관계가 확대되지 않으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도 커지기 힘들기 때문

2) 薄一派, 面睨世紀潮(北京: 國家行政學院 出版社, 1999), p. 1821 참조.

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전략적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가 다시 급속히 확대되는 현상을 일면적으로 보면, 북한을 지렛대로 중국의 대외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의도의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도 결국은 한반도 안정을 통해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나. 동북아의 정세변화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다. 이 지역의 정세변화에 따라 양국 당국은 자국의 정책과 대외정책을 기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정세변화는 냉전체제 붕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원래 소련과 대결상태였고, 이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정세와 질서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상반된 위치에 있었다. 소련 붕괴 직전에도 소련과의 정치·경제적 유대가 지속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반개혁적·반개방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이 동북아에 새롭게 형성된 국제경제질서에 적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냉전체제 해체로 인한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는 각국이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대외정책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동북아 정세변화 속에서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과거의 대외경제적 부담을 될수록 축소하고 외부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자국으로 유인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동북아에서 나타난 대표적 사례가 중국과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 및

경제관계 확대이고, 미국·일본 등 서방과의 적극적 경제관계 확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정세변화 속에서도 개혁과 개방을 외면한 채 소련을 대신하는 중국의 역할을 배가시키려는 방향으로 대외관계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은 이미 자국의 경제이익을 최우선 국가전략과 제로 정책전환을 한 상태이고 이를 위해 대외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상태였다. 소련의 붕괴,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경제난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정세변화에 현실적이고 기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북한의 경제난인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북한의 지위도 변화할 수 있다. 중국이 냉전체제 이후 줄곧 경제성장전략에 부합하는 대외경제 정책을 구사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 동북아 정세를 전제할 때만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특히 부시행정부 집권 이후 중국위협론이 제기되면서 동북아 정세는 또다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위협론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시기에 북한 핵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북한의 지정학적 지위가 다시 중요성을 띠고 있다. 즉 동북아 정세변화가 중국의 대북한 정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경제협력 확대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대중국 정책인 것이다.

다. 양국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

북한과 중국의 권력체계 변화는 북·중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다. 양국 모두 일당독재체제이고 이런 체제에서 권력자들의 정책결정권은 절대적이기 때

문이다. 물론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확대해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고 정치에 있어서,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서 집권권력의 영향력은 아직도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15년 사이 중국과 북한에서는 커다란 권력구조 변화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덩샤오핑 체제에서 장쩌민 체제로, 이는 다시 후진타오 체제로 이행되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로 권력구조가 바뀌었다. 권력이 지향하는 기본 목표는 바뀌지 않았지만, 권력자들의 성향과 행동패턴은 각기 다르다. 권력자들의 성향에 따라 국내정치는 물론 대외정책에서도, 외형적인 형태변화는 없지만,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가 지도자가 바뀌므로써 과거에 형성되었던 친밀감 저하, 혈맹의식 쇠퇴, 과거 지도자와 차별되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형성 등 수많은 요소가 변한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권력구조가 바뀌면서 혈연적이었던 북·중 관계가 점점 실리추구적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다. 최고지도자가 바뀌면서 동시에 지도부가 바뀌고, 대외관리 방식과 체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정책도 바뀌게 된다. 과거에는 중국의 권력구조가 바뀔 때마다 국가 최고지도자의 대외순방을 북한부터 시작하곤 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 북·중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중국에 있어 북한의 특수한 지위를 이해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화궈펑, 후야오방, 자오쯔양 총서기 등 역대 국가지도자들이 이 전통을 지켜왔다. 그러나 장쩌민 총서기 이후 후진타오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전통적 유대관계는 사라졌다. 그러나 양국 권력자간 친분 정도는 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양국관계, 특히 경제관계 수준이 결정되는 특성은 아직도 유효한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한 단계 도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라. 양국의 경제력 수준

북한이 경제적으로 질적 성장을 지속한다면 현재의 대중의존도 심화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은 적극적인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북한이 경제난을 겪도록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이 여유가 있다면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북한의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더 신속하게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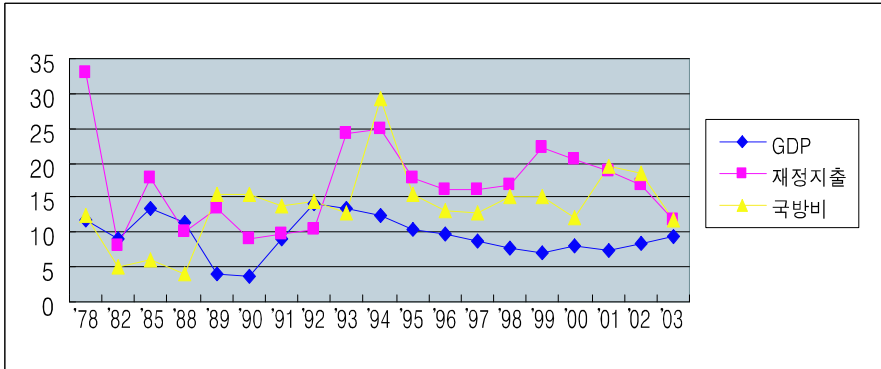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와 시장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중국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21세기 들어 북핵위기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식량과 에너지에서 중국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정부간 원조, 정부 보조를 바탕으로 한 국경무역, 개별적인 구상무역 등의 방법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중국의 지원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은 아니다. 북한이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내적인 경제개혁을 시도하려면 보다 광범위하고 막대한 양의 경제지원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인다. 중국 역시 체제 전환기의 상황에서 각 행정단위가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³⁾ 더구나 2002년 현재 중국내에는 약 1억 4천만 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고 있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확충되어 있지 않다.

그림 2-1. 중국의 GDP, 재정지출 및 국방비 증가율 비교

(단위: %)



자료: 中華人民共和國 統計局 編, 『2004 中國統計年鑑』(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4), pp. 55, 291, 293.

국내 정치적 제약요인은 중국으로 하여금 과도한 대북원조를 억제하게 한다. 이러한 제약은 아울러 중국이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미국과의 갈등을 전제하면서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마.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항상 정치적 동반자이자 경제적 지원자·협조자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안보적 이해관계가 있고 경제성장전략의 이해관계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안보적 전략은 경제성장의 환경을 만들고, 경제성장은 국민경제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길이

3) 김홍규, 「중국의 신군사전략 및 군사력 변화와 지역안보」, 외교안보연구원 국제문제 분석(2005. 9. 7) 참조.

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하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상대라면 어느 누구와도 협력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협력의 대상이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라면 경계하고 외면한다는 입장이다. 즉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 및 안보적 이익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입장차이는 한반도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접촉을 시작으로 1980년대부터는 점차 스포츠, 문화, 학술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였고, 1992년에는 급기야 한·중 수교를 맺었다. 남한과 군사적 대결, 체제경쟁을 하는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사건이었다.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3의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적 교류 면에서도 2004년 현재 한·중 상호 방문자 수는 280만명으로 한·미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03년부터는 경제 및 인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양국간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수준인 것이다.⁴⁾

중국은 1992년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수교관계를 체결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미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중국의 당시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 변수’에 의해 설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점차 강화되는 한·중간 상호의존관계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형성시 ‘한국 변수’가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변수가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여지는 충분하다.

4) 한·중간 군사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김태호, 「한·중관계 11년과 미래」, pp. 72~78 참조.

바. 지도자간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의 쇠퇴

북·중 지도자간 인간적 유대와 신뢰관계는 양국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의 하나다.⁵⁾ 덩샤오핑 등 개혁 초기의 원로 지도자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위시한 항일혁명세대와 오랫동안 인간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고, 이는 유사시 상호 신뢰와 지지의 기반이었다.

하지만 장쩌민 주석 이후 중국 지도자와 북한 지도자 사이에 전통적인 인적 유대관계는 약화되었고, 전략적 합리성에 기초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보다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입각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판단기준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정일은 아직도 이데올로기적 사고와 사회주의적 원리·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2004년 김정일의 방중시 후진타오가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들과 김정일과의 교감을 시도한 것도 약화된 인적 유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북·중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던 지도자간 인적 유대는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가 양국을 연결해 주는 주요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5) 따라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Chen Jian, "Limits of the Lips and Teeth Alliance," *Asia Program Special Report* No. 115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September 2003), pp. 10참조.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

가. 대중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1) 대외경제정책 기초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기초는, 첫째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원칙하에서 진행된다는 것, 둘째 모든 대외경제행위를 정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관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 셋째 평등·호혜의 원칙과 유무상통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 넷째 선후차에 있어 사회주의 국가와의 거래를 기본으로 하면서 우호적 자본주의 국가와의 거래를 적절히 배합한다는 것, 다섯째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해 투쟁하는 나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은 대외교역을 자국내 교역의 연장선상에서 다루며, 중앙정부의 사전계획에 의해 결정되고 계획되지 않은 교역은 계획미달과 정치적 이유에 의해 보충적으로 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대외무역의 기본특징은, 첫째 국내에 필요한 원자재 및 생산재는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자급하고, 둘째 일단 계획에 반영된 교역품목에 한해서는 시장가격과 환율 등 가격기구가 무시되며, 셋째 국내에 없거나 적은 물품의 교역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교역의 다양성과 폭이 대단히 작고, 넷째 독점적 무역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무역기관들의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국내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대외경제정책도 정치성이 상위의 개념으로 철저히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간 정치관계를 핵심으로 하여 행해진 수십 년간의 대외경제정책들, 집권자의 권위 유지와 상대

국 수반과의 친분 유지의 명목으로 행해진 수많은 비현실적인 지원과 교역 등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서 경제성보다는 정치성이 우선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1970년대 대중국 경제정책

1970년대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처음으로 중국과 소련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1960년대 30%대에서 20%대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산업설비의 수입 감소가 뚜렷이 나타났다.⁶⁾

1970년대 이전 북한의 대외교역은 90% 이상이 사회주의 국가와의 거래였지만, 1970년 이후부터는 대외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기 시작 하였다. 교역상대국이 사회주의국가 편중에서 20여개 서방국가로 확대되어 1970년대 79%에 이르던 사회주의권과의 교역비중이 1973년에 79%에서 1975년에는 60% 미만으로 떨어졌다. 특히 1970년대 초반 북한은 프랑스, 일본 등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자본과 장비를 도입하여 화학·건재 공업을 현대화하기도 하였다⁷⁾.

그러나 1975년 이후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이던 연, 아연, 동 등 비철금속의 국제가격이 급락한 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설비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교역여건이 악화되고, 외채가 늘어나게 되어 결국은 서방으로부터 수입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 북한의 대서방 교역은 급격히 줄어들고 다시 사회주의권과 교역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자체의 대외무역체제를 재정비하면서 무역증대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 ‘무역제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

6)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p. 17.

7) 앞의 책, p. 17.

우면서 다양한 무역확대정책을 구사하기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197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변천의 배경에는, 첫째 소련과 중국의 분쟁 지속으로부터 산생된 양국의 지원 절감, 둘째 독자적 노선 채택과 집행의 구체적 행동으로서의 서방경제관계 확대, 셋째 발전된 서방 자본주의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넷째 남북한 경쟁관계에 있어서 서방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외교력 확대 등이 있다.⁸⁾

3) 1980년대 대중국 경제정책

중국이 사회주의 개혁을 본격화하던 1980년대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역사상 가장 저조한 시기로서 1979년 전체 교역량의 22%를 차지하던 북한의 대중국 교역량이 1989년에는 12.3%로 급감하였다.

북한에서 무역을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처음 제기한 것은 1980년이다. 당시 김일성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가 수입 원료·자재인데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려면 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를 지켜야 하며, 신용제일주의를 지키자면 수출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⁹⁾. 아울러 무역에서 다양화와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수출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1980년 10월에는 우호적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재천명하고 서방으로부터 자본재를 적극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과도한 수입증대로 1981년 다시 외채문제에 봉착하면서 무역규모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북한은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해 1985년 김일성이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하고 북·소 및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기에 이른다. 이를

8) 앞의 책 p. 18.

9) 앞의 책 p. 18.

계기로 여러 가지 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고 협력과 원조가 증가하면서 북한의 무역규모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소련은 1980년대 말까지 북한 수출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교역상대국으로 다시 부상하기에 이른다.

1980년대는 북한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무역확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 시기였다.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중계무역, 가공무역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개발도상국과의 남남협조를 강조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최초로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여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조총련을 비롯한 해외 상공인에게 대북투자를 촉구하기도 했다¹⁰⁾.

1980년대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특징은, 첫째 1970년대 시작된 대서방 교역확대에서 다시 사회주의권 교역확대로 회귀했고, 둘째 서방과의 교역으로 생성된 외채 상환능력 부재를 해외자본 투자로 대체해 보려고 최초 시도했으며, 셋째 이러한 정책들이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정책의 직접적인 영향하에서 독자적 정책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들이라는 것이다¹¹⁾. 그러나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열악한 투자환경, 실효성 있는 정책부재, 통신·금융제도 미비, 법규 미비 등의 요인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80년대 초 중반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북한 당국은 중국의 개혁성공을 배우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984년 김정일의 중국방문 이후, 북한의 경제 장·차관급들이 대거 중국을 방문하여 개혁현장을 경험했으며, 중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후, 8.3 인민소비품생산정책, 합영·합작정책 등 일련의 가시적인 경제정책들을 발표하게 된다.

10) 앞의 책 p. 19.

11)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 19.

4) 1990년대 대중국 경제정책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변화시키는데서 1990년대 초에 나타난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결정적 원인을 제고하였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붕괴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맺었던 쌍무적 경제협정들이 파기되고 이는 곧바로 북한의 전반적 산업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북한 전체 교역의 72% 이상이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변화는 북한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동구사회주의권 붕괴를 시점으로 북한의 대외교역에서는 교역형태 및 결제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1년부터 동구권은 북한과의 청산결제방식을 폐지하고 경화결제방식으로 이행하였으며 구소련은 1991년 1월부터 부분적 경화결제를 시작하다가 1992년부터는 전면적인 경화결제로 넘어갔다¹²⁾. 중국도 1993년부터 종래의 구상무역에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변경무역의 경우에만 물물교환에 의한 교역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화결제 능력이 없고 구상무역 중심의 무역관행으로 일관하던 북한의 대외교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외경제관계를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발생한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북한은 일련의 변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취하였다. 첫째, 경제특구 설립을 통한 투자유치정책이다.

북한은 1991년 7월 나진·선봉지구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조성하는 한편, 여러 가지 관련 법·규정을 준비하여 1991년 12월 정식 선포하였다. 북한의 나진·선봉지대 형성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는 △중계운송 거점 육성 △수출가공지역 육성 △관광 및 종합금융지역 육성 등이다¹³⁾.

12) 앞의 책 p. 20.

13)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p. 19.

그리고 경제특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은 △투자유치에 유리한 경쟁력 있는 관련 법·규정 마련 △경제특구의 유리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유치 권고 △사안별 특혜 배려 △지대내 기술 및 노동인력 양성 및 보장 △지대와 타지역간의 물리적 분리 △행정관리체계의 정비 △지대 내에서의 시장기능 형성 등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둘째, 무역제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확립이다. 1990년대의 무역제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970년대, 1980년대에 사회주의국가나 일부 특정 서방국가를 향한 무역제일주의가 아니라 그 대상에 관계없이 수출지향적이고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려는 무역우선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셋째, 새로운 무역체제 확립이다. 북한은 1992년 11월 △외화획득의 증진 △대외무역확대를 통한 국내생산의 정상화 △원부자재, 기술 자체 해결 △생산과 무역의 유기적 결합 △수출입 관리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신무역관리체계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무역, 되거리무역(덤핑), 변경무역을 활성화하여 무역을 보다 다양화하고 합영·합작·개인투자 등을 통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대규모 수출품 생산기지를 구축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신무역체제하에서 무역성 산하의 무역기관들이 중앙부처의 무역회사로 대거 편입되고 대외경제위원회의 무역상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외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부 공업기업소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대외무역까지 직접 수행하게 되었으며 교역의 일부 수입을 자체 생산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은 무역거래의 지방분산화로서 지방정부와 무역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출물자 확보와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생산적 부문만이 아니라 비생산적 부문들, 예를 들면 당, 군, 문화예술, 체육부문 등까지도 자체의 무역회사들을 가지고 독자적인 무

역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 무역자유화로 인해 북한의 기관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유리한 중국과의 무역에 대거 참여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 무역량을 늘이는 효과가 있었다.

나. 새로운 대중국 경제정책

극심한 경제난, 외교적 고립, 미국의 경제봉쇄 그리고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등 현재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보면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정치·군사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북한에 있어 중국은 마지막 사회주의 형제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북한은 대내 식량난과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 1991년 이후,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시 경화결제 무역방식을 채택하면서 원유수출을 중단하고, 1993년 이후에는 이란이 대북 원유수출을 중지함으로써 중국은 북한에 필요한 원유의 대부분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북한에 연간 수십만톤의 곡물을 제공하여 북한의 경제파탄을 지연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해왔다.

또한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볼 때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의 군사적·사상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공고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북한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자신의 안보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¹⁴⁾ 중국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는 북한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중 수교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혈맹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지

14) 『로동신문』, 1993. 7. 10.

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¹⁵⁾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개혁·개방, 한·중 수교 등을 사회주의 원리와 원칙을 떠난 민족이기주의, 수정주의로 비판하면서 의존과 경계의 이중적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북한은 중국을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인식하였었다.¹⁶⁾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현대 수정주의자의 반사회주의 책동’이라고 간접 비난하였고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 시에는 중국을 ‘제국주의자에 굴복한 배신자, 변절자’라고 공격하였다.¹⁷⁾ 김정일은 중국의 시장경제 도입정책을 “자본주의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면서 자본주의 복귀소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중국을 간접 비난하였다.¹⁸⁾ 이는 북한이 과거와 같이 중국을 이념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입장은 1990년대의 갈등에서 점차 벗어나 실리적인 대중국 경제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 과정은 북·중 경제관계가 무역, 투자, 지원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의 급속한 회복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북한의 실리주의적 대외경제정책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 △동북아에서 일고 있는 소위 ‘중국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북한 중시론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지렛대 활용 △남북한 등거리정책과 중국의 안보를 위한 북한 안정화 정책 등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김정일은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각이한 형태의 북·

15) 『로동신문』, 1992. 10. 12.

16) 『북중 경제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민족통일연구원, 1997. 4.

17) 「중앙방송」 (평양: 1992. 9. 27). 「중국을 ‘배신자·변절자’로 간접 비난」, 『내외통신』, 보도판 (1992. 9. 29)에서 재인용.

18)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 11. 4.

중 경제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홍성남 총리, 박봉주 총리, 김영남 최고 인민 회의 상임위원장 등 수많은 최고위층 경제관리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투자보장협정 등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이 20억 달러 규모의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이것은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1990년대의 경제실리 중심에서 다시 1980년대의 안보중심적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국위협론에 맞서려는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이 있다는 것이다.

3.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가. 대북한 인식변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는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북한의 대 중국 비판이 시작되면서 점차 가시화되었다. 특히 1992년 8월 한·중 수교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 간 정치적 관계는 냉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교정책의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으며,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신국제질서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데 외교정책의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¹⁹⁾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에 직면해 있었다. 1989년 천안문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 상품의 수입쿼터를 감축하고 중국내 정치범의 강제노동

19) 신상진, 「북중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5.

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첨단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동시에 최혜국대우 연장을 중국내 인권상황 개선과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과 일본을 위시한 선진 경제국들도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은 상당한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있어 경제대국인 한국은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1991년 무역대표부 교환설치 이후, 한·중 양국간 교역규모는 58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어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²¹⁾ 중국은 국교정상화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교역다변화로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처하는 동시에 일본의 대중투자와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하였다.²²⁾

당시 일본의 대중투자는 일본 해외투자 총액의 1%에 불과하였으며, 1987년 이후, 일본의 대중 기술이전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임으로써 중국은 일본의 경제정책을 결코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²³⁾ 당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동북3성 지역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하여 일본이 누려왔던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였다. 1990년대 중국의 대북한 인식변화는 냉전적 사고의 탈피와 북한을 중국의 전략적 전초기지로 인식하던 종전의 방어적 정치·외교전략으로부터 벗어나 동아시아의 질서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감소, 일본의 해외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 대만을 지렛대로 한 미국의 대중국 정치·경제적 압력강화

20) 앞의 책, p. 7.

21) 앞의 책, p. 7.

22) Hong Liu, "The Sino-South Korean Normalization", *Asian Survey*, Vol. 33, No. 11 (November 1993), p. 1091. 한·중 수교 직후인 1992년 10월 아키히토 일왕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관계강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일왕의 중국방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23) *Beijing Review*, 1991, December 23-29, p. 14.

등 수 많은 변화된 요인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넘어 동아시아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데 주동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계기를 주었다.

중국은 과거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압력과 일본의 정치·군사적 기도를 완화·차단하고자 하였으며 1991년 11월에는 베트남, 12월에는 인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였고, 동남아국가와도 빈번한 방문외교를 통하여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경쟁관계를 보여 온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공동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동시에 한국카드를 이용하여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에 있어서의 북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지위는 한국으로 확실하게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위가 중국에 있어서의 군사·안보적 지위까지 대신 하는 수준의 대체과정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아직까지 중국에 있어서의 북한의 군사·전략적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협론이 커질수록 그 지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나. 대북한 경제정책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자국의 성장과 안보적 환경마련을 위한 전략적 지원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동북3성과 접경하고 있는 군사·안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국면이 조성될 경우, 중국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대 전 기간에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중시하

24) 이러한 관점은 Robert G. Sutter, "Korea: Improved South Korean-Chinese Relations-Motives and Implications," 『연합통신』, 1996. 3. 2, pp. 12~15에도 잘 나타나 있다.

는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에서 안보적 국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정치·군사적으로 여전히 북한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체제가 붕괴될 때 파생되게 될 중국의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의 체제붕괴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혼란은 안정적 개혁과 개방으로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의 정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에도 중국이 북한을 사회주의 형제국 또는 전통 우호협력 대상이라고 강조한 것도 본질적으로 북한의 정치안정을 유지하려는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다²⁵⁾.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에도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는 한국보다도 북한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²⁶⁾

한편, 1990년대에 일본의 대북 수교교섭 협상도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은 1991년부터 1년여 동안 수교교섭 협상을 전개하여 관계개선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는바, 조만간 양국간 관계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²⁷⁾ 그러나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일·북 관계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국은 일본의 대북한 진출이 결과적으로는 대중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사실 중국은 한·중 수교에 대해 북한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외교

25) 한·중 수교 이후인 1993~97년 중국의 대외정책방침이 천명된 「政府工作報告」에서 리펑 총리는 중국이 북한과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李鵬在人大政府工作報告」, 『문화보』, 1993. 4. 1.

26) 신상진, 『中·北 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7, 8. 13.

27) 앞의 책, p. 13.

적 노력을 전개하였고 한국과의 수교방침이 확정된 직후인 1992년 4월 양상쿤 주석은 북·중 관계가 여전히 ‘순치관계’이며 ‘피로 맺은 혁명전우의 관계’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대한수교가 중·북 관계에 결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적이 있다.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협력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을 전략적 협력국의 미명하에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건설을 최우선적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1992년 2월 덩샤오핑의 ‘남경강화’ 이후 개최된 12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당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하는 등 자본주의 경제요소 도입정책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중국에 있어 북한은 부담이 되는 대상이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중국에게 이익이 되기보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중국이 강조하는 대북 우호관계는 실질보다는 명분과 형식에 치우친 개념이었다.²⁸⁾

정치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문제가 유엔안보리에 상정됨으로써 중국의 입장을 대단히 난처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는바, 북한의 핵무기개발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동아시아질서의 불안정은 중국에 결코 이롭지 못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잔류와 핵무기개발 중단결정을 유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도록 하였으나, 북한의 핵무기개발 기도가

28) 앞의 책, p. 15.

대화와 협상을 통해 중단되기를 희망하였다.²⁹⁾

이에 따라 심각한 경제난과 대외고립 상태에 처한 북한을 살리기 위해 많은 대가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과 대외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북한을 한반도의 2개의 외교상대국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³⁰⁾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점차 악화되는 동북아지역 강대국간의 관계와 북한 문제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상호 활용하려는 북·중 당국의 노력도 활발해 지기 시작하였다. 1999년 6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북·중 고위 지도자간 상호방문이 재개되었다. 중국은 동 기간 국가발전목표 달성에 유리한 한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체의 실리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조정하려 하고 있으나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을 전후한 동북아 국제정치의 환경변화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있다.

21세기 초에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일의 중국견제전략은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기존의 관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주변 각국, 특히 2003년 초 북한과 미국 사이에 50여회 이상 메시지 전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국을 설득하고 주변국을 합류하게 하여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³¹⁾ 아울러 4차례의 회담 동안 상당한 어려움

29) 앞의 책, p. 15.

30)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학자인 易小熊(Xiaoxion Yi)도 중국이 한반도에서 2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China's North Korea Policy: A Waiting Game,”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1997. 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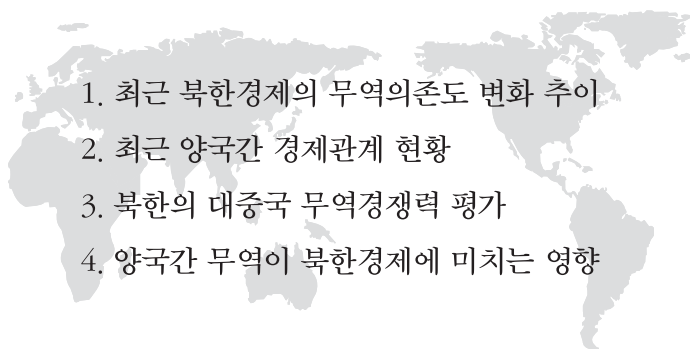
31) Chen Jian, “Limits of the Lips and Teeth Alliance,” p. 14.

과 경제적 부담을 치르면서도 교섭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는 원칙을 고수하는 등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은 동시에 북핵 위기와 더불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중유공급이 중단되고 국제식량지원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보다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이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중국을 적절히 활용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현실적인 고립상황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에는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아울러 실리적인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전략 물자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된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북한을 궁지로 모는 것은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과도 연관되어 중국이 쉽사리 취할 수 없는 외교적 선택이 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의 존재는 중국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의지하는 거의 유일한 전략적, 경제적 지원국이면서도, 중국의 북한 영향력 행사는 조심스럽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3장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1.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2.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3.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평가
4. 양국간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체제전환국이나 시장경제 도입국가들의 경제동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은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혁정책의 주요 목표가 사회주의 시절의 폐쇄적 경제운영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체제전환국의 개혁속도나 정책일관성 정도는 과거에 비해 국내총생산 대비 대외부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변하고 있는가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점은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전반적인 대외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대외경제적 연계가 깊어지는 반면, 다른 국가와의 경제적 연계는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4년 북한의 대외무역총액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한 28억 5,700만 달러로 1991년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남북 교역까지 고려할 경우 35억 5,400만 달러에 달한다.³²⁾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북한 경제의 GNI 대비 대외무역 비중은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북한 경제가 아직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기존의 전통적 내수경제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급증하면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GNI 대비 무역비중은 2004년 기준 20% 정도에 불과하여 대외개방

32)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5. 5. 31.

도가 대단히 낮음을 보여준다.³³⁾

1980년대 북한의 GDP 대비 무역비중은 최고 27%까지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전 기간에는 10%대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는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20%대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표 3-1.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합 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2000	556	8.0	1,413	46.4	1,969	33.0
2001	650	14.9	1,620	15.2	2,270	2.6
2002	735	13.1	1,525	-5.9	2,260	-0.4
2003	777	5.5	1,614	5.9	2,391	5.8
2004	1,020	31.3	1,837	13.8	2,857	19.5

주: 남북교역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각 연도 자료 취합정리.

표 3-2. 북한의 GNI 대비 무역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GNI	-	23,100	21,100	21,200	21,400	12,600	16,800	15,700	17,000	18,400	-
무역	4,885	4,170	2,555	2,100	1,977	1,442	1,969	2,270	2,260	2,391	2,857
비중	-	18.05	12.11	9.91	9.24	11.44	11.72	14.46	13.29	12.99	-

자료: GNI는 한국은행, 무역통계는 KOTRA 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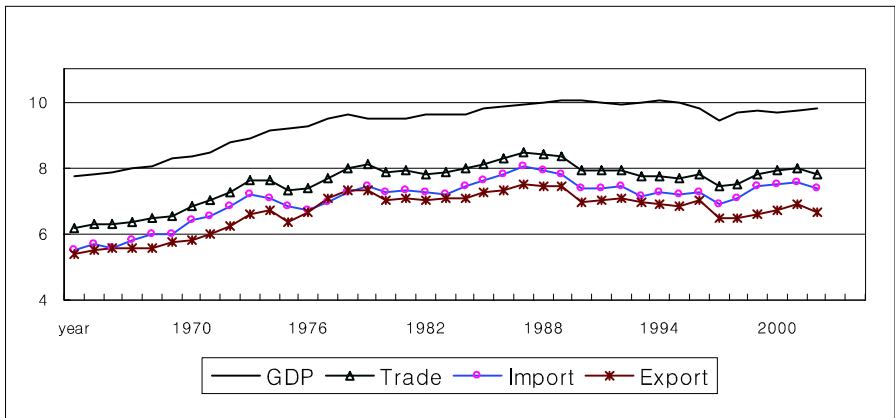
33) 무역비중이 20%라는 것은 2004년도 북한 GNI가 208억 달러, 대외교역량(남북교역 포함)을 35억 5,400만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의 비중임.

표 3-3. 북한의 주요 거시경제 추이(1990~2004년)

연도	GNI (억 달러)	경제성장률 (%)	무역총량 (억 달러)	북한제조업 산업생산지수	곡물생산량 (만 톤)	원유도입량 (만 배럴)
1990	231	-3.7	41.7	156.9	402.0	1,847
1991	229	-3.5	25.8	136.3	442.7	1,385
1992	211	-6.0	25.6	111.7	426.8	1,114
1993	205	-4.2	26.5	109.5	388.4	997
1994	212	-2.1	21.0	105.5	412.5	667
1995	223	-4.1	20.5	100	345.1	806
1996	214	-3.6	19.8	91.1	369.0	686
1997	177	-6.3	21.8	75.8	348.9	371
1998	126	-1.1	14.4	73.4	388.6	369
1999	158	6.2	14.8	79.7	422.2	233
2000	168	1.3	19.7	80.4	359.0	285
2001	157	3.7	22.7	83.2	394.6	424
2002	170	1.2	22.6	81.5	413	438
2003	184	1.8	23.9	84.1	425.2	421
2004	208	2.2	28.6	-	431.2	390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 3-1. 북한의 국내총생산과 수출입 추이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각 연도 자료에서 재구성.

표 3-4. 북한의 무역의존도 추이(1985~2004년)

(단위: 억 달러)

연도	총산출량		무역총량	무역의존도(%)	
	북한 발표치(A)	한은 추정치(B)	한은 추정치(C)	C/A	C/B
1985~90 평균	-	194	42.3	-	21.8
1991	-	229	25.8	-	11.3
1992	208.8	211	25.6	12.3	12.1
1993	209.4	205	26.5	12.7	12.9
1994	154.2	212	21.0	13.6	9.9
1995	128.0	223	20.5	16.0	9.2
1996	105.9	214	19.8	18.7	9.3
1997	-	177	21.8	-	12.3
1998	-	126	14.4	-	11.4
1999	102.7	158	14.8	14.4	9.4
2000	105.9	168	19.7	18.6	11.7
2001	-	157	22.7	-	14.5
2002	-	170	22.6	-	13.3
2003	-	184	23.9	-	13
2004	-	208	28.6	-	13.8

주: 1985~90년 통계는 모두 통일부 추정치.

자료: DPRK,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Parties, 24 Jun 2002; DPRK/UNDP, Thematic Round Table Meeting on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DPRK, 28~29 May 1998;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각 연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IEA, Energy Statistics of Non OECD Countries, various years; FAO Statistical Database.

북한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와 베트남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베트남은 2003년 기준 무역의존도가 110%로 나타나고 있어 13% 수준인 북한에 비해 훨씬 높다.³⁴⁾

34) 2003년 베트남의 명목 GDP는 390.2억 달러, 무역량은 428.8억 달러로서 무역량이 국내총생산을 능가하고 있다.

표 3-5. 베트남의 GDP 대비 무역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1990	1992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8,004	13,182	20,737	24,657	26,792	27,117	28,491	30,323	30,942	33,942	36,373
무역량	5,366	5,944	9,880	18,748	21,359	20,616	23,282	39,118	31,230	36,446	46,209
비중	67.04	45.09	47.64	76.04	79.72	76.03	81.72	129.00	100.93	107.38	127.04

자료: IMF DOT, WTO, 각 연도 자료.

북한과 중국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를 비교해 봐도 2003년 기준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70.6%로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³⁵⁾

표 3-6. 중국의 GDP 대비 무역비중

(단위: 억 달러, %)

연도	1990	1992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3,877	4,830	5,425	8,164	8,984	9,463	9,913	10,807	11,758	12,706	14,123
무역량	1,165	1,674	2,365	2,901	3,250	3,241	3,606	39,118	4,741	6,211	8,510
비중	30.05	34.66	43.59	35.53	36.18	34.25	36.38	361.97	40.32	48.88	60.26

자료: IMF DOT, WTO, 각 연도 자료.

북한 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낮은 주요 원인은 과거의 폐쇄적 자립경제정책과 사회주의 시장 붕괴, 그리고 현재의 경제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주요 경제정책인 자립경제정책에 의해 북한의 산업과 기업의 생산 시스템은 해외시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로 국내 원료, 자원, 기술, 그리고 국내 소비시장에 대부분 의존해 있었다.³⁶⁾

35) 중국의 GDP는 1조 2,000억 달러, 대외교역량은 1조 달러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는 구상무역이라는 유리한 거래환경을 소멸시켰는 바, 특히 북한은 당시부터 국제시장에서 상품의 질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가 유리한 우호가격제도를 소멸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급하여 산업원자재를 사오게 되었다. 예컨대 1989년 자본주의 국제시장에서 원유가격은 톤당 162달러였지만, 사회주의 시장에서는 68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³⁷⁾ 또한 청산결제제도 붕괴로 산업생산물자를 경화로 현금결제를 통해서만 사올 수 있는 처지에 놓였고, 특히 과거 채무변제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어 외화난을 가중시켰다.

셋째, 현재의 경제난은 기업의 생산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수출저하로 이어지며, 수출저하로 인한 외화 수입감소에 의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에너지를 사오지 못해 다시 산업생산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특히 북한에 없거나 적은 생산물자나 원유 등은 전적으로 수출에 의한 외화수입으로 사와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서로 맞물려 경제난과 생산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2.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가. 무역

1) 무역 추이와 특징

지난 2003년에 북·중 무역은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4년에

36) 자립경제정책은 “생산의 인적 및 물적 자원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 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 나가는 경제체제”로 정의된다.

37) 조명철 「북한경제정책의 변천과정」, IBRD 보고서, 1997, p. 11.

는 13억 8,521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4%의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 중 수출은 5억 8,570만 달러로 전년보다 48.2%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보다 27.4% 증가한 7억 9,9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북·중 무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의 48.7%(남북교역 포함시 39%)로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 존도는 2003년의 42.8%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나타나는 대중국 의존도 증가추세는 2005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2005년 상반기 중·북간 무역규모는 7억 4,15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3%나 증가하였다. 이 중 수출은 2억 3,001만 달러, 수입은 5억 1,156만 달러 전년동기 대비 각각 33.8%, 48.0% 증가하였다. 200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2억 8,155만 달러로 이미 2004년 전체 무역적자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표 3-7. 북·중간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무역	6.9	9.0	6.2	5.4	5.6	6.5	4.1	3.7	4.88	7.37	7.38	10.2	13.85
수출	1.5	2.9	1.9	0.6	0.6	1.2	0.57	0.42	0.37	1.67	2.71	3.95	5.86
수입	5.4	6.0	4.2	4.8	4.9	5.3	3.56	3.29	4.51	5.71	4.67	6.28	8.00
무역수지	-3.9	-3.1	-2.3	-4.2	-4.3	-4.1	-2.98	-2.87	-4.14	-4.06	-1.96	-2.32	-2.14
비중	27	33	29	26	29	30	29	25	25	33	33	43	48

주: 남북교역 제외.

자료: KOTRA(2005), 「2004년도 북한무역 동향」.

최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북·일 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물량이 상당 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생산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³⁸⁾ 아울러 중국 제품의 시장가격이

38)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5년 상반기 북한과 주요 교역국 간의 교역동향, KOTRA.

싸고 거래조건이 양호하며, 물류 등 교역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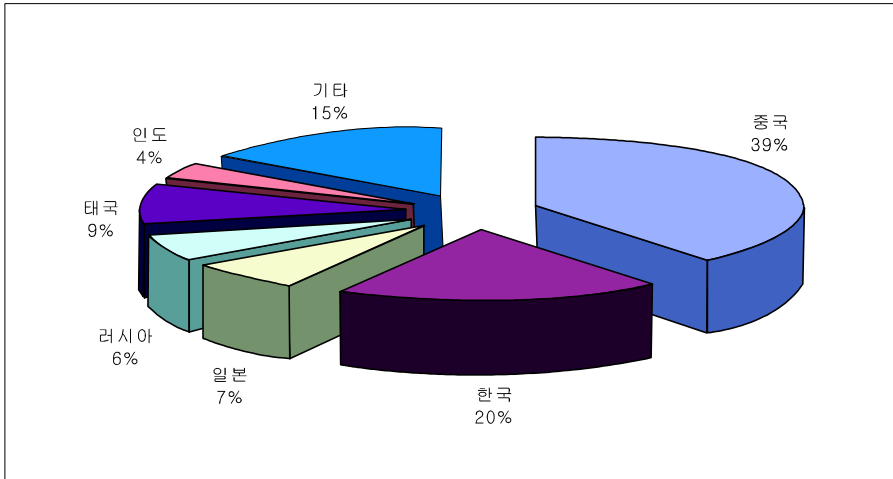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무역추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은 확실히 제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간다는 점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 중에서 대중국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로서 절대적이다. 남북교역을 포함하여도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9%로서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절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1위의 대상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다. 과거 1990년까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구소련 및 동유럽국가 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교역량의 70% 이상으로서 절대적이었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구소련을 대신하여 북한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지속적으로 자리 매김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전 기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곧 1위이기 는 했지만, 그 비중이 30%대를 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비중은 북한의 경제난과 더불어 대외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다. 그런데 2001년부터 북·중 무역이 30%를 넘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대외무역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전반적인 무역규모가 줄어 드는 가운데 북·중 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무역규모 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2. 북한의 국가별 교역비중(2004년)



둘째,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상품의 가장 큰 공급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북한의 산업생산과 주민의 소비생활에서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까지는 구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이 북한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원부자재 최대공급국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구조가 거의 소멸되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서도 △ 사회주의 경제협력체 붕괴로 인한 우호적 대우의 소멸 △ 구상무역 및 청산결제방식 붕괴로 인한 경화지급능력 부재 △ 교역의 지리적 불리함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과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교역여건이 유리하고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물류 코스트가 낮으며, 특히 제품가격이 저렴하다. 여기에 더해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시장에는 북한의 산업생산과 소비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이 존재하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대북 적대감이 작고 경제 제재도 없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표 3-8. 북한의 주요국별 교역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교역액	점유율
중국	737.5	27.6%	738.2	25.4%	1,022.9	32.8%	1,385.2	39.0%
한국	4.3	15.1%	641	22.1%	724	23.2%	697	19.6%
일본	474.7	17.8%	369.5	12.7%	265.3	8.5%	252.6	7.1%
러시아	68.3	2.6%	80.7	2.8%	118.4	3.8%	213.4	6.0%
태국	130.1	4.9%	216.6	7.5%	254.3	8.2%	329.9	9.3%
인도	157.8	5.9%	191.3	6.6%	158.4	5.1%	135	3.8%
기타	702.1	25.0%	664.1	23.0%	572.0	18.0%	541.0	15.0%
총계	2,673.5	100.0%	2,901.4	100.0%	3,115.3	100.0%	3,554.1	100.0%

주: 남북교역 포함.

자료: KOTRA(2005), 「2004년도 북한무역 동향」.

현재 북한은 대중국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도 매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만큼 북한 산업은 중국의 원부자재 및 에너지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 생필품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비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에 필요한 기계, 전기기기, 철강, 화학제품, 농업용 자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주요 품목은 예외 없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화학제품, 철강, 섬유, 전자재 등의 품목은 중국이 제1의 공급국이다.

셋째, 중국시장은 북한제품의 가장 큰 수요자라는 점이다. 사실 북한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특히 가공제품에 대한 수요는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일부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일본, 한국 등을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제품을 납기일에 맞춰 공급할 능력도 작고, 제

품의 질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보장할 능력도 크지 않다. 수출할 수 있는 주력상품 대부분이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산품이거나 의류 등 저부가가치 상품, 약간의 단순 기계·전자제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대부분의 개도국이 주력 수출 품종으로 선택하고 있어 이것마저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리적으로도 북한은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제외하고는 수출하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중국시장은 북한상품에 대한 수요가 얼마든지 있다. 북한상품이 저렴한 이유도 있지만, 워낙 인구가 많은 국가여서 다양한 상품수요가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북한과 중국에는 변경무역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있어 교역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북한은 약 50%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상품을 변경무역 형태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어패류, 섬유·의류제품, 광물성 원료 등은 중국시장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수입해주는 주요 북한제품들이다.

1990년 중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200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어패류의 대중 수출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2003년의 경우 2억 693만 달러 상당의 어패류가 수출되어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약 52%를 차지하였으며³⁹⁾ 이 밖에 여성용 코트 등의 의류(3,826만 달러), 선철 등 철강제품(2,786만 달러), 석탄 등 광물성 원료(1,129만 달러), 원목(930만 달러) 등이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⁰⁾ 하지만 어패류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수출물량의 변동이 심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작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북·중 무역은 북한에 있어서 만성적인 적자를 내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수지를 보면,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39) KOTRA(2004), pp. 35~37.

40) KOTRA(2003), p. 34.

에서 해마다 2억~3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만성적 적자현상은 북·중 무역을 경화결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외상으로 수입해 간 상품의 대금을 갚지 못해 중국 기업들은 대안으로 북한 상품을 대신 받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물자로 상환할 상품의 물량도 많지 않아 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북·중 무역은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완전히 경화결제체제로 전환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북한이 만성적인 대중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다. 적자문제 해결시 활용되는 방식으로는 △중국정부의 대북한 무상재정지원 혹은 차관지원을 들 수 있으며 △채무를 연기해 주는 방식이 있고 △대치물자 상환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이 무작정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미루는 형식이 있을 수 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가 주기적으로 북한에 재정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북한은 2000년 홍성남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재정차관을 하였고, 2005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또다시 재정차관을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채무를 연기해 주는 방식은 과거 1960년대와 1970~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던 방식으로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이 방식이 적용되리라고 본다. 대치물자 상환방식은 북한이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현금지급으로 하고 실제 지급은 현물로 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북·중 기업간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임을 현지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북한이 무작정 버티는 방식인데, 실제로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많은 중국 기업이 오래 전에 북한에 물자를 주고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북한 정부도 지급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다섯째,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은 중앙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 변경지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 교역은 주로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연변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신의주~단둥 경로가 북·중간 교역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북한당국의 대외무역 허가를 받은 130여개 중국 무역회사 가운데 100여개 업체가 단둥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북한측에서도 대외경제위원회 소속 삼천리총회사, 평양시 당위원회 소속 룡라도무역총회사, 39호실 소속 광명성총회사 등 북한의 대표적 무역회사들이 상당수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단둥에는 중국정부로부터 변경무역 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126개 있으며, 상당수의 조선족 기업과 북한거주 중국 화교들이 북·중간 교역에 참여하고 있다.⁴¹⁾

특히 2002년 하반기 이후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북·중 변경도시를 거쳐 거래되는 북·중간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 생필품뿐만 아니라 기업소 및 생산현장에서 요구되는 기계, 전기기기, 철강, 화학제품, 농업용 자재의 대부분을 변경도시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또한 약 50%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산 제품의 대부분을 변경무역 형태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어패류, 섬유·의류제품, 광물성 원료 등의 대중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

여섯째, 일본의 대북한 무역제재가 북·중간 무역을 확대하는 효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2002년 이후 납치문제로 인해 북·일간 관계악화와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해 일본으로 수출되던 수산물과 의류 위탁가공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변경지역에서 북한산 농수산물, 특히 수산물 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대단히 많은 식당에서 북한산 수산물로 요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일본의 대북한 무역비중은 2001년까지 제2위의 지위에서 2004년에는 한

41) 임금숙(2004), p. 7.

국과 태국보다 낮은 4위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 그 비중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북한의 교역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04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급격히 증가해 한국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의 비중은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2004년의 경우 그 차이는 거의 6배에 달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더 크게 증가하여 전체 대외무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무역의 품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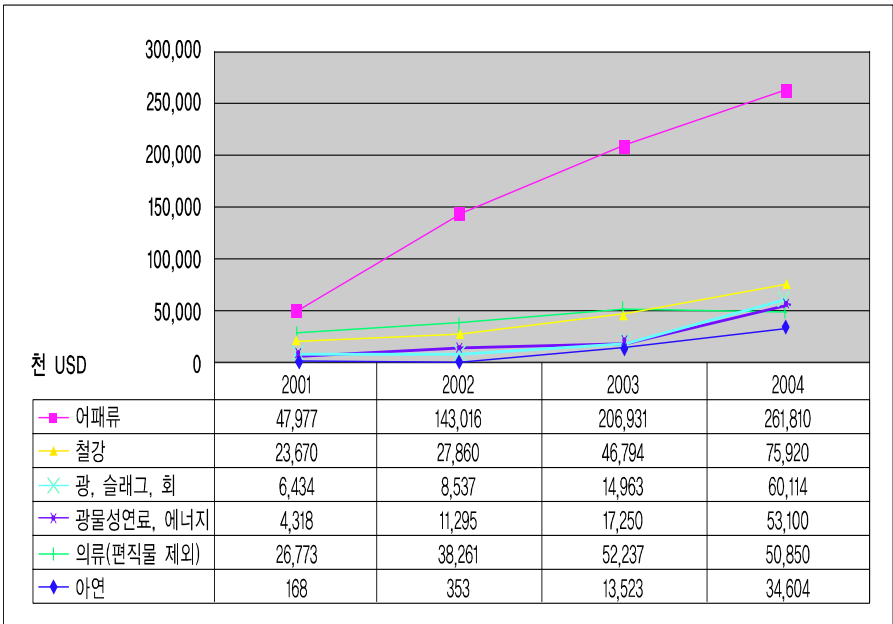
가) 주요 수출품목 구조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어패류, 철강, 광과 슬래그 및 회, 의류, 광물성 연료, 아연 등이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5억 8,57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48.2% 폭증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전통적 주력 수출품목인 어패류는 2억 6,181만 달러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3년 연속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수산업은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수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외화 획득이 외화수입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철강 역시 7,592만 달러로 전년대비 62.2% 증가하였고, 광·슬래그·회는 6,011만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301.8% 증가하였으며 아연피는 3,460만 달러가 수출되어 전년대비 155.9% 증가하였다. 광물성 연료는 5,31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무연탄 수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의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증가세가 그다지 크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특히 동북3성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원부자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비증가도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급증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도 과거에 비해 에너지 수급사정이 상대적으로 호전되면서 수출품 생산기업의 생산기동률이 증가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3-3.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 현황



자료: 중국해관통계 각 호.

표 3-9. 대중국 수출 상위품목

(단위: 천 달러)

HS	품 목	주요 세부품목	2003년	2004년	증감률(%)
03	어패류	연체동물, 갑각류	206,931	261,806	26.5
72	철강	선철, 철 반제품	46,794	75,920	62.2
26	광, 슬래그, 회	아연광, 철광, 슬래그	14,963	60,114	301.8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석유가스, 석탄	17,250	53,100	207.8
62	의류(편직물 제외)	여성용 코트, 양복, 재킷	52,237	50,850	-2.7
79	아연	아연괴	13,523	34,604	155.9
44	나무	원목	13,624	15,175	11.4
12	채유용 종자	들깨	7,781	6,761	-13.1
08	과실류		4,437	4,785	7.8
85	전기기기		1,987	2,380	19.8
07	채소		1,540	2,380	54.5

자료: KOTRA(2005. 5),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나) 주요 수입품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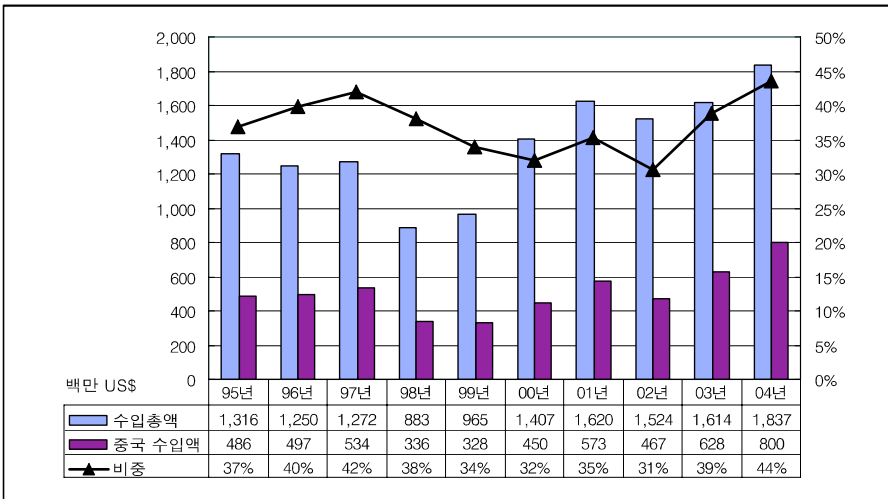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는 광물성 연료와 에너지, 식용육류,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 플라스틱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및 부속품, 인조 필라멘트 섬유, 곡물, 제분공업 생산물, 철강 가공품, 채유용 종자 및 과일류 등이 수입 상위품목에 속한다.

최근 10년간 북한의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은 1997~99년과 2002년 두 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 왔다. 대중국 수입비중 감소의 이유는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첫째로 중국 내부적으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난 봉착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별도로 증가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북·중간 교역감소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둘째로 양국간 경제관계가 과거의 우호가격 적용 및 무상지원에서 국제결제기

준에 따른 상업적 원칙에 근거한 무역거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중국 수입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2002년 이후 대중국 수입액 규모가 매년 3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크게 반전되었다. 2004년에는 중국이 전체수입액의 44%를 차지하게 되는데 식량과 에너지 수입 증가가 주원인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수입에서 광물성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석유, 석탄을 비롯한 주요 광물성 생산품에 대한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매년 5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원유(HS 2709)의 경우는 2004년 한 해에만 1억 3,933만 달러 수입되어 전년보다 15.1% 증가하였다. 최근 북한은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물성 연료 수입을 크게 늘려 산업현장에 투입함으로써 생산성 제고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북한의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표 3-10. 대중국 수입 상위품목

(단위: 천 달러)

HS	품명	주요 수입품목	2003년	2004년	증감률(%)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원유, 정유, 코크스	180,727	204,657	13.2
02	식용육류	돼지고기	63,623	140,576	121
85	전기기기	TV	39,581	46,051	16.3
84	기계류		27,044	39,924	47.6
72	철강		20,688	39,715	92
39	플라스틱	플라스틱판, Sheet, Roll	24,578	32,434	32
72	차량 및 부속품		8,640	18,655	115.9
54	인조필라멘트 섬유		14,590	18,324	25.6
10	곡물		49,961	15,389	-69.2
11	제분공업 생산물		8,062	14,539	80.3
73	철강 가공품		6,874	14,478	110.6
12	채유용 종자, 과실		10,266	12,143	18.3

자료: KOTRA(2005. 5), 「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표 3-11. 북한의 대중국 석탄·석유류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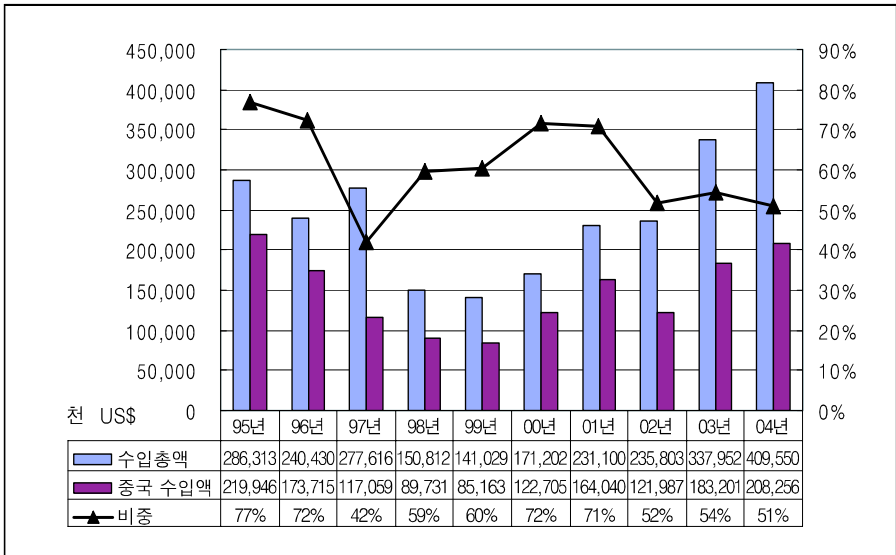
HS 코드	2003년		2004년		전년동기 수입대비 (%)
	수량(톤)	금액(천 달러)	수량(톤)	금액(천 달러)	
광물성연료계	1,201,359	179,396	972,157	204,655	-19.1
2701 석탄 등	405,152	14,948	270,938	11,205	-33.1
2704 코크스	87,141	6,107	22,317	2,214	-74.4
2708 피치코크스	6,179	793	4,488	765	-27.4
2709 원유	573,558	121,004	531,785	139,326	-7.3
2710 조제유류	124,727	35,571	128,041	48,870	2.7
2711 석유가스 등	232	97	357	243	53.9
2713 석유코크스	4,370	876	5,284	1,210	20.9

주: 수량기준으로 대부분의 광물성 연료의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국제원유가 및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액은 증가했으나 수입량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

자료: KOTRA.

석유, 석탄을 포함한 광물성 생산물 전체 수입추이는 [그림 3-5]와 같다. 1995년 이후 몇 년간 중국 수입의존도가 떨어진 것은 KEDO의 중유지원과 1997년 예멘에서의 원유 60만톤 수입 영향으로 보인다. 2002년 중국의 수입비중이 다시 감소세를 돌아섰는데, 이는 러시아로부터 유류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02년 8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산업에서의 경험 접촉이 활발해졌던 것이 러시아 유류도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류 수입액 규모는 200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절대적 수입의존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림 3-5. 북한의 광물성 생산물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주: HS 25, 26, 27류 수입통계.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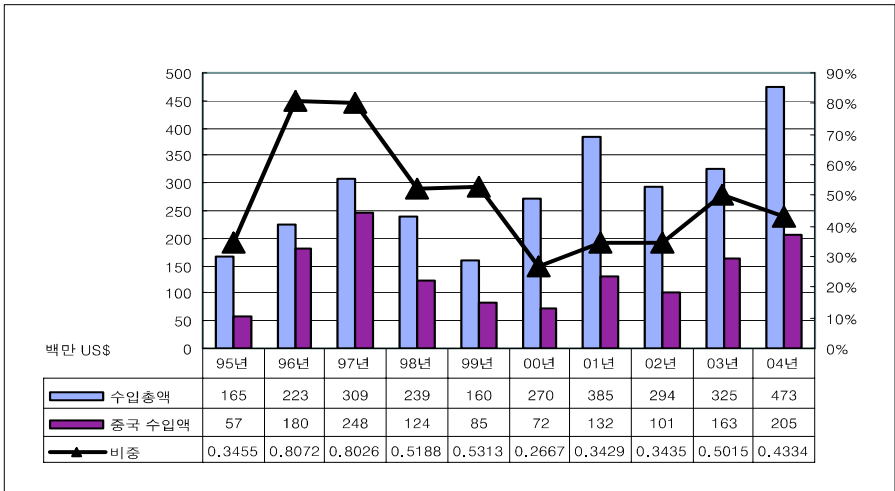
표 3-12. KEDO의 대북 중유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금액	10.8	12.8	29.0	19.8	39.5	11.7	3.5	2.0

자료: 통일부.

그림 3-6. 북한의 식료품 생산물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주: HS 01-24류 수입통계(동식물 생산품, 동식물성 유지, 조제식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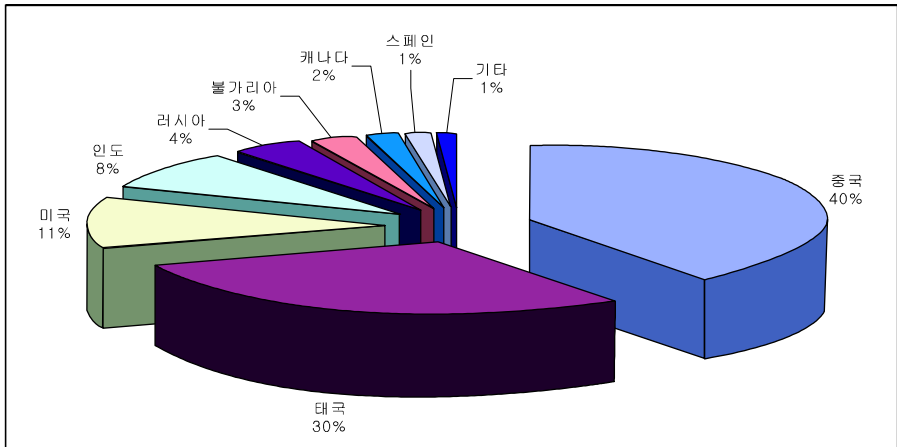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그림 3-6]은 식량을 비롯한 식료품류 수입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7~ 2000년 중국 수입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식량원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4년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액은 증가하였지만, 수입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지만,⁴²⁾ 중국내 곡물가 상승 및 곡물수

42) 2004년 북한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입은 1억 4,759만로 달러로 전년대비 80.2% 증가하였다. 이런 증가세는 북한의 돼지고기 생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소비

출 제한으로 인해 곡물수입이 태국, 인도, 러시아 등으로 대체되면서 전반적인 대중국 수입비중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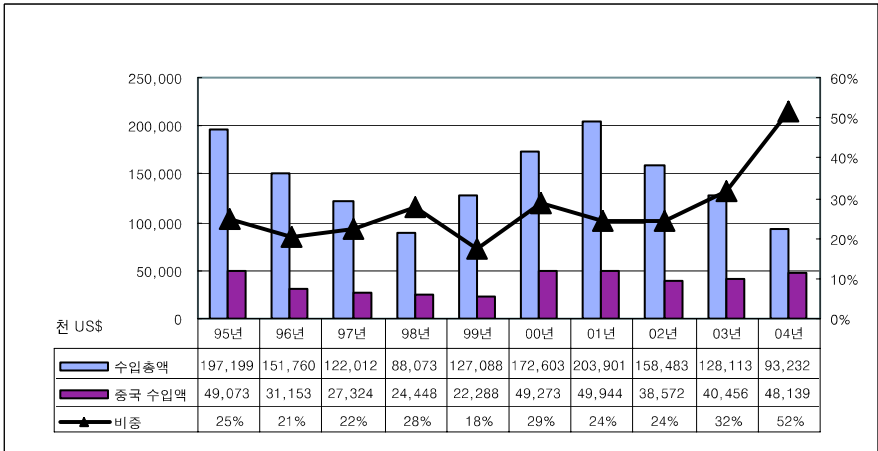
그림 3-7. 북한의 식물성 생산물수입(식량 포함) 중 중국의 비중(2004년)



북한의 섬유류 수입은 크게 수출을 위한 섬유원료 수입과 주민생활에 소요되는 의류제품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8]에서 보여 주듯이 1995년 이후로 섬유류 수입액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의류 임가공 수출이 감소하면서 섬유 원료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아리랑축전 등 북한의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중국의 의류 무상지원에 힘입어, 일시적인 수입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1년 이후의 전반적인 추세는 의류 수입총액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고, 여기에 시장의 공급기능이 작동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4.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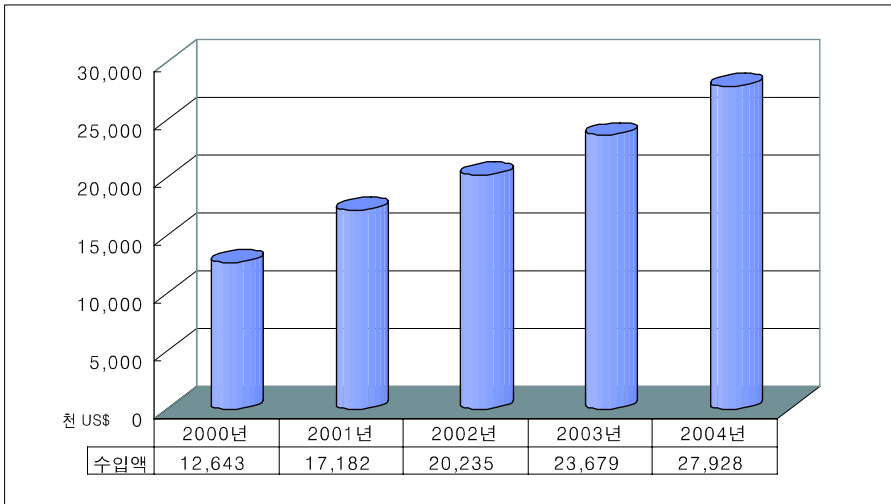
그림 3-8. 북한의 섬유제품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주: HS 50~63류 수입통계.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그림 3-9. 북한의 대중국 섬유원료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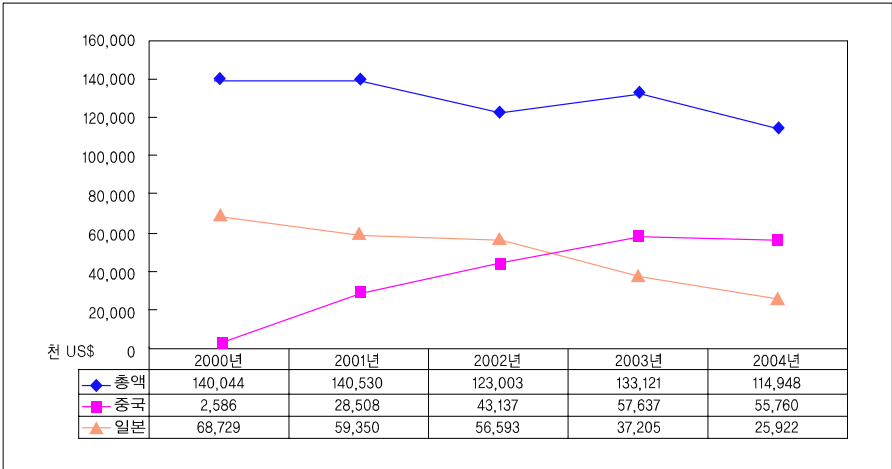
주: HS 54, 55, 56류 수입총계.

자료: KOTRA.

전체 섬유 수입액 중 주요 섬유원료인 면(HS 54류), 인조필라멘트섬유사(HS 54류), 인조스테이플섬유사(HS 55류)의 대중국 수입액만 별도의 살펴보면 [그림 3-9]와 같다. 2001년 전년대비 36% 증가한 이후 매년 17%대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과 중국 간의 섬유류 수출입 동향이다. [그림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일본 섬유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중국 섬유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즉 북한의 섬유제품 교역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수출입 모두에 있어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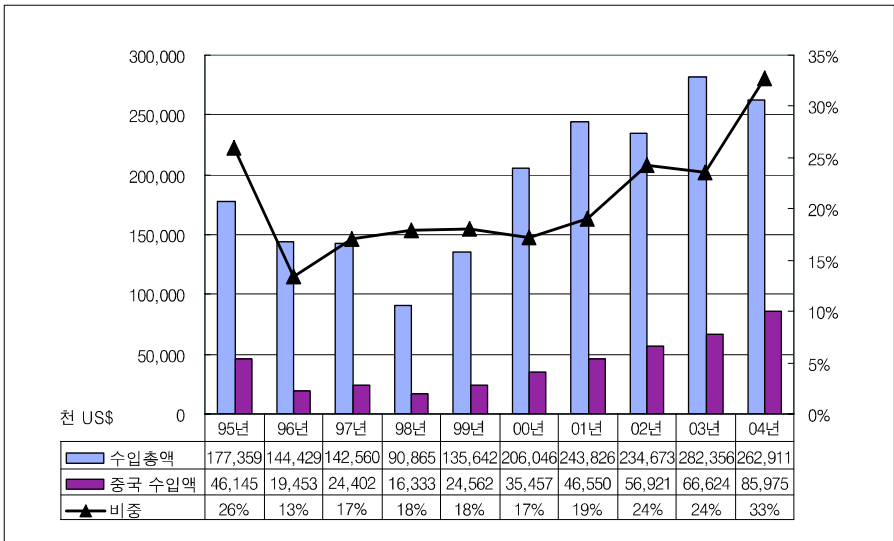


자료: KOTRA.

[그림 3-11]에서와 같이 기계·전기전자류의 수입은 안정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는 수입총액이 2억 달러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수입품에는 TV 등 가정용 가전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공장, 발전소 개·보수를 위한 기계부품과 산업생산 정상화를 위한 기계설비 도입, 그리고 채취

공업과 농축산업의 생산량 확대를 위한 채굴기계, 농기계 도입이 주를 이룬다. 또한 2000년 이후 북한이 강조하는 있는 IT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 및 컴퓨터 수입도 많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수입증가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액수와 비중 면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 전자·기계류의 전체 수입액은 감소한 반면, 대중국 수입액은 늘어나면서 수입비중이 33%로 증가하였다.

그림 3-11. 북한의 전자·기계류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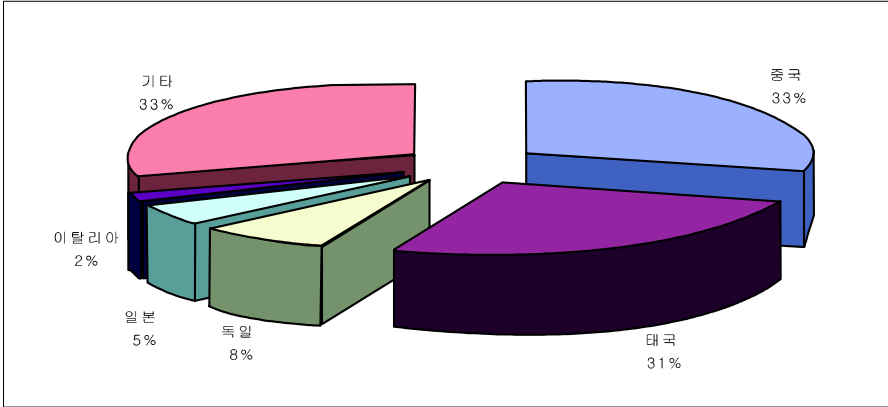


주: HS 84, 85류.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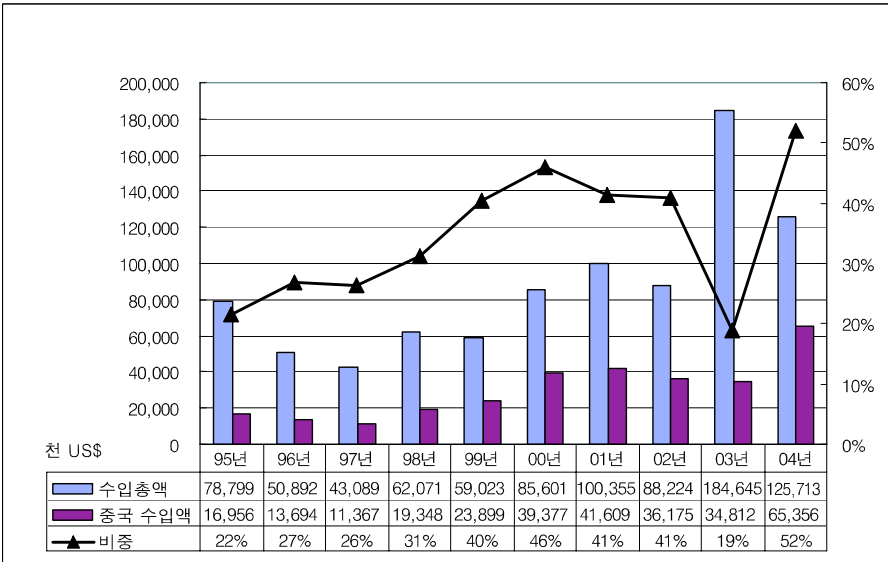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수입규모는 2003년 대비 6.9% 감소한 2억 6,291만 달러였다. 이 중 전체의 33%인 8,598만 달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태국(8,030만 달러), 독일(2,209만 달러), 일본(1,407만 달러), 이탈리아(640만 달러) 순이었다.

그림 3-12. 북한의 기계, 전기·전자제품 수입 국가별 비중(2004년)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그림 3-13. 북한의 비금속류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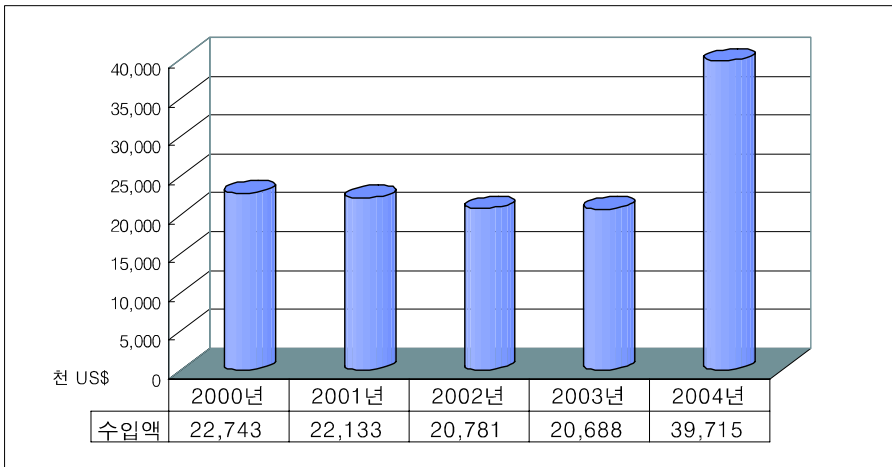


주: HS 72~83류 수입통계.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철강을 포함한 비금속류 수입은 수입총액과 대중국 수입비중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3년 중국 수입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은 네덜란드로부터 니켈(HS 75류) 약 8천만 달러 수입했고, 인도로부터 동(HS 74류) 950만 달러, 철강(HS 75류) 550만 달러를 수입하는 등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도 비금속류 중국 수입비중이 52%로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비금속 수입이 중국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외부여건에 의해 심한 변동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4. 북한의 대중국 철강 수입 현황



주: HS 72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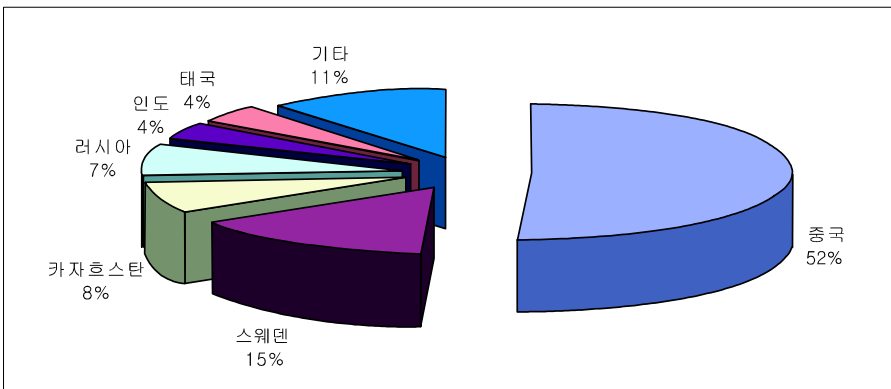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그림 3-14]에서 보듯이 중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은 2003년 2,069만 달러에서 2004년 3,972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2003년도 원자재 공급 곤란을 겪으면서 국내산업에 철강재를 우선공급함으로써, 인도

수입분이 줄고 중국 수입분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04년 북한이 해외에서 수입한 전체 비금속류의 수입규모는 1억 2,571만 달러인데, 이중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52%(6,536만 달러)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북한은 비금속류의 수입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중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1,944만 달러), 카자흐스탄(974만 달러), 러시아(943만 달러), 인도(511만 달러), 태국(490만 달러) 순이다.

그림 3-15. 북한의 비금속류 수입 국가별 비중(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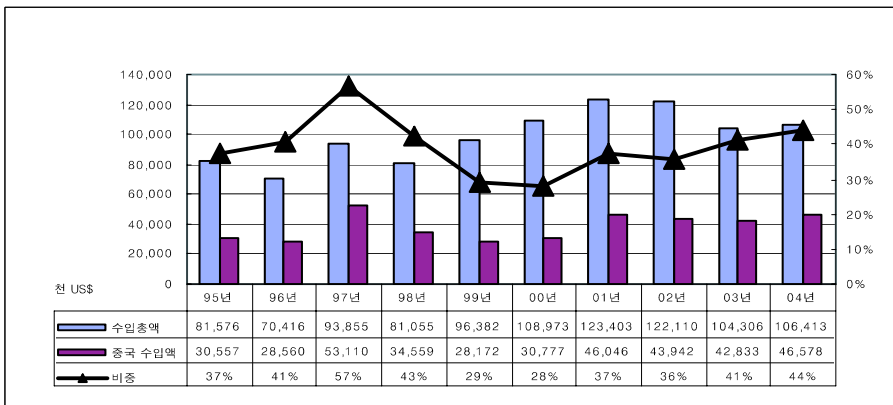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북한은 기본적인 화학관련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일정액 수입하고 있다. [그림 3-16]와 같이, 최근 들어서는 전체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이후 화공제품 중국 수입액은 금액에 있어서는 일정한 액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7]에서 보여주듯이 수입비중이 가장 큰 비료(HS 31)의 수입이 2002년을 기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반면, 무기화학물 (HS 28), 유기화학물(HS 29) 및 비누, 세제(HS 34) 수입이 증

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의 비료지원에 따른 수입 여유분을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무기·유기 화공제품의 수입 및 수요가 늘고 있는 가정용 화공제품의 수입으로 전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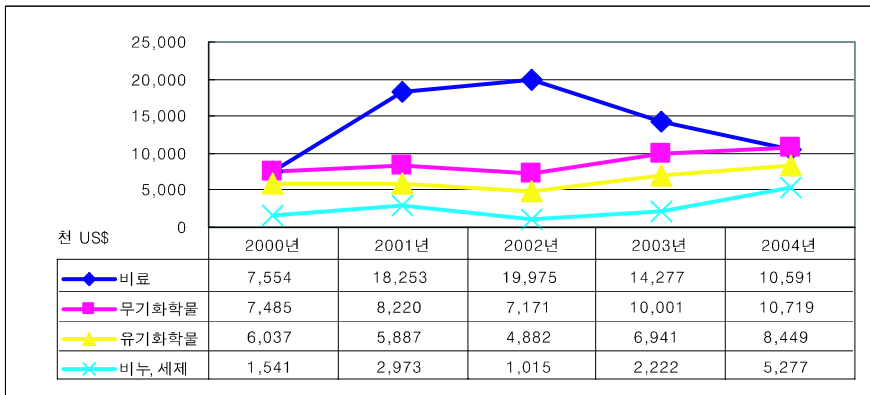
그림 3-16. 북한의 화공제품 수입총액 및 대중국 수입액 추이



주: HS 28~38류 수입통계.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그림 3-17. 북한의 대중국 주요 화공제품 수입액 추이



주: HS 28, 29, 31, 41류 수입통계.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표 3-13. 한국정부 차원의 대북 비료지원 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78,630	49,210	65,770	66,980	88,510

자료: 통일부.

3) 북·중간 변경무역

가) 변경무역의 추이와 특징

북·중간 무역을 설명함에 있어 변경무역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중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교역량에 있어서나, 거래품목 수에 있어서나, 참여기업 수에 있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변경무역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양국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교역하는 형태로, 거래품목이 다양하고 교역규모가 커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북·중 무역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 북·중 변경무역은 단둥, 지안, 창바이, 옌벤 등 10개 세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단둥세관은 북·중 무역을 담당하는 가장 큰 세관이다. 단둥세관은 1943년 건립되어 1973년 한 차례 보수작업을 한 후, 급증하는 북·중 무역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 2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대규모 증설 및 개·보수 공사를 하였다.

북·중 무역의 대부분의 물자가 이동하는 압록강 철교는 과거에는 10톤 이하 화물차량만 통과할 수 있었지만, 개·보수 이후 20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단둥세관을 통과하는 80%의 화물은 주로 압록강 철교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한편 단둥세관에서는 2004년 1월 20일부터 단둥~신의주 및 단둥~평양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매주 5회(월~금) 운행하고 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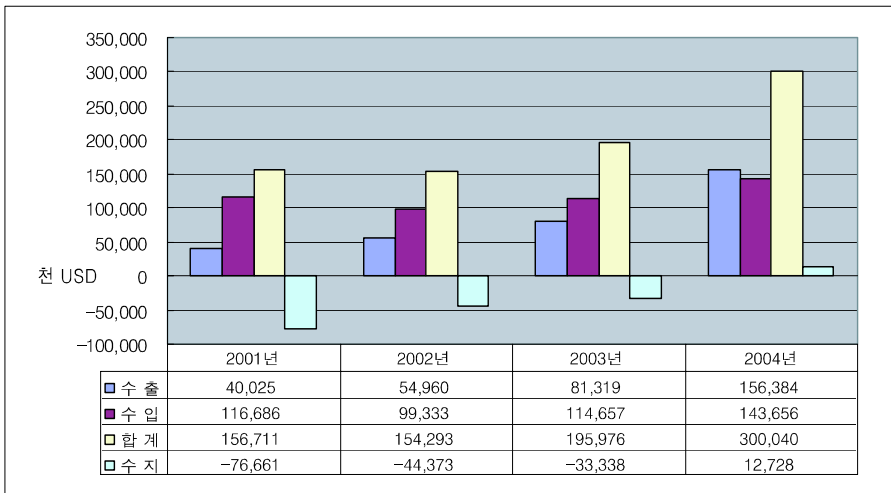
표 3-14. 북·중 무역과 변경무역 현황(1997~2003년 기준)

(단위: 억 달러)

연 도	북한 총 무역액	북·중 무역액	변경무역액	변경무역 대중수입액	변경무역 대중수출액
1997	21.7	6.5	2.1	1.5	0.6
1998	14.4	4.1	1.3	0.9	0.4
1999	14.8	3.7	1.0	0.7	0.3
2000	19.7	4.8	1.3	1.0	0.3
2001	22.7	7.37	1.56	1.16	0.4
2002	22.6	7.33	1.53	0.99	0.54
2003	23.91	10.23	1.96	1.15	0.81
2004	28.57	13.85	3.00	1.44	1.56

자료: 『중국세관통계』, 각 연도.

그림 3-18. 북·중 변경무역 추이



43) 『홍콩강신문』, 2004. 1. 20.

표 3-15. 북·중 변경무역을 담당하는 주요세관 현황 (2003년 기준)

중국 세관	북한 세관	등급	연간 화물통관 능력
단둥세관(도로·철도)	신의주세관	1급	-
투먼세관(철도·도로)	남양세관	1급	275만 톤
사튀쓰세관(도로)	새별세관	2급	10만 톤
난평세관(도로)	무산세관	1급	20만 톤
구청리세관(도로)	삼장세관	2급	10만 톤
싼허세관(도로)	회령세관	1급	15만 톤
카이산툰세관(도로)	온성세관	2급	10만 톤
취안허세관(도로)	원정리세관	1급	60만 톤
창바이세관(도로)	해산세관		-
지안세관	만포세관		-

자료: 『중국서부개발정보백과사전: 지린 연변권』, 연변인민출판사, 2003.

단둥세관은 북·중 무역에 있어 주요한 창구가 되고 있으며,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공업 기반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남포시 등 북한 서부지역과 가까이 있어 북·중 무역에 유리하다. 또한 신의주시에는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어 단둥세관은 다른 세관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변경지역 무역에서는 운송 인프라로서 압록강 철교뿐만 아니라 해상운송도 점차 중요한 교역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4년 압록강에서 변경무역 운송을 담당하는 북한 측 화물선은 2002년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단둥에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126개 무역회사가 전문적으로 대북무역을 하고 있다.⁴⁴⁾

한편 두만강유역에 위치한 연변지역에는 총 7개의 세관들이 있다. 연변과 접해 있는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은 석탄, 철강 등 흑색금속공업 생산기지이며 양강도는 중요한 목재의 산지다. 이러한 자원은 변경무역의 주요 거래품목이다. 7개 세관 중

44) 『홍룡강신문』, 2004. 1. 20.

훈춘시 취안허세관은 1998년 12월 17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비준을 받아 국가 1급 세관으로 승격되었다. 취안허세관이 담당하고 있는 통과화물량은 연간 60만톤 이상이며, 통과 인원수도 60만 명에 달하고 있다.⁴⁵⁾ 취안허는 지린성에서 북한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연길~나진~부산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화물선의 주요 운송통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점들로 취안허세관은 연변과 북한 간 변경무역을 위한 주요 창구가 되고 있으며, 국경지역 관광산업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단둥세관은 국가무역을 중심으로 변경무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 세관들은 변경무역을 위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상반기까지 연변지역 세관들은 북·중 변경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1993년 연변지역의 대북한 변경무역 총액은 3억 2,732만 달러에 달해, 같은 해 중국의 대북한 전체 변경무역액(6억 9천만 달러)의 5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기 들어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격하게 하락함으로써 연변의 대북한 무역도 대폭 감소하였다. 예컨대 1998년 연변지역의 대북한 변경무역은 같은 해 북·중간 전체 변경무역의 21%에 불과했다.⁴⁶⁾ 반면 단둥을 통한 변경무역은 1990년대 말부터 크게 증가하여 연변지역의 변경무역액을 훨씬 초과하였다. 2001년부터 단둥의 대북한 무역액은 2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같은 해 연변지역의 대북한 무역액은 6,833만 달러에 그쳐 단둥의 30% 수준에 머물렀다.⁴⁷⁾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변경무역은 중국 국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경무역에 참여하려 한다. 현재 변

45) 린지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46) 앞의 책.

47) 앞의 책.

경무역은 증치세(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각각 50%씩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물품이 변경무역을 통해 중국에 수출될 경우 일반무역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통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⁴⁸⁾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경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업도 대거 변경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변경무역권은 변경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무역회사에 제공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다른 지역 기업들이 임시사무실을 차려 놓고 무역권을 얻어 교역에 참여하는 형태도 많다. 그만큼 변경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표 3-16. 무역형태별 대중 수출 추이

(단위 :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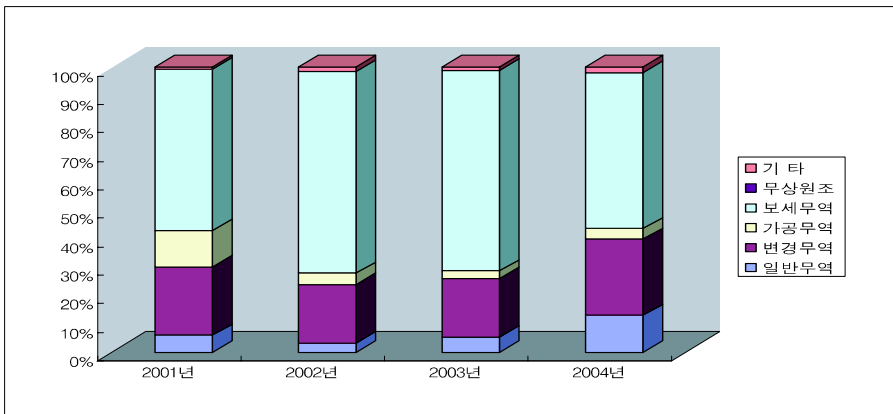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일반무역	9,717	5.8	8,842	3.3	20,880	5.3	75,000	12.8	252.2
변경무역	40,025	24.0	54,960	20.3	81,319	20.6	156,384	26.7	92.3
가공무역	21,175	12.7	10,990	4.1	10,333	2.6	21,684	3.7	109.9
보세무역	94,861	56.9	191,903	70.8	278,268	70.4	321,119	54.8	15.4
무상원조	-	-	-	-	-	-	26	0.004	-
기 타	1,019	0.6	4,168	1.5	4,544	1.1	11,446	2.0	151.9
총 계	166,797	100.0	270,863	100.0	395,344	100.0	585,703	100.0	48.2

자료: 중국해관총서.

48) 현재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2%, 평균 증치세율은 1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변경 무역을 통한 경우, 일반무역을 통한 것보다 14% 가량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들어 북·중간 변경무역에 주어지던 세제감면 혜택이 축소·폐지되고 있다. 중국의 라오닝성과 지린성 정부는 2003년 변경무역 관련세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했다. KOTRA, 「경제속보」, 2004. 10. 29.

북·중 무역에서는 교역의 형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4년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변경무역 및 일반무역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2002년과 2003년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에서 보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했으나, 2004년 들어서는 50%대로 떨어졌다. 반면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은 크게 증가하면서 대중국 수출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그림 3-19 무역형태별 대중 수출비중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한편,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대중 수입에서는 일반무역, 변경무역, 무상원조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가공무역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일반무역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변경무역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과 달리 수입에서 일반무역이 전체 교역의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북한 중앙당국의 수입계획에 따른 대중국 물자조달이 일반무역의 형태를 띠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변경무역에 의한 대중 수입은 국경지역의 소규모 기업과 무역회사가 북한과 소규모로 물자를 거래하는 것으로서, 대금결제상의 한계로 인해 수출과 균형을 맞추면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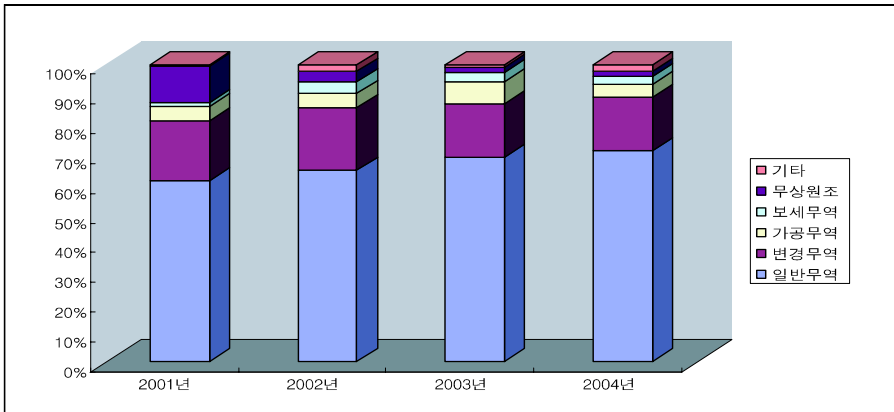
표 3-17. 무역형태별 대중 수입 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일반무역	347,038	60.8	300,314	64.3	431,269	68.7	566,243	70.8	31.3
변경무역	116,686	20.4	99,333	21.3	114,657	18.3	143,656	18.0	25.3
가공무역	26,293	4.6	22,481	4.8	44,892	7.2	35,165	4.4	-21.7
보세무역	8,727	1.5	19,038	4.1	20,439	3.3	20,844	2.6	2.0
무상원조	69,129	12.1	15,968	3.4	10,888	1.7	14,556	1.7	33.7
기 타	2,787	0.5	10,175	2.2	5,438	0.9	19,032	1.8	250.0
총 계	570,660	100.0	467,309	100.0	627,583	100.0	799,503	100.0	27.4

자료 : 중국해관총서.

그림 3-20. 무역형태별 대중 수입비중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호.

나) 변경무역의 품목구조

변경무역을 통한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은 광물 및 철강, 목재 등으로서 대부분 천연자원이거나 1차 가공품들이다. 최근 주요 수출대상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철강의 경우 전년보다 149.6%나 증가하였다.

표 3-18.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출품목(HS 2단위)

(단위 : 천 달러, %)

HS	품 목	'03 상반기	'03 하반기	'04 상반기	증감률
03	어패류	881	2,789	2,437	176.6
26	광, 슬래그, 회	3,574	5,389	10,981	207.2
27	광물성 에너지	1,199	4,261	3,790	216.1
44	목재	4,931	8,658	9,303	88.7
72	철강	15,819	26,871	39,484	149.6

자료: 중국해관총서.

보다 세부적인 수출품목을 보기 위해서, 주요 수출품목을 HS 6단위로 구입하면 [표 3-19]와 같다.

표 3-19. 변경무역을 통한 주요 대중 수출품목(HS 6단위)

(단위 : 천 달러, %)

HS	품 목	'03 상반기	'03 하반기	'04 상반기	증감률
030749	오징어 기타	1,225	1,390	2,240	82.3
260111	철광석	330	1,543	7,079	2045.2
261690	은과 그 정광	892	872	1,327	48.8
270111	무연탄	1,865	1,781	2,692	44.3
271119	무연탄 기타	693	352	1,056	52.4
440391	참나무류 원목	196	1,783	2,584	1218.4
440399	기타 원목	247	835	3,133	1168.4
720110	비합금 선철	4,494	7,517	21,154	370.7
720449	철 스크랩	2,807	7,255	7,767	176.7
720450	철 스크랩 잉곳	112	840	2,010	1694.6
720712	저탄소철 블룸	2,542	900	1,195	-53.0
720719	저탄소철 기타	1,684	1,078	2,098	24.6
720720	고탄소철	1,920	3,370	1,561	-18.7

자료: 중국해관총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72류의 품목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품목들이 1백만 달러 이상의 거래규모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교역품목 리스트를 보면, 보세무역 및 일반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은 비교적 적은 데 비해 변경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은 상당히 많으며, 거래금액의 분포도 다양하다. 이는 변경무역이 여타 무역방식에 비해 북한 내부의 경제상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20.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입품목(HS 2단위)

(단위 : 천 달러, %)

HS	품 목	'03 상반기	'03 하반기	'04 상반기	증감률
10	곡물	12,154	10,329	5,736	-52.8
11	곡물의 분과 조분	3,076	2,545	3,703	20.3
27	광물성 에너지	9,548	10,882	9,599	0.5
72	철강	611	1,093	1,497	145.0
73	철강제품	854	815	1,039	21.7

자료: 중국해관총서.

[표 3-20]는 변경무역을 통한 대중 수입품목으로서 2004년 상반기에는 곡물 도입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전까지의 북·중 변경무역을 보면, 북한은 광물 및 금속을 수출하고 곡물 및 코크스탄을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그러나 2004년 들어서는 정미의 수입이 급감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⁴⁹⁾ 반면 이들 곡물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밀가루(369만 달러, 전년동기 대비 22.0% 증가) 및 대두 추출물(223만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5.1% 증가) 등의 수입은 늘어났다.

49) 한국은행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최근 곡물 수급불균형은 국제곡물가격 급등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의 곡물부족이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4. 7. 9.

표 3-21. 변경무역을 통한 주요 대중 수입품목(HS 6단위)

(단위 : 천 달러, %)

HS	품 목	'03년 상	'03년 하	'04년 상	증감률
030551	신선 냉장 문어	866	1,811	619	-28.5
100630	정미(쌀)	11,394	9,868	4,696	-58.8
110100	밀가루	3,020	2,522	3,685	22.0
230400	대두 추출물	731	973	2,230	205.1
270112	유연탄	4,496	6,882	5,168	14.9
270400	(반성) 코크스	2,857	812	1,236	-56.7
540742	염색한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279	438	1,243	345.5
690890	타일	372	834	923	148.1

자료: 중국해관총서.

나. 투자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1억 7,35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03년의 130만 달러에 비해 130배 폭증하였다. 2000년대부터 중국의 일부 기업이 북한의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 투자열기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4년 중국의 여러 성에서 대북한 투자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대북 투자열기가 일어나고 있다.

2004년 11월 18일 중국 선양시 칠보산호텔에서 열린 라오닝성 선양시 기업가 협회 주최 “대북한 투자설명회”에는 중국내 기업인 5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⁵⁰⁾ 또한 중국의 북경조화우련문화교류유한공사(北京朝華友聯文化交流有限公司)는 북한관광총국의 위임을 받아 중국 기업의 대북 상업시찰 등 업무를 주관하는 중국 민영주식회사로 중국 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대북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대북투자대상산업 목록을 보면 중국 기업의 북한투자 관심분야의 일면을 볼 수 있다.

50) 『연합뉴스』, 2004. 11. 4.

표 3-22. 북경조화우련문화교류유한공사의 북한 투자대상산업 목록

- 1) 채광 산업
 - 송천광산 : 납, 아연, 구리, 니켈
 - 리원광산 : 운모(활석)
 - 창도광산 : 중정석
 - * 신설투자분야 : 금, 동, 몰리브덴, 티타늄, 규조, 탄화칼슘, 리튬
- 2) 전력 산업
 - 수력, 화력, 변전소 및 전력 수송 네트워크
 - * 신설투자분야 : 수력발전소, 500kV 이상 고전압수송전선, 중소형발전소
- 3) 석탄광
 - 기존의 석탄광산 개조
- 4) 화학공업 산업
 - 남흥 청년화공연합체 : 비료공장
 - * 신설투자항목 : 요소공장(1백만톤), 소다공장(10만톤), 인조레이온공장(5만톤), 제초제공장(1만톤), 살충제공장(1만톤), 염료공장 (5천톤), 도료공장(2만톤), 색소공장(1만톤), 폴리에스테르섬유공장(2만톤), 화학섬유·펄프공장(2만톤), 고무공장, 유류가공공장, 플라스틱공장, 재생타이어공장
- 5) 경공업
 - 섬유공장, 직조공장, 양말·피혁·운동화·견사공장, 자전거·오토바이공장, 자기공장, 담배공장, 의복공장
- 6) 농업분야
 - 육류·우유가공공장, 식품가공공장, 누엣장(10만畝), 벼, 옥수수, 과일
- 7) 수산분야
 - 어류·해조류가공공장, 조산업
- 8) 금속기계가공
 - 김책강철연합체, 강선강철연합체, 태안중형기계공장, 령상기계연합체
- 9) 호텔투자
 - 류경호텔
- 10) 부동산, 도시개발

자료 : 북경조화우련문화교류유한공사 홈페이지.

북한도 중국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열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2005년 2월25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조우호협회의 요청으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급관원들이 베이징의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조선투자환경설명회’를 가졌다.⁵¹⁾

현재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동북3성과 남방지역 기업들이 주로 투자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 수는 120여개이며 항저우 와하하집단, 허난성 일타집단,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 창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대련화흥집단, 화풍집단, 창춘 이달공모유한회사, 장춘만달제약,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산둥성 초금집단 등 비교적 큰 기업체들이 있다. 특히 중국 남방지역 민영기업들이 대북투자에 굉장한 열증을 보이는데, 저장성 원저우 상인들로 꾸려진 중쉬그룹은 2003년 북한 최대백화점인 평양제일백화점내 일부 매장의 영업권을 따내고 인민폐 5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내부장식을 마쳤다고 한다.⁵²⁾

푸젠성의 7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투자시찰단은 2004년 8월 31일 북한을 방문하고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북한내 무연탄공장 건설과 플라스틱공장 건설에 총 1,17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며 합작 상담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저장성 원저우시에서도 2004년 7월 북한 투자설명회가 열렸고 같은 해 11월 16일 중국 쓰촨성의 31개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 투자무역사절단이 북한 대외무역성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투자 무역환경에 대한 조사와 파트너 발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중국 기업들이 북한 자원개발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일부 투자기업들은 북한의 광산개발 영역에서 합작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

51)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집행국 국장인 김정빈이 북한의 투자환경, 절차 및 우대정책과 20개 대외유치 중점항목을 설명하였다.

52) 위의 책.

려지고 있다. 2003년 엔벤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는 북한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 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고 엔벤의 난핑세관을 통하여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이 기업은 2004년 60만 톤의 철광분을 수입하였고, 2005년에는 2백만 톤의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철광분 수송을 위하여 3,5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무산광산으로부터 난핑제련소로 통하는 13km에 달하는 철광분 수송관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³⁾

표 3-23. 중국의 대북 투자 현황

연번	투자분야	투자규모	자료출처	비고
1	컴퓨터	130만 달러	2003년 8월 KOTRA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Nanjing xiongmao dianzi jituan youxian gongsi, 난징 시옹마오 디엔즈 지투안, 南京熊猫电子集团有限公司, Nanjing Panda Electronics Co. Ltd.),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 합자,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 설립
2	슬레이트	미상	2003년 11월 연합뉴스	지린성방직수출입공사 (Jilinsheng fangzhi shuchuru gongsi, 지린성 팡즈 슈추루 공스, 吉林省紡織輸出入公司) 및 장춘영초 과학주식유한회사 공동, 투자규모 및 위치 미상
3	유리공장	2,400만 달러	2004년 3월 연합뉴스	2004년 2차 6자회담 관련 중국의 대북 원조 성격, 평남 대인군에 중국의 요화유리집단공사(Yaohua liuli jituan gongsi, 야오화 리우리 지투안, 耀华玻璃集团公司)가 건설. 용해장 기초굴착 45% 완성 보도(조선중앙통신 2004. 8. 16)

53) 『연변일보』 2004. 10. 20.

[표 3-23 계속]

연번	투자분야	투자규모	자료출처	비고
4	트랙터	미상	2004년 7월 흑룡강신문	허난성 중국일타집단(Yituo jituan, 이투어 지투안, 一拖集團) 유한공사, 조선금성 트랙터 공장 간 시행계약 체결
5	무연탄, 플라스틱 등	1,170만 달러	2004년 8월 연합뉴스	푸젠성 무역사절단 방북관련 보도, 합작 상담 진행중
6	백화점 운영	5천만 위안 (약 6백만 달러)	2004년 8월 KOTRA	선양 중취그룹(Zhongxu jituan, 中旭集團) 및 평양 제1백화점. 수입관세 5%, 소득세 5%만 부과하는 특혜
7	황금채굴 및 제련	미상	2004년 9월 荊南日報	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zhaoyuan shandong guoda huangjin gufen youxian gongsi, 짜오위엔 산둥 귀따 황진 공스, 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 조선대경추 간 MOU 체결, 북한의 산농산 금광 개발 관련 합작투자 논의
8	담배, 의류, 무역	2천만 달러	2004년 11월 KOTRA	지린성 상무청 관계자가 성내 대북 투자 기업 9개사가 총 2천만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다고 언급
9	운송	7억 위안 (약 8,500만 달러)	2004년 11월 연합뉴스	원저우 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 (Leqing kuaisu qichefuwu youxian-gongsi, 리칭 청진공스, 乐清盛金快速汽车服务有限公司)와 북한 조선올림수합영회사 합작
10	동광 개발	2억 2천만 위안 (약 2,680만 달러)	2005년 1월 연합뉴스	창바이자오진광업주식유한회사(Changbai zhaojin kuangyezhusi youxianhuishe, 창바이 짜오진광에 공스, 長白招金鑛業株式有限會社) (지린성 창바이 현+山東省招金集團 공동) 설립, 양강도 헤산청년동광 개발

[표 3-23] 계속

연번	투자분야	투자규모	자료출처	비고
11	자전거 생산	미상	2005년 7월 연합뉴스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중국천진 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가 공동으로 평진 자전거합영회사(平津自行車合營會社) 설립하고 20년간 자전거 생산 독점권 부여
12	백화점 운영		2005년 8월 동방조보	저장성 東陽國匯무역유한공사가 북한 최대백화점인 평양제일백화점내 3개층의 경영권 취득
13	탄광 개발		2005년 10월 길림일보	평안북도에 위치한 용등탄광과 중국 비철 금속 관련 대기업인 五礦集團이 석탄시굴 관련 합자회사 설립기로 합의
14	철도 운송	3천만 위안 이상	2005년 11월 흑룡강신문	단둥시 정부의 주선으로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등 기업이 선양철도국 단둥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 단둥철도역 및 북한 철도성과 합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15	철광 광산 개발	70억 위안	2005년 11월 중앙일보	지린(吉林)성내 3개 기업인 통화(通化)철강그룹, 연변텐츠(延邊天池)공사, 중강(中鋼)그룹이 동북아 최대 철강석 광산인 무산(茂山)철광 50년 개발권 획득. 중강그룹 등이 전기·기계설비·기술을 제공해 합작으로 개발된다. 3개 중국 기업은 이를 위해 최소 70억 위안(약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 이 가운데 50억 위안은 광산개발 자체에 투입되고, 20억 위안은 지린성 통화에서 무산에 이르는 철도·도로 등 수송시설 건설에 쓰일 예정

[표 3-23 계속]

연번	투자분야	투자규모	자료출처	비고
16	극세 아연분말 생산	미상	2005년 12월 길림일보	지린시 大成 경제무역유한회사와 북한직업 총동맹 산하 文水회사가 합자하여 ‘吉林 省普利玛金属有限公司’ 설립. 북한과 중국 이 3:7의 비율로 출자한 이 회사는 북한 의 극세 아연분말생산기술을 도입하여 고 순도의 아연분말을 생산할 예정

주: 중국의 對北투자 관련, 국내외 언론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 작성한 것임.

무산광산은 아시아에서도 큰 철광생산지로서 12억톤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고, 연간 생산능력이 8백만톤으로서 북한의 가장 큰 철광산이다. 지린성에서는 이 투자항목을 크게 중요시하고 수입된 철광분을 통화강철공장에 공급함으로써 지린성의 강철생산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무산광산의 생산라인 가동을 위하여 창바이세관과 린장세관을 통하여 매년 70여만 달러 규모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린성 창바이에서는 산둥성 초금집단과 합작으로 북한 양강도에 위치한 ‘혜산청년동광’에 2억 2천만 위안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강도 혜산광산은 아시아에서도 비교적 큰 동광으로 평균 동 함유량(1.6%)이 중국 동북지역 동광석(0.8%)의 두 배에 달해 높은 경제효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⁵⁴⁾

이외에도 2005년 2월 25일 북경 대외우호협외에서 개최된 ‘조선투자설명회’에 참가한 중국 광산개발회체들은 북한의 폴리브텐 채굴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만톤 이상의 폴리브텐을 채굴, 중국으로 전량 수출을 희망하는 中鋼集

54) 『흑룡강신문』, 2004. 11. 19.

團의 참석자는 북한측 담당자와 개별상담을 하였으며, 西部鑛業股分有限公司의 참석자는 몰리브덴 채굴권의 공개입찰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북측으로부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지린성은 북한의 회령금광, 만포아연·철강에 관심이 있으며, 2005년내에 북측과 세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⁵⁵⁾

어업자원에 대한 합작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북경중합화학무역공사는 어업영역에서의 공동협력계약을 체결하였데, 이 계약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인 원산 앞바다를 중국 어선에 개방하여 2009년까지 5년간 입어로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는 조건으로 중국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였다고 한다. 이 계약에 따라 150톤급 저인망 어선 16척과 냉동선 1척,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중국 선단이 북한 원산항에서 50마일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⁵⁶⁾

셋째, 제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최대 농업기계 제조업체인 허난성 일타집단 대표단이 지난 2003년 11월 북한 금성트랙터공장을 방문, 트랙터 조립, 디젤엔진, 오일펌프 등 영역에서의 합작 생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 합작 초기에는 트랙터 등 농업관련 설비를 수출하고 향후 부품을 수출하여 연간 3천대 규모로 조립 생산할 계획이며 향후 공정 기계, 자동차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⁵⁷⁾

중국 지린성 방직수출입공사와 창춘 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가 공동으로 북한에 투자하여 세운 슬레이트공장도 현재 생산 중에 있다. 북한은 건축자재 재원이 풍부하나 기술·자금상의 여건으로 슬레이트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5) 『경제관찰보』, 2005. 4.

56) 『연합뉴스』, 2004. 9. 7.

57) 『하남일보』, 2004. 3. 23.

중국의 기술과 자금이 도입되어 좋은 경제적 효과를 이루고 있다.⁵⁸⁾ 선양 조선족 기업인 화신그룹은 2002년 북한에 젓가락공장과 두부공장을 세웠으며, 연변 담배 공장에서도 북한에 합작공장을 세워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넷째, 중국 기업의 대북투자는 경영권 목적이 아니고 보상무역, 합작투자 형태가 위주라는 점이다. 대부분 북한투자 중국 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으며, 북한의 투자제도나 거래관행에 순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 무산광산 간의 합작, 산둥성 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청년동광’ 간의 합작 등 투자항목을 보면 모두 보상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푸젠성의 북한 무연탄광산에 대한 투자도 중국측 기업이 15톤급 트럭 20대, 지게차 3대, 디젤 100톤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매달 1만톤의 무연탄을 제공하는 형식이다.⁵⁹⁾ 이러한 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투입산출 주기가 짧으며 상호 해산도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합작방식은 무역의 일종이지, 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⁶⁰⁾ 보상무역 형태의 투자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엄격한 의미에서의 투자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여 상호 신용만 잘 지키면 현재 북한 상황에 맞는 경제합작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투자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3월 22~27일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의 중국방문 기간 중 북·중간에 「투자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주의를 끈 바 있다.

58) 『연합뉴스』, 2004. 11. 26.

59) 『연합뉴스』, 2004. 11. 25.

60) 엄격한 의미에서 투자란 기업재산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분의 소유권을 가지는 동시에 기업경영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대북투자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정부 차원의 대북투자는 북한 남포시에 유리공장을 세운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중국 국무원 우의 부총리가 방북하여 남포친선유리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공장은 중국 정부가 2,400만 달러 정도를 무상투자하여 중국의 설비와 기술, 기술자들을 지원하여 건설하였으며, 연간 생산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1954년 건설한 남포유리공장의 연간 생산규모는 판유리 820만㎡를 비롯하여 강질유리, 광학유리, 각 종류의 병, 기타 고급유리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공장의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중국의 무상원조로 새롭게 공장을 건설한 것인데, 연간 생산능력은 판유리를 중심으로 기존 공장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북이 성사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연계, 경제지원, 기업의 투자확대 등 다양한 경제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린성 정부는 북한의 나진과 훈춘을 연결하는 도로공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나진항 제3부두를 임차한다는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중국의 동북3성, 특히 지린성은 바다와 연결돼 있지 않아 교통운송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맺은 계약이 성사된다면 지린성의 동해 진출이 대단히 용이해질 전망이며, 한국과 일본 간 경제적 연계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이외에도 요령성 정부 차원에서 압록강 철교를 새로 건설하는 문제와 도로·교량을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증대되는 데 대비하는 목적도 있지만, 장차 한국과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도 있다.

다. 원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중국의 대북지원
은 한국전쟁이 발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한국전 당시 전쟁에 시급히 필요한 다량의 물자를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
하였으며, 특히 중화구제총회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 등을 지원하였다. 정전 후
1953년 11월 김일성은 북한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여 11월 23일
중·북 양국간 「경제 및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⁶¹⁾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은 전후복구기(1954~56년)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
적으로 이루어졌다. 1957년부터 제1차 5개년계획에 돌입한 북한은 자체 공업발전
을 위한 경제기반 구축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대외원조와 지원을 요구하
였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요청으로 1958년 9월과 1960년 10월 3개의 무이자 차
관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에 제공할 항목과 물자를 구체화하였다. 1958~63년 중국
은 방직나염공장, 시멘트부대공장, 베어링공장, 제당공장, 계전기공장, 온도측정계
기공장, 진공관공장 등 29개 항목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을 제공하였다.⁶²⁾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기간 중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경제토
대를 강화하는 데 있어 소련 다음으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64년 이후에도 중
국은 북한에 플랜트, 물자와 현물환 원조를 제공하였으며 공업직물공장, 제당공장,
장재냉간압연 설비, 발전소, TV방송국 설비 등 25개 항목의 건설을 지원하였다.⁶³⁾

1970년 10월 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중·북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
하였다. 이때 중국은 북한에 새로운 경제원조차관을 제공하였으며, 2개의 20만kW

61)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62) 앞의 책.

63) 앞의 책.

의 화력발전소, 기름펌프 공장, 극초단파진공관 공장, 해주제지 공장, 사리원 직조 공장, 방송국 설비, 평양지하도 설비 등 16개 중대형 항목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특히 북한 에너지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중국이 북한에 지원한 전력공업 주요항목으로는 1967년 건설한 만포화력발전소, 1968년 건설한 회천화력발전소, 22.4만kW의 용량을 가진 청천강 화력발전소를 들 수 있다. 청천강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대외원조 중 가장 큰 규모로, 4개의 수관 중 2개의 냉관에서 5만kW의 기류가 발전되는 것을 포함하여 총 20만kW에 달한다. 청천강 발전소의 설계와 설비는 모두 중국이 담당하였으며, 장비설치와 초기운영도 중국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⁶⁴⁾

중국이 원유산업시설을 지원한 대표적인 공장으로 봉화 화학공장을 들 수 있는데, 이 공장은 150만톤의 원유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공장 역시 설계와 설비, 재료를 전적으로 중국측에서 맡았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 항공정유, 정제정유, 석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지원은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첫째 무상지원, 둘째, 국제시장가격 절반 수준으로의 제공, 셋째 대체물자로의 상환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북한 철강공업에서 핵심적 원료의 하나인 코크스탄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든가, 아니면 북한의 무연탄과 맞바꾸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철도부문을 들 수 있다. 1950~60년대에는 파괴된 철로와 철도시설 장비가 주로 제공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평양지하철 건설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⁶⁵⁾

64) 앞의 책.

65) 앞의 책. p. 32.

평양지하철은 기본선과 보조선, 연락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2개조의 객차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18개의 정류장과 2개의 주차장, 그리고 34km의 철로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지하철 건설에서 중국측은 객차 등 차량과 조종설비, 부분재료, 설비설치와 전문가 기술지도를 맡아 수행하였다.

중국은 국내에서 전동객차, 집중조도, 신호등 자동정차, 변압, 리모컨 등의 설비를 전국 3백개 공장에서 제작하였다. 평양지하철 건설에 중국은 총 3.6만 톤의 설비재료와 112대의 전동객차, 자동운송기 50대, 전력·통풍·배수·통신장치, 주차장 설비 등 주요설비 8천대와 철근 1.02만톤, 전선 1,300km 등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였으며, 이 지하철 건설에 동원된 중국 기술자는 2백여 명에 달하였다.⁶⁶⁾

중국은 1991년 10월 북한 김일성의 방중을 계기로 125만톤의 석유 제공과 미화 30억 1,3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원조를 약속하였다.⁶⁷⁾ 그러나 1995년 이후 중국의 대북 외교정책 중심은 대북 ‘실리외교’에서 전략외교로 전환하였다. 현재 중국은 자신의 국가목표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 북한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한 외교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실리외교는 북·중간 정치·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간 경제관계의 규모와 성격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1992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화결제 요구와 1994년 식량무상지원 중단은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면서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로 1990년대 들어 조금씩 증가하던 북·중 무역은 중국의 대북 실리외교의 영향을 받아 1993년을 최대치로 하여 1994년 이후

66) 앞의 책, p. 32.

67)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p. 338.

다시 감소한다. 그러나 1995년을 지나면서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상황에서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대북 접근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되자,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대북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1996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다시 모색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동맹외교’로의 복귀가 아니라 중국의 정치전략적 이익이 내포된 새로운 ‘전략외교’로의 전환으로 보인다.

1996년 5월 홍성남 북한 정무원 부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중·조 경제기술 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⁶⁸⁾ 이 협정은 첫째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매년 식량 50만톤, 석유 120만톤, 역청탄 150만톤을 제공하며, 둘째 이 가운데 받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받은 국제가격의 3분의 1로 하며, 셋째 기타 소비재도 80%는 우호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⁶⁹⁾

경제적 지원과 협력 외에도 중국은 1996년 5월 이후 북한과 정치·군사적 목적의 상호 방문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기존의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리펑 총리는 1996년 7월 중국을 방문한 김윤혁 북한 정무원 부총리 일행에게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정책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 최고지도자들의 상호 왕래에 의해 경제지원 규모와 방식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북한 지원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시기를 보면 대부분 북한 최고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거나, 반대로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에 일어나곤 하였다. 1950년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김일성의 중국방문 때, 대규모 경제지원이 있었고, 1980년대와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68) 앞의 책. p. 35.

69) 앞의 책. p. 35.

1990년대에 소원해졌던 북·중 경제관계는 수차례에 걸친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중간 무역은 급신장을 보여 현재는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북투자도 제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2005년 11월 중국 최고지도자인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부에서는 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대상에 어떤 형태, 어떤 조건으로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과거 두 나라 지도자의 상호방문 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경제지원에 바탕을 둔 북·중간 우호협력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의미도 없지 않다. 즉,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개입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위기 속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증대될 경우, 그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 역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대북원조 추이를 보면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지원이 줄어들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늘어나고, 반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늘어나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금액상으로도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큰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상원조가 양국 고위층의 상대국 방문시 북한에 선물 형식으로 주어지는 등 부정기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⁷⁰⁾

2004년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1,460만 달러, 같은 해 한국 정부와 민간의

대북 무상지원액은 2억 5,620만 달러로, 중국의 대북지원액은 한국의 5.7%에 불과하다.⁷¹⁾

표 3-24. 중국의 대북한 원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북한 수출	534.7	355.7	328.7	450.8	573.1	467.7	395.3	585.7
원조 · 증여	34.4	32.0	48.4	27.6	69.1	16.0	10.9	14.6

자료: 무역진흥공사의 중국무역통계.

표 3-25. 국가별 정부차원 대북지원액 비교(1995. 6 ~ 2004. 7)

(단위: 만 달러)

국가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UN기구 (2004년 말)	한국 (2004년 말, 곡물차관 포함)
대북지원액	67,829	65,000	34,000	25,000	25,000	131,109	99,493

자료: 통일부, 연합뉴스, 2004. 9. 2.

70) 예를 들어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중국방문 후 중국은 북한에 코크스 40만 톤, 식량 15만 톤(총 5천만 달러)을 무상원조했다. 2001년 9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북시에는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지원했다(톤당 가격을 옥수수 100달러, 쌀 270달러, 디젤유 300달러로 적용할 경우, 옥수수와 디젤유 제공시 2,900만 달러, 쌀과 디젤유 제공시 6,300만 달러). 2002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15)을 맞아 북한에 5천만 위안(약 600만 달러, 1 달러=8.3위안)에 상당하는 물자를 무상원조했다.

71) [표 3-25]를 보면 여러 국가 중 한국 정부가 대북지원에서 최대공여국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식량차관을 포함시켜 계산할 때 1인당 매년 약 3,600원을 대북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된다.

표 3-26. 연도별 최대 식량공급국가 및 전체 도입량에서의 비중

(단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가	일본	중국	중국	미국	미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비중	39	52	53	45	56	50	36	50	63	59

주: 전체 도입량은 수입과 지원의 총합을 의미함.

자료: KOTRA, 각 연도 종합.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2001년 6,912만 9천 달러를 정점으로 지금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인 것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한 예로 중국은 2004년 착공된 남포시 대안친선유리공장 신축비로 2,400만 달러를 무상지원한 바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중국 채무도 중국의 차관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상계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개되지 않은 중국의 대북지원 규모는 훨씬 클 수도 있다.

향후, 중국 정부의 지원하에 북·중간에는 대규모 연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3.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평가

소련·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서방의 대북한 경제제재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생산과 소비, 유통과 자금조달 등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산업에 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산업생산 전반에 있어 대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정확히 정량적으로 산출해 내기는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을 평가해 보려고 한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무역특화지수는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지수로 사용될 수 있는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1에 가까울수록 무역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²⁾

표 3-27.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품목군 분류기준

품목군	기 준	설 명
제1품목군	$TSI_i \geq \overline{TSI}$	수출특화 품목군
제2품목군	$TSI_i < -0.9$	절대 수입특화 품목군
제3품목군	$-0.5 \leq TSI_i < \overline{TSI}$	경쟁력 취약 품목군
제4품목군	$-0.9 \leq TSI_i < -0.5$	절대 경쟁력 취약 품목군

주: $\overline{TSI} = (\sum_{i=1}^n TSI_i) / n$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상품(HS 코드 두 자리)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한 결과가 [표 3-28]에 제시되어 있다.

72)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8부터 2004년까지를 기준으로 대중 무역특화지수(TSI_i)를 이용하였다.

$$TSI_i = \frac{X_i - M_i}{X_i + M_i}$$

여기서 i는 품목이며, X는 북한의 대중 수출액, M은 북한의 대세계 수입액을 의미한다. TSI_i 값에 따라 각각의 산업을 4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3-21]에서 제1품목군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으로 FTA 협상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아도 될 품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2품목군은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제3품목군과 제4품목군은 각각 북한의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상태로 외국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품목과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8 계속]

광물성 생산품	25	토석류·소금	-0.8	-0.8	-0.9	-0.7	-0.4	-0.5	-0.5
	26	광, 슬래그, 회	0.4	-0.3	0.1	0.9	0.9	1.0	1.0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1.0	-0.9	-0.9	-0.9	-0.9	-0.8	-0.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28	무기화합물	-0.9	-1.0	-1.0	-1.0	-1.0	-1.0	-0.9
	29	유기화합물	-1.0	-1.0	-1.0	-1.0	-1.0	-1.0	-1.0
	30	의료용품	-1.0	-1.0	-1.0	-1.0	-1.0	-1.0	-1.0
	31	비료	-1.0	-1.0	-1.0	-1.0	-1.0	-1.0	-1.0
	32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1.0	-0.9	-1.0	-1.0	-0.9	-1.0	-1.0
	33	향료·화장품	-1.0	-0.8	-1.0	-1.0	-0.6	-1.0	-1.0
	34	비누, 계면활성제·왁스	-1.0	-1.0	-1.0	-1.0	-1.0	-0.9	-1.0
	35	카세인·알부민· 변성전분·효소	-1.0	-0.7	-1.0	-1.0	-1.0	-1.0	-1.0
	36	화학류·성냥	-1.0	-1.0	-1.0	-1.0	-1.0	-0.9	-
	37	필름인화지 사진용 재료	-1.0	-1.0	-1.0	-1.0	-1.0	-1.0	-1.0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0	-1.0	-1.0	-1.0	-1.0	-1.0	-1.0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0	-0.9	-0.8	-1.0	-1.0	-0.9	-0.9
	40	고무와 그 제품	-1.0	-1.0	-1.0	-1.0	-1.0	-1.0	-0.9
원피, 가죽, 모피 및 이들의 제품	41	원피·가죽	-0.2	-0.9	-0.8	-0.5	-1.0	-1.0	0.3
	42	가죽제품	-1.0	-1.0	-1.0	-0.9	-1.0	-0.6	-0.9
	43	모피, 모피제품	-0.2	0.3	0.0	0.5	-0.1	-0.5	-0.9
목재와 그 제품	44	목재·목탄	1.0	1.0	0.8	0.7	0.8	0.9	0.9
	45	코르크·짚	1.0	1.0	1.0	-1.0	-	-1.0	-
	46	조물재료의 제품	1.0	-	-1.0	0.3	-0.1	0.8	0.8

[표 3-28 계속]

펠프 및 종이	47	펠프	-0.4	-0.6	-1.0	-0.8	-0.7	-1.0	-0.9
	48	지와 판지	-1.0	-1.0	-1.0	-1.0	-1.0	-0.9	-1.0
	49	서적·신문	-2.0	1.0	0.8	-1.0	-1.0	-1.0	-1.0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50	견	1.0	1.0	1.0	1.0	1.0	1.0	1.0
	51	양수·수모	-0.9	-1.0	-1.0	-1.0	-1.0	-1.0	-1.0
	52	면	-1.0	-1.0	-1.0	-1.0	-1.0	-0.9	-1.0
	53	기타 식물성 식물	-1.0	-1.0	-1.0	-1.0	-1.0	-1.0	-1.0
	54	인조필라멘트 섬유	-1.0	-1.0	-1.0	-1.0	-1.0	-1.0	-1.0
	55	인조스테이플 섬유	-1.0	-1.0	-1.0	-1.0	-1.0	-1.0	-1.0
	56	위딩·부직포	-1.0	-1.0	-1.0	-1.0	-1.0	-1.0	-1.0
	57	양탄자	-1.0	-0.9	-1.0	-1.0	-1.0	-0.7	-1.0
	58	특수직물	-1.0	-1.0	-1.0	-1.0	-0.8	-1.0	-0.8
	59	침투·도포한 직물	-1.0	-1.0	-1.0	-1.0	-1.0	-1.0	-0.9
	60	편물	-6.0	-1.0	-1.0	-0.9	-1.0	-1.0	-1.0
	61	의류(편물제)	-0.7	-1.0	-1.0	-1.0	-0.2	-0.2	-0.1
	62	의류(편물제 이외)	-1.0	-1.0	-1.0	-1.0	-0.9	-0.9	-1.0
	63	기타 섬유제품·넙마	-1.0	-1.0	-1.0	-1.0	-0.9	-0.9	-1.0
신발류, 모자류 등	64	신발류	-1.0	-1.0	-1.0	-1.0	-1.0	-1.0	-1.0
	65	모자류	-1.0	-1.0	-1.0	-1.0	0.7	-0.5	-0.3
	66	우산·지팡이	-1.0	-1.0	-1.0	-1.0	-1.0	-1.0	-1.0
	67	조제우모·인조제품	-	-1.0	-1.0	-1.0	-1.0	-1.0	-1.0
석·플라스틱·시멘트·도자·유리 제품	68	석, 시멘트, 석면제품	-1.0	-1.0	-1.0	-1.0	-1.0	-0.9	-1.0
	69	도자제품	-1.0	-1.0	-1.0	-1.0	-1.0	-1.0	-1.0
	70	유리	-1.0	-1.0	-1.0	-1.0	-1.0	-1.0	-1.0
귀석, 귀금속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0.7	-1.0	-0.8	-1.0	-0.7	0.3	-0.4

[표 3-28 계속]

비금속과 그 제품	72	철강	-0.1	-0.2	-0.4	0.0	0.1	0.4	0.3
	73	철강제품	-1.0	-1.0	-1.0	-1.0	-1.0	-1.0	-1.0
	74	동과 그 제품	0.6	-1.0	-1.0	-1.0	-1.0	-0.3	-0.6
	75	니켈과 그 제품	-1.0	-1.0	-1.0	-1.0	-1.0	-0.3	0.3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0.2	-0.6	-0.9	-0.9	-0.8	-0.7	-0.6
	77	(유보)	-	-	-	-	-	-	-
	78	연과 그 제품	0.7	0.7	0.1	0.3	0.9	0.9	1.0
	79	이연과 그 제품	1.0	-0.2	-0.8	-0.5	0.6	1.0	0.9
	80	주석과 비금속	-1.0	-1.0	-1.0	-1.0	-1.0	-1.0	-1.0
	81	기타의 비금속	-1.0	-1.0	-1.0	-1.0	-1.0	-1.0	-1.0
	82	비금속제 공구, 스푼·포크	-1.0	-1.0	-0.8	-0.9	-1.0	-0.8	-0.9
	83	각종 비금속제품	-1.0	-1.0	-1.0	-1.0	-1.0	-0.9	-0.9
기계류와 전기·전자 기기 및 이들의 부속품	84	보일러·기계류	-0.3	-0.9	-1.0	-1.0	-1.0	-1.0	-1.0
	85	전기기기·TV·VTR	-0.9	-1.0	-1.0	-0.1	-0.7	-0.9	-0.9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	철도차량	-1.0	-1.0	-1.0	-1.0	-1.0	-1.0	-1.0
	87	일반차량	-1.0	-1.0	-1.0	-1.0	-1.0	-1.0	-1.0
	88	항공기	-1.0	-1.0	-	-	-1.0	-	-
	89	선박	-1.0	-1.0	-0.4	-1.0	-1.0	0.9	0.8

[표 3-28 계속]

광학·사진 용·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시계와 약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	광학·의료·측정· 검사·정밀기기	-1.0	-1.0	-1.0	-1.0	-1.0	-1.0	-1.0
	91	시계	-1.0	-1.0	-1.0	-1.0	-1.0	-1.0	-1.0
	92	약기	0.5	1.0	0.9	0.4	0.6	0.2	-1.0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0	-1.0	-1.0	-	-	-	-1.0
잡품	94	가구류·조명기구	-1.0	-1.0	-1.0	-1.0	-1.0	-1.0	-1.0
	95	완구·운동용구	-1.0	-1.0	-1.0	-1.0	-1.0	1.0	-0.9
	96	잡품	-1.0	-1.0	-1.0	-1.0	-0.9	-1.0	-1.0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97	예술품·골동품	1.0	1.0	1.0	1.0	1.0	-	0.9
	98	(유보)	-	-	-	-	-	-	-

자료: KOTRA, 「북한무역 동향」 각 연도의 품목별 수출입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위의 무역특화지수를 근거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1998~2004년 기간 북한의 대중 무역특화지수 변화를 보면, 2004년도 대중국 수출특화품목은 15개로서 1998년 13개, 1999년 9개에 비해 약간 증가했고, 대중국 수입특화품목은 2004년에 78개로서 1998년 81개, 1999년 86개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 이것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약간 개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워낙 미미한 차이라 확실한 경쟁력 증대로는 보기 힘들다.

둘째, 동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특화품목(1998~2004년 평균)은 HS 96개 품목 중 어패류 0.89, 철강 0.02, 금속광물 0.57, 아연 0.30, 목재 0.85 등 12개 품목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중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인 품목은 어패류, 금속광물, 목재, 건, 골동품 등 5개 품목에 불과하다. 즉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중국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중국 수입특화품목(1998~2004년 평균)은 84개로 수출특화품목 12개의 7배에 달하며, 이들 중, 무역특화지수가 -0.5 이하인 품목들의 수는 71개에 달한다. 특히 무역특화지수가 -0.9 이하인 품목이 50개로서 전체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4. 양국간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의 확대가 각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하게 함으로써 무역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⁷³⁾ 즉, 무역 확대로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를 보다 가치 높은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주로 솔로(Solow) 모형과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73) 박순찬,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5. 11.

Baldwin(1989, 1992)은 Solow 모형에 기초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밝힌바 있는데, 그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무역으로 인해 생산요소는 비효율적인 산업에서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해당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경제 전체로 볼 때 자원투입량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으로 더 많은 산출량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 무역이론과 완전경쟁에 기초한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이 파악하는 무역의 정태적 효과다. 둘째 단계는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산출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된 소득 중 일부는 다시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소득증대로 순환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둘째 단계는 정태적 효과가 자본스톡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무역개방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의 핵심은 무역개방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내생적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Helpman and Grossman(1991)은 무역개방을 통해 상품교역이나 직접투자(FDI)가 늘어나면 이와 함께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성장이 촉진된다 하였고, Bhagwati(1988), Krueger(1980)는 무역개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산업특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기초한 수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수출이 규모의 경제를 활용, 기술이전을 통한 외부효과의 창출로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Grossman and Helpman (1990); Rivera-Batiz and Romer (1991); Segerstrom *et al.* (1990)]. 그러나 Lucas(1988), Young(1991)은 학습효과를 통해 성장이 촉진되는 모형을 통해, 개방으로 인해 학습효과가 낮은 산업에 특화가 일어나는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역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Krueger(1978), Sachs and Warner(1995)는 경제개방과 GDP 성장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혔고, Levine and Renelt(1992)는 실증분석에서 경제성장과 투자, 그리고 투자와 무역이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무역유인·투자주도의 성장(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은 Baldwin and Seghezza(1996)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Dollar and Kraay(2001)는 1975~79년과 1995~97년에 GDP 대비 무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를 개방된 국가로, 1985~89년과 1995~97년에 가장 적게 평균 관세를 인하한 국가를 미개방국가, 그리고 이 두 그룹에 모두 속하는 국가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개방된 국가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출은 수출재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높은 질의 재화와 서비스 수입이 가능해져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이 확대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개도국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수출과 경제성장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Balassa(1978, 1985)]. Michaely(1977), Lopez(1991), Edwards(1999)는 국가간 횡단분석을 통해 개도국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Marin(1992)은 수출과 생산성 간의 관계, 즉 수출주도 성장 가설(export-led growth hypothesis)을 분석한 결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수출과 생산성의 긍정적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⁷⁴⁾

74) 앞의 책.

나. 대외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앞 절에서는 무역이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선행연구들을 소개하였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도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가 북한의 국내총생산과 소득증대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해 보아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무역은 Δ 개방도가 높아야 하고 Δ 무역확대로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보다 가치 높은 효율적인 산업으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경제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장의 1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경제는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무역개방도가 높지 않고, 생산요소 이동도 자유롭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대외무역 증가가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는 연구를 해보아야 한다. 과거 북한의 대외무역이 총생산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었다. 예컨대 양문수 (2001)⁷⁵와 진(2003)⁷⁶은 북한의 무역규모와 총산출량 사이에 그랜저(granger)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로는 이영훈(2004)⁷⁷의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총산출량이 대외무역

75)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대 출판부, 2001.

76) Jin, Jang, "Openness and growth in North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1, No. 1. 2003.

77) 이영훈, 「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 한국은행, 2004.

에 거의 단위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영훈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9~2003년 기간 대외무역 증가로 인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로 나타나고 있다.⁷⁸⁾ 이것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동 기간의 북한 경제성장률 2.8%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 기간에 나타난 북한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대외무역 증대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도표를 그려보면 국내총생산과 무역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영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0~2003년 기간 수출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는 약 0.04이며,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는 0.15로 4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수출이 1% 증가하며 국민소득은 0.04% 증가하며, 수입이 1%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0.15%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영훈의 주장에 의하면, 수입이 수출에 비해 탄력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수입이 부분 생산요소로 기능하는 반면, 수출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북한의 대외무역과 성장 및 소득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바,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의 대외무역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23% 증가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인구 1인당 무역규모가 1% 증가하면 소득은 0.40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⁷⁹⁾ 2003년 대비 2004년 북한의 전체 교역은 약 19.5%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기 분석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485% 증가해야 하고, 이러한 교역의 확대로 북한의 1인당 소득도 7.9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

78) 앞의 책.

79) 박순찬, 「북한과 중국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5.

북한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치고 있다. 분석결과 나타난 추정치와 실제 성장률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실증분석에서는 자본스톡을 포함하는 장기적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자본스톡은 투자에 의해 증가되는 것으로 자본재 수입 및 국내투자가 당해연도에 곧바로 자본스톡 증가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실증분석은 무역과 경제성장 및 무역과 1인당 소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즉, 두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평균적이고 통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연도에서의 성장률과 무역과의 정확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선행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가 확실히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과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이 장차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데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는 수치적으로 볼 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연구자들이 선택한 모델과 이용한 자료의 신뢰성에도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의 총산출량과 북한이 발표하는 총산출량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⁸⁰⁾ 그러나 연구자들의 연구방법과 데이터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연구가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가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 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대외무역 증대가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영향을 준다면, 북한의 대외무

80) 2000년도에 한국은행은 북한의 총산출량이 168억 달러라고 발표하였는데, 북한은 훨씬 적은 105.9억 달러라고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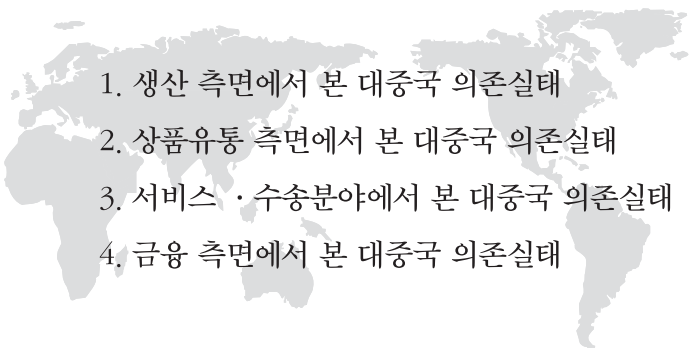
역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밝히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된다. 앞절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의 무역증대는 분명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무역 증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중국의 영향은 당연히 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히 정량적으로 말하는 것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논쟁의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는 의미수준에서 분석결과를 말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3장 1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2004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남북교역을 포함하여 약 35억 5,400만 달러에 달하며,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28억 5,700만 달러이다. 이 중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13억 8,500만 달러에 이른다. 이것은 남북교역을 포함한 전체 대외무역의 39%에 달하는 규모이며,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이 비중은 48.7%에 이르는 규모다. 2004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2003년에 비해 19.5% 증가한 반면, 북·중 무역은 35.4%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무역증가에 중국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부록)에 의하면, 북·중 무역이 1% 증가하면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은 0.483% 증가하고,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약 0.11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 무역증대 효과는 북한의 소득을 약 0.198%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도 앞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숫자상 정확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중국이 가장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 데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볼 때, 향후 북·중 교역이 더욱 확대되면 이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제4장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

- 
1. 생산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2. 상품유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3. 서비스 · 수송분야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4. 금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본 장을 통해 북한경제의 내부적인 작동에 있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국민경제 재생산구조 혹은 국민경제 순환구조와 대외무역,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국민경제 재생산구조가 상당 부분 붕괴된 상태다. 사실 국민경제라는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분절화·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접근방식은 주로 미시적 접근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특히 개별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고찰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 즉 계량적 분석을 위하여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2002년 7월의 이른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이후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계량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도 병행하였다. 이 경우 타당한 질적 연구방법은 참여관찰이지만, 연구대상의 특성상 참여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중 경제관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를 연계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계량적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중국 단둥, 선양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도 실시하였다. 중국의 지방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북·중 무역에 관계하고 있는 조선족 및 한족 기업인, 화교, 남한 기업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북·중 경제관계의 실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생산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공장의 원자재, 설비 조달

1) 개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소비재가 대종을 이루지만, 상당 정도의 원자재·설비도 수입되면서 북한경제를 지탱시켜 주고 있다. [표 4-1], [표 4-2], [표 4-3]의 조사내용은 중국산 원자재·설비가 어느 정도 북한에 유입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먼저 [표 4-1]를 살펴보면 7·1조치 이후 기업의 원자재·설비 조달방식 가운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입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3명, 47.8%). 그 뒤를 이은 것이 국가계획에 의해 수입품을 공급받았다는 것으로 19명(27.5%)을 차지했다. 반면 국가계획에 의해 북한산을 공급받은 것이 6명(8.7%)으로 가장 적었다. 따라서 기업이 확보한 원자재·설비 중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많고, 수입산 중에서도 기업 스스로 무역이나 시장 등을 통해 조달한 것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1. 7·1조치 이후 기업의 원자재·설비 조달방식

	응답자 수(명)	비율(%)
국가계획에 의해 수입품을 공급받음.	19	27.5
국가계획에 의해 국내제품(북한산)을 공급받음.	6	8.7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입품 조달	33	47.8
기업이 자체적으로 국내제품(북한산) 조달	11	15.9
합 계	69	100

중국산 원자재·설비의 경우, [표 4-2]에서 보여주듯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혹은 상급기관과 함께 무역을 통해 조달한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다. 즉 중앙공업이면 스스로 혹은 자신의 성, 위원회 산하 무역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수행하고, 지방 공업이면 시·군 및 도 무역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수행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그 뒤를 이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33.3%였다. 국가계획에 의해 중국산 원자재·설비를 공급받는 것은 20.2%에 지나지 않았다.

표 4-2. 기업의 중국산 원자재·설비 조달방식

	응답자 수(명)	비율(%)
국가계획에 의해 공급받음.	17	20.2
기업 자체적 혹은 상급기관과 함께 무역을 통해 조달	39	46.4
기업 자체적으로 장마당(시장)을 통해 조달	28	33.3
합 계	84	100

표 4-3. 시장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설비 중 중국산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10%이하	11	7.7
20%정도	7	4.9
40%정도	17	11.9
60%정도	35	24.5
80%이상	73	51.0
합계	143	100

[표 4-3]은 시장⁸¹⁾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설비 가운데 중국산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80% 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3명(51.0%)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60% 정도가 24.5%, 40% 정도가 11.9%로 조사되었다.

앞의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 기업들은 국가계획에 의한 원자재·설비 공급보다

81) 이하 ‘시장’이라 하면 장마당 혹은 종합시장 구역내, 즉 공식적으로 시장구역으로 인정된 공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시장 밖의 공간, 예를 들어 개인의 집 또는 기관, 기업소의 창고를 빌린 공간 등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시장공간도 포함된다. 이는 소비품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특히 원자재·설비의 시장판매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는 주로 자체 노력 또는 상급기관과 함께 무역을 통해 원자재·설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품목의 조달을 위한 무역 주대상국은 중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원자재

중국산 원자재 수입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원래부터 북한내에 존재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던 것으로, 코크스탄, 석유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하나는 원래 북한내에 부존해 있거나 생산되던 것인데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일정 부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들이다. 동, 가성소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크스탄(역청탄)은 철강산업의 주된 원자재이고, 이것이 없으면 제철소의 해탄로가 작동하지 못한다. 북한에서는 코크스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김책제철소의 경우 현재 일부만 가동되고 있지만 그나마 중국으로부터의 코크스탄 수입에 의존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원유다. 물론 원유의 용도는 다양한데 북한에서는 수송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각종 공업의 원재료로도 사용되는데 예컨대 유리공장, 모방직공장에서 사용된다. 이번 면담조사에서 수송이나 생산에 필요한 원유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⁸²⁾

국내조달에서 수입으로 전환된 경우를 살펴보자.

금속, 기계, 전자공업의 기초원료로 사용되는 동(銅)도 일부는 수입하고 있는 것

82) “함흥 모방직공장의 경우 모직 천, 담요, 모 실 등을 만든다. 직재가 돌아갈 때, 모를 생산할 때 모실들이 마찰하면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재설비에 증기를 쐬줘야 한다. 함흥 모방직공장 같으면 증유가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해서 증기를 쐬줘야 모포들이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함흥 유리병 공장에도 증유가 많이 쓰인다. 유리를 녹이는데 쓰이는 것이다.” (탈북자 K1씨)

으로 조사되었다. 동은 군수산업에서도, 민수산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재료다. 군수산업에서는 각종 총탄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기계공업에서도 동이 쓰이는 부분이 많다. 이번 면접조사결과 상당량의 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북 동암에 있는 북한 최대 동광산의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⁸³⁾

화학공업, 제지공업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가성소다도 자체 생산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었다. 가성소다는 화학공업에서 기초적인 원료로 사용되고, 제지업에서도 많이 쓰인다. 이전에는 소다류의 경우 홍남화학에서 주로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홍남화학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3) 설비

북한의 기계·설비 조달에서의 대중국 의존실태의 단면을 북한 국영은행에서 일한 바 있는 탈북자의 면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가 관여했던 주요 사업들은 닭공장 현대화사업, 타조목장 현대화사업, 실리카트 벽돌공장 설비 조달, 궤도 전차 정비, 수도(首都) 건설, 대동강 맥주공장건설 사업 등이었다. 그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재, 기계·설비를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프랑스, 독일 등 EU에서 수입한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닭공장 현대화사업은 만경대, 승호, 마람 등 4개의 닭공장에 있는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었는데, 펜부터 수도꼭지, 사료투입설비 등을 통째로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수도(首都) 정비사업을 위한 대부분의 건설자재, 도색재료 등도 중

83) “동암광산이 점점 갱도가 내려갔다. 수직도가 많이 내려갔다. 지금 북한의 굴들, 탄광굴이든, 광산굴이든 바다 밑까지 나갔다고 한다. 함흥지구에 탄이 많이 나오는 은곡탄광, 수도탄광이 있는데 수직갱이 동해바다 밑까지 나갔다고 한다. 그게 점점 나갈수록 탄을 거기까지 가서 끌어와야 하는데 별 수지가 안 남는다. 운반거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그렇다. 일정한 부분을 파먹고 또 들어가고 하니까. 동광이 전혀 생산이 없다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탈북자 K1씨)

국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대동강 맥주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본 건설자재, 설비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했고, 건설자재인 타일, 도색재료, 중요 설비품목인 스테인리스 강관, 각종 관 등도 대체로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했다.⁸⁴⁾

나. 군수공장의 기계·설비 조달

군수부문 과학자 출신인 K1씨의 군수공장 방문 경험담은 군수산업 설비에서의 대중국 의존실태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는 희천 727공장을 1992년도에 방문, 이른바 연구사업을 위해 공장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 공장은 1급 기업소이고, 극소형 진공관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고 한다.

소재준비직장에서는 기본 열처리기가 중요한데 열처리로가 중국산으로 되어 있었고, 다음 공정인 조립직장에서도 조립설비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조립기구, 조립기술공정까지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었다고 한다. 이어 노련직장에서는 노련배관기, 노련기 같은 노련 설비들이 다 중국산이었고, 그 다음 공정인 시험직장, 특성시험 직장에서 각종 시험기들이 모두 중국산이었으며, 심지어 보일러직장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또한 중국산 중유 보일러였다고 한다. 결국 설비 전체가 중국산이었던 것이다.

그는 같은 기간에 남포 기폭제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공장은 총탄, 뇌관을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 이곳 역시 공장설비와 실험기들이 모두 중국산으로 되어 있었

84) “큰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비상설적인 조직을 만든다. 닭 공장 지휘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당 일꾼, 무역일꾼, 농업성 일꾼, 닭 공장 사람들, 재정일꾼들 해서 다 모인다. 이 사람들이 한데 모여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산 설비를 들여오자고 결정한다. 그런데 대체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역일꾼들이다. 그들이 거래의 주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 왜 중국 설비를 선택하겠는가. 지금 거래 대상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중국설비들이 제일 싸다는 이유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돈만 있으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것이 실제로 싸다. 수송비만 해도 그렇다. 중국 말고 다른 곳이라면 동남아, 러시아에서 들여와야 한다. 그런데 가장 가깝다고 해도 그 쪽에서 들여오려고 해도 수송비가 간단치 않다.”(탈북자 K2씨)

다고 한다. 회천에 있는 38호 청년전기연합기업소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⁸⁵⁾ 그리고 그는 이들 설비가 대금을 주고 사온 것은 아니라 무상원조로 들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⁸⁶⁾

탈북자 K2씨는 군수산업 설비부문에서 일본산 제품이 점차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⁸⁷⁾ 전략물자 통제제도로 인해 일본으로부터의 군수용 설비 수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수입이 용이한 중국으로 수입선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K4씨 증언에 의하면 최근에 와서는 이 상황마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도 전략물자 통제제도에 있어 미국에 동조할 조

85) “군수용 디지털조정부품을 만드는 곳인데 디자인을 하고 조립을 해서 완전히 부품화하는 공장이다. 전자기업소로는 가장 큰 기업소인데 이곳은 모든 설비가 다 중국산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설비는 중국산이었다. 즉 각종 시험설비들, 조립설비들이 다 중국산으로 되어 있었다. 전자기관 착공기, 전자기관 회로인쇄기, 부식설비들, 부식기 등이 그러했다. 그 다음에 조립설비에 들어가는 게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움직이는 조립직장, 그리고 위생복까지 다 중국산이었다. 모자나 옷까지 모조리 다 중국산이었다. 조립직장과 디자인 쪽도 들어왔고 자동용접기도 다 중국산이었다. 사실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중국산이 많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다 중국산이었다. 암시적으로 제2경제위원회 소속 설비들이 중국산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당연히 공장측에 물어봤다. 이렇게 중국산을 들여와야 하는가, 러시아나 다른 쪽에서 들여올 수 있지 않느냐고 기사장에게 물어봤다. 중국이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쉽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나 했다. 결국 들여오기 편한 거니까 들어온 것 같다. 좋기는 다른 나라 것이 좋았다고 한다. 원래 공장에서는 체크제를 요구했는데 중국제가 들어왔다고 했다.” (K1씨)

86) “돈 주고 샀으면 제대로 된 걸 골랐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사실 설비가 불량했다고 한다. 예컨대 전자관 실수율이 10%밖에 안 되었다. 다 만들어서 완제품이 나왔는데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은 100개면 10개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럴 때는 6%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중국산이 그때(1992년)까지는 현대적인 그런 플랜트가 아니었다. 중국에서 들여온 공장들 보니까 일본 것에 비하면 값은 비슷하지만 일본 것은 숫자식으로 나오면 중국 것은 크고 아날로그 식이었다.” (K1씨)

87) “제2경제위원회 부문에서는 일본 설비들이 필요하다. 특히 계기 같은 것이 그렇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설비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현재는 차단됐다. 일본산을 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아마 경제제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통제가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중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거기밖에는 나올 곳이 없다. 사실 품질은 일본산이 좋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산은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산을 불가피하게 쓴다. 특히 계기 같은 것도 중국산을 쓴다. 계기는 잠수함에도 들어가고, 미사일 그런 데도 들어간다.”(K2씨)

짐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군수용 설비 수입도 옛날만큼 용이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다. 개인수공업의 원자재·설비 조달

북한에서 개인수공업의 성장은 7·1조치 및 종합시장 등장 이후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종합시장에 나오는 상품 가운데 개인이 수공업방식으로 생산한 제품과 공장,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 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탈북자들은 전하고 있다.⁸⁸⁾ 특히 종합시장 도입은 개인의 부업생산(개인수공업) 확대를 초래하였다. 북한의 내각결정 24호는⁸⁹⁾ ‘개인이 생산하는 상품들’도 시장에서 팔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로 개인수공업자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됨에 따라 개인수공업의 생산도 확대되었다. 『조선신보』도 개인수공업 생산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⁹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개인수공업의 발달이 중국산 원자재 및 설비의 수입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표 4-4]를 살펴보면 개인상업 종사자나 개인수공업자들이 7·1조치 이후 중국에서 완제품보다는 원자재·설비를 더 많이 수

88) “2003년 여름부터인가, 옷공장에 다니던 기능공들이 대거 공장을 빠져나갔다. 임금도 제대로 안 주지, 물가는 오르지 하니가 공장에 붙어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이들은 집에서 놀면서 옷을 임가공하거나 나처럼 직접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아 그 돈으로 생활을 꾸렸다.··· 공장에서 일했다면 월 1,500~2,000원 정도 벌었겠지만 공장에서 나와 개인수공업으로 옷을 직접 만들므로 쉰 월 2만~5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P1씨)

89) 내각결정 제24호(2003. 5. 5)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농민시장을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인민생활에 필요한 시장으로 잘 운영하도록 방향전환할 데 대하여 주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라는 긴 제목을 붙이고 있다.

90) “늘어서 사회활동의 일선에서 물러선 사람 등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내수공업으로 빵, 당과류 등 식료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그것을 (농민)시장에 판매하곤 했다. 그런데 7·1조치 이후 평양시 각 구역에 이들이 일하는 생산기지를 꾸리고 각 상점들에 생산물을 도매로 넘기게 했다. 상점에 진열된 이것들의 가격은 시장에서의 그것보다 10원 정도 싸다.” 『조선신보』 2003. 9. 27.

입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금 그렇다”는 응답이 51.3%로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6.0%나 되었다.

표 4-4. 개인의 중국산 원자재·설비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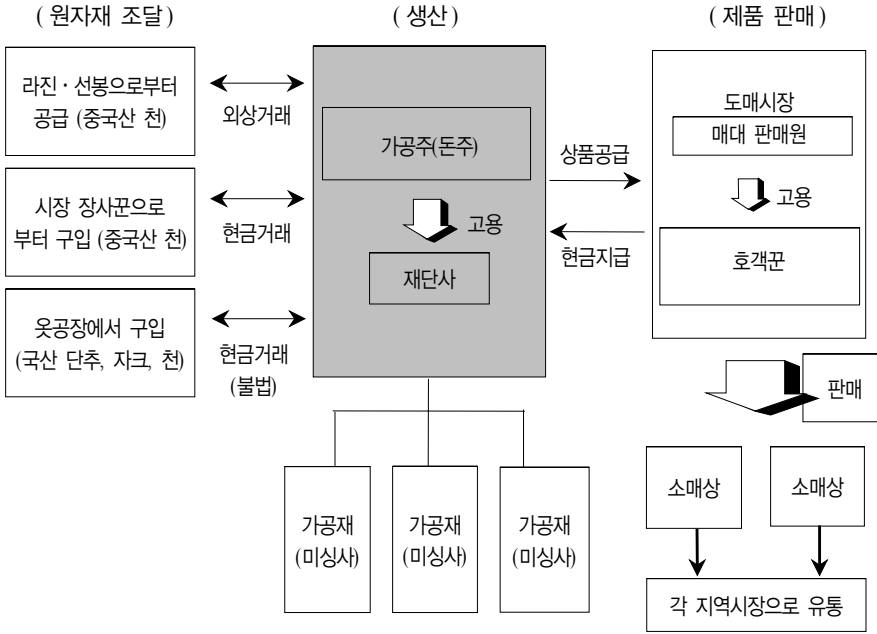
7·1조치 이후 개인이 중국에서 완제품보다는 원자재·설비를 더 많이 수입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응답자 수(명)	비율(%)
매우 그렇다	54	36.0
조금 그렇다	77	5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5	10.0
전혀 그렇지 않다	4	2.7
합 계	150	100

개인수공업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수공업이 원자재와 설비를 중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은 탈북자 P1씨의 사례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임가공을 해서 옷을 만들고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돈을 버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직접 원재료(천)를 구입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혼자 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에 본인은 재료 구입 및 견본생산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더욱이 자르는 사람(재단사) 1명과 가공하는 사람(미싱사) 3명을 고용했다. P1씨와 재단사는 P1씨의 집에서 일했고, 미싱사들은 각자 집에서 일했다. 최종제품은 P1씨 집으로 넘어왔고, 이를 판매원이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았다. 그러한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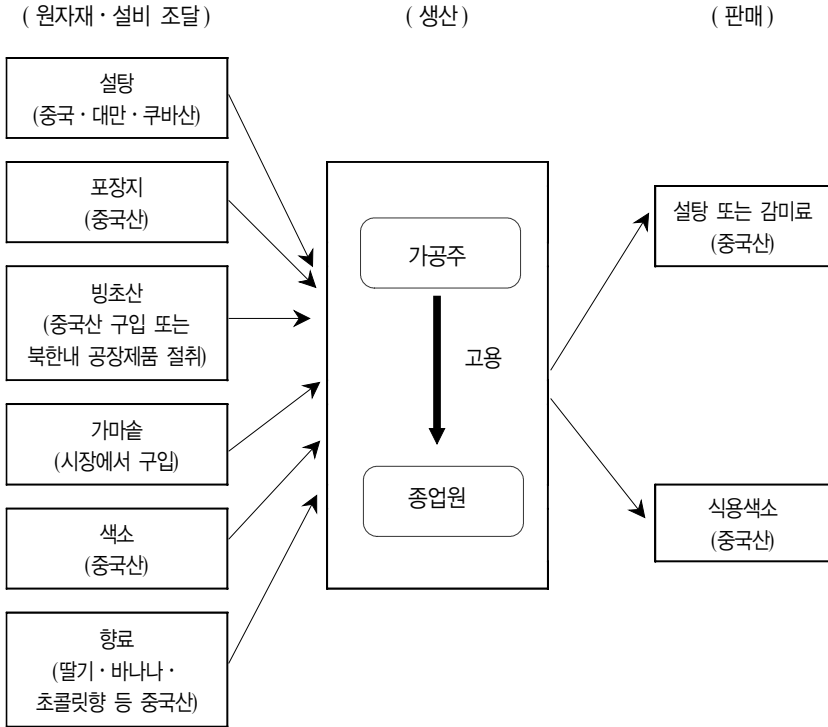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 옷감 같은 원자재 조달인데, 이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P1씨가 거주했던 청진에서는 나진·선봉을 통해 수입되는 천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그림 4-1.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개인수공업의 의류 생산·유통과정



[그림 4-2]는 J1씨 및 K3씨가 전하는 사탕생산 사례다. 원자재는 크게 다섯 가지로 설탕, 포장지, 빙초산, 색소, 향료다. 설탕은 중국이나 대만, 쿠바에서 들어오고 포장지, 색소, 향료는 중국산이다. 빙초산은 대개 공장제품을 절취한 것이 시장을 통해 흘러들어온다. 기계설비는 가마솥이 대표적인데 이는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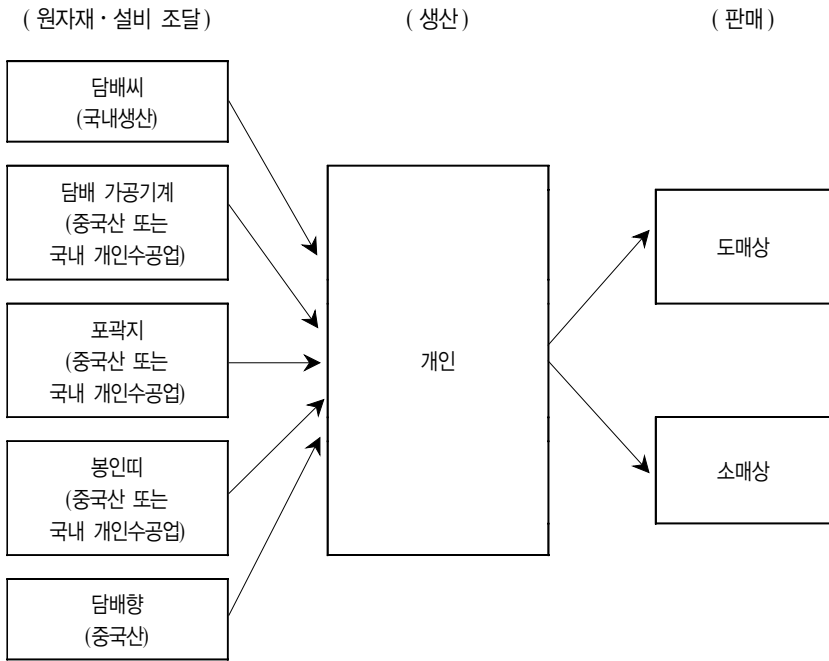
그림 4-2.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개인수공업의 사탕 생산·유통과정



[그림 4-3]은 A1씨가 전하는 담배생산 사례다. 원자재는 담배씨로서 이는 국내에서 재배된다. 담뱃갑을 만들 수 있는 ‘포곽지’⁹¹⁾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담배를 말거나 쓰는 기계는 중국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국내에서 개인이 만든 것을 사기도 한다. 봉인띠는 중국에서 사온다고 한다.

91) 담뱃갑을 만들 수 있는 종이. 담뱃갑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편 상태로 인쇄한 그대로 가져온다. 폴로 붙이면 갑이 될 수 있게끔 한다.

그림 4-3.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한 개인수공업의 담배 생산·유통과정



[그림 4-4]는 K3씨가 전하는 ‘까까오’(빙과류) 생산 사례다. 소금과 주철가마만 국내산이고 나머지 원자재, 즉 밀가루, 설탕 또는 감미소, 식용색소, 향료는 모두 중국산이다.

대한 암시장으로 탈바꿈했고, 2003년 여름부터 종합시장으로 바뀌었다.

종합시장에 대한 물품유입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농민시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1980년대 들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암거래가 늘어났고, 특히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들어와 암거래가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거대한 암시장으로 변모했다. 기존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공급원별로 또한 합법 여부를 고려하여 구분해 보면 [표 4-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제품 공급자가 그 제품을 취득하는 과정(생산, 수입 등)의 합법 여부와 그 제품의 농민시장 유통의 합법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표 4-5. 기존 농민시장에 대한 제품공급 루트

구 분	제품의 공급원천	공급원천의 합법 여부	농민시장 유통 합법 여부
개인 차원의 생산물	틔밭 생산 농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농축산물	합법	합법
	협동농장 부업생산 농축산물	합법	합법
	개인부업 식료품·생필품	합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경작지 생산 농산물	불법	불법
	개인의 불법적 가축사육	불법	불법
기업(농장 포함) 차원의 생산물	공식부문 생산 식량, 공산품	합법 (기업 입장)	불법
	공식부문 절취·유출 식량, 생필품, 원자재	불법 (개인 입장)	불법
중국 등 제3국 수입품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합법	불법
	개인·기관에 의한 밀수품	불법	불법
국제사회 지원물자	개인·기관에 의한 절취·유출 물자	불법	불법

종합시장에서는 공급원천이 합법이지만 장마당에의 유통이 불법이었던 제품, 즉

개인부업(개인수공업) 식료품, 생필품(공업품), 공식부문 생산 식량, 생필품, 공식기관에 의한 수입품 등의 유통이 새롭게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급원천이 불법이고 장마당에의 유입도 불법인 제품의 유통이 허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데,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현재 종합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 농민시장에서 거래되던 품목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식량을 포함한 대부분이 소비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시에 제품 공급자가 그 제품을 취득하는 되는 과정(생산, 수입 등)의 합법성 여부도 크게 추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종합시장은 무엇보다도 기존 암시장의 합법화 및 묵인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급원천이 불법인 경우, 즉 농장이나 공장, 군대에서 절취·유출했거나 개인·기관이 밀수입한 경우가 전체 상품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설문 결과 [표 4-6]와 [표 4-7]에 정리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응답이 특정항목에 몰려 있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별로, 개인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밀수품의 경우, 전체의 50%이상이 밀수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28.7%), 바로 그 다음이 10% 이하(20.0%), 20% 정도(19.3%)라는 응답이었다.

표 4-6. 시장판매 공산품 중 밀수품 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10% 이하	30	20
20% 정도	29	19.3
30% 정도	24	16
40% 정도	24	16
50% 이상	43	28.7
합계	150	100

공장이나 군대에서 절취·유출한 물품의 비중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10% 이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26.4%), 바로 그 다음이 50% 이상이라는 응답(21.5%)이었다.

표 4-7. 시장판매 공산품 중 절취·유출 물자 비율

시장에서 판매되는 공산품 가운데 개인이 공장, 기업소나 군대에서 절취하거나 유출한 것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10% 이하	38	26.4
20% 정도	30	20.8
30% 정도	24	16.7
40% 정도	21	14.6
50% 이상	31	21.5
합 계	144	100

2) 종합시장내 중국상품 유통 정도

현재 종합시장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²⁾

우선 식료품과 공산품 간에 꽤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식료품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공산품은 집중되어 있다. 식료품은 전체의 50%가 중국산이라는 응답(27.8%)과 전체의 80% 정도가 중국산이라는 응답(27.1%)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 다음이 90%, 70%의 순이었다. 공산품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공산품의 95%가 중국산이라는 응답이 58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90%라는 응답(55명, 35.0%)이 바로 그 뒤를 이었다.

92) 탈북자들에게 자신이 탈북 전 거주했던 지역에서 가장 자주 다녔던 종합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단순 합산한다면 공산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1.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료품과 공산품을 모두 합한 전 제품의 경우, 가장 많은 대답이 몰려 있는 곳이 8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90% 선(40명, 26.0%), 70%선(30명, 19.5%)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시장유통 제품 중 중국산 비율

(단위: 명, %)

		50%	60%	70%	80%	90%	95%	합계
식료품	응답자 수	40	10	26	39	29	-	144
	비율	27.8	6.9	18.1	27.1	20.1	-	100
공산품	응답자 수	-	8	11	25	55	58	157
	비율	-	5.1	7.0	15.9	35.0	36.9	100
전 제품	응답자 수	-	15	30	52	40	17	154
	비율	-	9.7	19.5	33.8	26.0	11.0	100

[표 4-9]는 시장유통 제품 중 식량만 별도로 조사한 결과다. 쌀의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쌀의 80% 정도가 중국산이라는 응답이 45명(28.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0%(32명, 20.4%) 90% 이상(23명, 14.6%) 순이었다. 시장에 유통되는 쌀 가운데 중국산은 20% 이하라는 응답이 20명(12.7%)이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쌀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계절별·시기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강냉이(통옥수수)의 경우 20% 이하라는 응답이 40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30%(34명, 23.9%)였다. 통강냉이는 중국산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밀가루는 전혀 달랐는데, 시장에 유통되는 밀가루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응답이 97명(66.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4-9. 시장유통 식량 중 중국산 비율

(단위: 명, %)

		20% 이하	30%	50%	60%	80%	90% 이상	합 계
쌀	응답자 수	20	15	22	32	45	23	157
	비 율	12.7	9.6	14.0	20.4	28.7	14.6	100
통강냉이 (통옥수수)	응답자 수	40	34	22	16	24	6	142
	비 율	28.2	23.9	15.5	11.3	16.9	4.2	100
밀가루	응답자 수	6	2	6	4	32	97	147
	비 율	4.1	1.4	4.1	2.7	21.8	66.0	100

한편 중국산 제품의 유통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이른바 일원변량분석(ANOVA)이다. 우선 탈북자들의 최종 거주 지역을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으로 나누었다.⁹³⁾ 이어 두 집단간 실제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했다. [표 4-10]에 나타나 있듯이 유의수준이 0.05 이하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신뢰수준 95%로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표 4-10]에 의하면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 간에 중국산 물품의 비중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산품과 식량(쌀, 통강냉이, 밀가루)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공산품과 쌀, 밀가루는 국경지역이 비국경지역보다 중국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통강냉이는 국경지대가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산 제품과 식료품에서는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93) 함북 은덕군의 경우, 국경지역이 아니지만 타 지역에서 은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경지역인 무산시를 경유해야 하므로 국경지역에 포함시켰다(탈북자 K4씨의 조언). 한편 탈북자의 최종거주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체 162명(165명 가운데 3명은 무응답) 가운데 국경지역 거주자가 78명(48.1%), 비국경지역 거주자가 84명(51.9%)으로 나누어진다.

표 4-10. 국경·비국경지역간 중국산 물품의 비중 차이

		Descriptives			ANOVA(Between)		
		N	Mean	S.D.	df	F	Sig.
중국산 식료품의 비중	국경지역	70	3.257	1.380	1	2.313	0.131
	비국경지역	73	2.877	1.598			
	합 계	143	3.063	1.502			
중국산 공산품의 비중	국경지역	77	5.169	1.081	1	7.843	0.006
	비국경지역	78	4.654	1.204			
	합 계	155	4.910	1.170			
중국산 제품의 비중	국경지역	74	3.162	1.060	1	0.661	0.417
	비국경지역	79	3.013	1.204			
	합 계	153	3.085	1.135			
중국산 쌀의 비중	국경지역	75	4.187	1.382	1	6.006	0.015
	비국경지역	80	3.575	1.697			
	합 계	155	3.871	1.578			
중국산 통강냉이의 비중	국경지역	68	2.382	1.466	1	7.511	0.007
	비국경지역	72	3.097	1.611			
	합 계	140	2.750	1.578			
중국산 밀가루의 비중	국경지역	71	5.662	0.861	1	9.221	0.003
	비국경지역	74	5.054	1.461			
	합 계	145	5.352	1.239			

3) 상품유통량 증가

7·1조치 이후 시장내 상품유통량에는 변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표 4-11]과 [표 4-12]는 7·1조치 이후 시장에서 이른바 장사(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양은 얼마나 늘었는지 조사한 결과다. 우선 양쪽 다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상행위 종사자가 80% 이상 늘었다는 응답자가 67명(45.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70% 정도 늘었다는 응답자가 40명(26.8%)으로 그 다음이었다. 증가율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도 낮아지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품유입량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4-11. 7·1조치 이후 상행위 종사자 증가율

	응답자 수(명)	비율(%)
10% 이하	5	3.4
20% 정도	5	3.4
40% 정도	10	6.7
50% 정도	22	14.8
70% 정도	40	26.8
80% 이상	67	45.0
합 계	149	100

표 4-12. 7·1조치 이후 시장유입상품량 증가율

	응답자 수(명)	비율(%)
10% 이하	8	5.6
20% 정도	8	5.6
40% 정도	13	9.1
50% 정도	33	23.1
70% 정도	41	28.7
80% 이상	40	28.0
합 계	143	100

표 4-13. 7·1조치 이후 시장유통량 최대증가 품목

	응답자 수(명)	비율(%)
중국산 공산품	119	74.8
북한 공장·기업소 제품	1	0.6
북한 개인수공업 제품	13	8.2
중국산 공산품과 북한 개인수공업 제품	25	15.7
변화 없다	1	0.6
합계	159	100

그렇다면 모든 상품이 균등한 비율로 증가했는지, 아니면 상품별로 증가폭에 차이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상품이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대답이 [표 4-13]에 정리되어 있다. 7·1조치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중국산 공산품이라는 응답(74.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중국산 공업품과 북한산 개인수공업품이 함께 늘어났다는 응답(15.7%)이었다. 반면 북한의 공장, 기업소가 만든 제품은 시장내에서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공장, 기업소가 만들어 시장에 내놓는 제품은 일부 생필품에 국한되지만, 그나마도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탈북자 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7·1조치 및 종합시장 허용 이후 북한의 시장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내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4) 국영상점의 부분적 시장화

중국상품의 북한내 유통경로와 관련,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국영상점의 변화다. 북한의 내각결정 24호(200년 5월 5일)는 “무역성,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들은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영상점들을 임시로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들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평양 제1백화점처럼 무역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업망들에 대해서는 무역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상점의 매대 또한 층별로 임대해 주어 수입상품을 팔게도 하고 위탁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도 적용해 보도록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에 관한 내용이다. 내각결정은 “무역성, 상업성, 국가제정 국과 해당기관들이 들여다 국영상점에서 파는 수입상품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조금씩 낮추는 원칙에서 상품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무역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협정가격으로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정가격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역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이제 두 가지 생긴 것이다. 하나는 도매시장을 거쳐 종합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영상점에 직접 혹은 중간상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영상점에 넘겨주는 가격이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다면 무역회사 입장에서는 국영상점보다는 종합시장에 판매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고, 이 경우 북한당국의 의도는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국영상점에서의 거래가격이 사실상 시장가격 수준이거나 이에 근접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영상점들은 전통적인 계획 메커니즘이 지배하는 영역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이 침투하면서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혹은 시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 즉 국영상점의 시장화가 추진되는 셈이다.⁹⁴⁾

탈북자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영상점의 시장화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즉 국

94)“애초에 평성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소 소속이던 평성종합상점이라고 있었다. 식품, 의류 등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곳이었으나 상점에 물건은 없고 직원들은 출근해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 허송세월만 보내다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이 상점을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무역관리국이 인수했다. 힘도 있고 돈도 있는 기관이었으므로 상점을 인수한 뒤 건물을 새롭게 꾸몄다. 그리고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기 시작했다.” (J1씨)

영상점의 (위탁)수매상점화다.⁹⁵⁾ 대표적인 것이 국영상점이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이 해외나 북한내에서 상품을 들여와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⁹⁶⁾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이윤으로 돌려주고 종업원 등의 생활비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위탁)수매상점 자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개인이 부업으로 만든 제품을 수매상점에 위탁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빗자루, 쓰레받기 같은 것이다.

여기서 거래되는 가격은 사실상 시장가격이다. 농민시장이 농민의 부업활동 결과 생산된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공식적 시장경제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수매상점은 일반 개인의 부업활동 결과 생산된 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공식적 시장경제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수매상점은 크게 변질되었다. 국가에서는 식량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자 수매상점에서의 개인 소유 상품의 매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입던 옷이라도 팔아서 식량을 사 먹으라는 것이었다. 거기다 중국 등지로부터의 수입품 판매도 사실상 허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매상점은 장마당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듯 수매상점의 암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수매상점의 영업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7·1조치 이후에는 국영상점들이 수매상점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⁹⁷⁾ 평양시내에 있는 대규모 상점과 백화점도 일부 수매상점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⁹⁸⁾ 새로 생긴 수매상점은 과거 국영상점이었던 곳이고, 이곳에서는 대개 수

95) (위탁)수매상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매재생산점이라고 한다.

96) 이 경우 납부금은 판매액의 5%이다(수매상점 출납원 출신 탈북자 C씨의 증언).

97) “국영상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위에서는 상품을 공급해 주지도 않으면서 계획목표를 달성하려고 뒤달을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돈을 벌라고 한다. 남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면 지배인 자리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 수매상점화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기는 어렵다.” (탈북자 B씨)

98) “2002년 말 정도에 평양시내 구역당에 지시문이 내려왔다. 국가에서 운영하던 식당들, 상점들이 현재 상품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 이들 건물을 개인들에게 임대해 줘서 건물

입품이 판매된다.⁹⁹⁾ 시장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에 판매되는데, 대체로 시장가격보다 조금 높다. 특히 주거지역에 위치한 상점은 지리적 근접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다만 시장에서처럼 흥정은 못한다고 한다.

전술한 북한의 내각결정 24호는 수매상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 ‘국영상점을 활발히 운영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무역회사를 통한 국영상점 운영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를 규정한 뒤 맨 마지막에 수매상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들은 주민들이 수매상점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며 수매상점에서 수매하러 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후반부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데,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수매상점에 대한 탈북자들의 전언을 상당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히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수매상점에 유입되는 제품의 상당수가 밀수 등 불법적으로 조달된 물품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와 국영상점의 일정 수준의 시장화를 용인하면서까지 상품공급량을 늘려 국영상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고뇌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러한 국영상점의 수매상점화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4]에서 알 수 있듯이 국영상점의 수매상점으로의 전환¹⁰⁰⁾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국영상점의 80% 이상이 수매상점으로 전환했다

값도 받고 하라는 내용이었다. …동평양백화점도 절반을 개인에게 넘겨주었으며, 평양 제2백화점도 1층에 몽땅 수매상점이 들어섰고, 적십자병원 앞에 있는 속칭 100m상점도 절반씩 개인들에게 임대해 주어서 수매상점을 만들고 말았다.” (탈북자 C씨).

99) “함북 새별군 고건원 노동자구에는 2002년(혹은 2003년) 국영 건재상점 자리에 수매상점이 들어섰다. 그러면서 각종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C씨)

“평양 만경대 구역의경우 광복, 갈림길, 금성 등 서너곳에 수매상점이 있었는데, 2003년에는 7골, 8골, 삼흥, 선구자, 장훈, 축전 등지에도 수매상점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 (탈북자 R씨)

100) 국영상점이 수매상점으로 완전전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영상점과 수매상점을 겸하는 경우도 포함됨.

고 보는 사람이 69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 정도라는 응답(28명, 17.8%)과 70% 정도라는 응답(27명, 17.2%)이 비슷했다.

표 4-14. 국영상점의 수매상점 전환비율

	응답자 수(명)	비율(%)
20% 이하	8	5.1
30% 정도	28	17.8
50% 정도	14	8.9
60% 정도	11	7
70% 정도	27	17.2
80% 이상	69	43.9
합 계	157	100

아울러 [표 4-15]에도 나타나 있듯이 수매상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90%라는 응답이 55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95% 이상이라는 응답으로 51명(32.5%)이었다.

표 4-15. 수매상점 판매상품 중 중국산 비중

	응답자 수(명)	비율(%)
60% 이하	6	3.8
70% 정도	16	10.2
80% 정도	29	18.5
90% 정도	55	35.0
95% 이상	51	32.5
합 계	157	100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에 따라 국영상점의 수매상점으로의 전환에 차이

가 있는지, 지역에 따라 수매상점내의 상품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다. [표 4-16]에도 나타나 있듯이 수매상점으로의 전환비율은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됐다. 국경지역은 비국경지역에 비해 수매상점으로의 전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영상점의 시장화, 즉 계획경제 부문에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에 있어서도 지방정권기관, 즉 시, 군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는 것, 달리 보면 지방분권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수매상점 내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아도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국경지역은 비국경지역에 비해 수매상점 내 중국상품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국영상점의 수매상점으로의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상품의 북한내 유통망 확보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장마당의 합법화로 종합시장이 등장했을 뿐 아니라, 수매상점 확대에 의해 중국상품 입장에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것이다.

표 4-16. 국경·비국경 지역의 수매상점 차이

		Descriptives			ANOVA(Between)		
		N	Mean	S.D.	df	F	Sig.
국영상점의 수매상점 전환 비율	국경지역	74	4.824	1.591	1	7.000	0.009
	비국경지역	80	4.100	1.790			
	합 계	154	4.448	1.730			
수매상점 제품 중 중국산 비율	국경지역	77	4.039	1.069	1	6.221	0.014
	비국경지역	77	3.597	1.127			
	합 계	154	3.818	1.117			

나. 화교 및 중국자본과 상품유통

1) 화교와 중국상품 유통

7·1조치 이후 무역의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공장, 기관, 기업소의 대외무역권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무역회사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개인에게 대외무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크게 보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있다. 첫째는 무역회사 등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고, 둘째는 화교를 활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북한인이 화교의 대리인으로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다.¹⁰¹⁾ 본문에서는 둘째와 셋째 경우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화교가 상점 운영자금의 전부를 대고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물론 화교 자신이 직접 상점을 경영하지는 않고 북한주민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운영하는 것이다. 자금의 전부를 대지 않고 일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품 공급만 담당하는 경우도 꽤 있다. [표 4-17]은 화교의 수매상점을 통한 유통망 확보 경로를 알아보기 설문이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이미지가 포착되지 않는다. 5% 이하라는 응답이 40명(32.3%)으로 가장 많았는데, 바로 그 다음이 50% 이상이라는 응답(28명, 22.6%)이었다. 여기에도 북한 출신 지역별·개인별 인식차가 드러난다.

101) “무역회사와 함께 일하려고 하면 복잡하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많고 복잡하다. 그리고 국가 기관이 ‘너 그만한 돈 어디서 냈나, 어디에서 돈 들여오나’라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대개 화교하고 대리인으로 무역을 하려고 한다. 사실 평양시내의 수매상점이라고 하면 대부분 화교들이 하는 상점이다. 회령 같은 국경 부근의 화교도 있고, 북한사람도 있지만 평양시는 80~90%가 화교가 하는 것이다. 특히 화교들이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믿을 만한 북한 사람을 내세우기도 한다.” (탈북자 C1씨)

표 4-17. 사실상의 화교장악 수매상점 비중

	응답자 수(명)	비율(%)
5%이하	40	32.3
10% 정도	21	16.9
20% 정도	15	12.1
30% 정도	8	6.5
40% 정도	12	9.7
50% 이상	28	22.6
합 계	124	100

상품의 공급경로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종합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화교는 대개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소매 기능은 담당하지 않는다.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은 크게 보아 북한사람, 화교, 조선족이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표 4-18]은 비교적 명료한 이미지를 제공해 준다. 50% 이상이 41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40% 정도(29명, 22.3%), 30% 정도(22명, 16.9%)로 조사되었다.

표 4-18. 화교도매상을 통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 비중

	응답자 수(명)	비율(%)
5% 이하	9	6.9
10% 정도	13	10.0
20% 정도	16	12.3
30% 정도	22	16.9
40% 정도	29	22.3
50% 이상	41	31.5
합 계	130	100

그렇다면 화교들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행위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교들은 대체로 외국인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사람과 달리 조직생활도 없고, 생활총화 부담도 없고, 동원 나가는 일도 없으므로 그만큼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갈 수는 있지만 1년에 몇 회 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체류기간도 마찬가지로인데, 화교들이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평양내 중국대사관과 북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¹⁰²⁾ 하지만 북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중국을 왕래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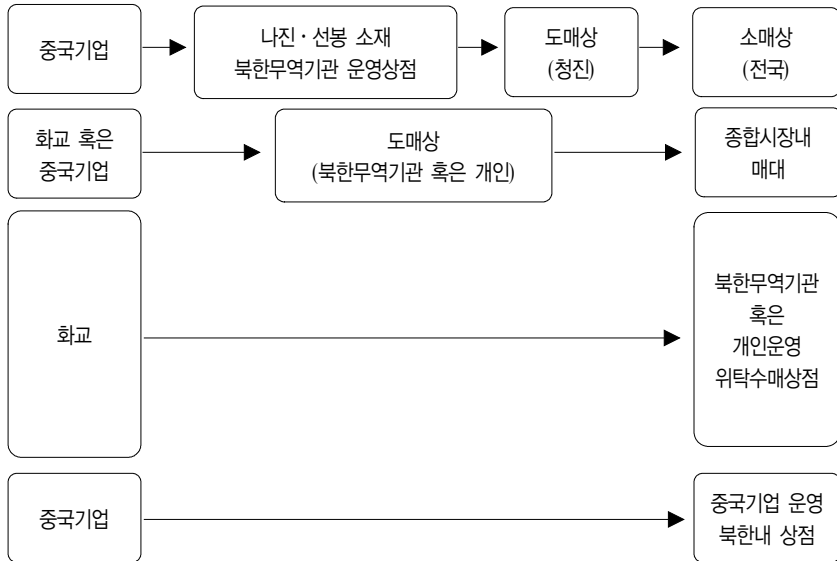
2) 중국자본의 북한 유통부문 진출

지금까지는 화교나 중국기업이 북한의 종합시장, 수매상점 등 북한인들이 운영하는 유통망을 통해 중국산 제품을 공급해 왔다. 즉 중국상품은 북한사람 및 북한 기업을 통한 위탁판매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상점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¹⁰³⁾ 중국자본이 북한의 유통부문에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102) “화교들은 예컨대 한 사람당 석 달에 한 번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식구가 많으면, 갈 일 있을 때 부인 보내고, 그 다음에 갈 일 있으면 자신이 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동생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다. 중국에 가면 상점을 하는 친구나 친척이 다 있다. 그런 데서 물건을 구입한다. 그리고 바로 기차로 국제수화물편에 평양으로 부치는 것이다. 많은 것은 트럭으로 몇 대분이 된다. 화교들이 중국에 직접 가지 않으면 친구나 친척에게 물건을 부쳐달라고 전화나 팩스로 연락하기도 한다. 보통강구역에 있는 통신센터에 가서 무슨 무슨 상품을 보내달라고 국제전화로 연락한다.” (탈북자 C1씨).

103) “2003년 초에 청진시 수남구역 말음동에 룡산상점이라는 새로운 상점이 생겼다. 이 상점은 100% 중국자본에 의해 운영된다. 중국사람이 자본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경영도 직접 하는데 라진·선봉에서 연결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아파트 건물 1층에 들어섰는데 100평 규모에 종업원 6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그 상점에서는 일반적인 식료품, 의류 등 공산품뿐 아니라 오토바이, 자동차 부속품, 발전기, 선박용 소형엔진, 건자재까지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상품보다 훨씬 비싸다. 개인들이 라진·선봉에서 사오는 것보다도 매우 비쌌다.” (탈북자 P2씨)

그림 4-5. 중국산 소비재 유통과정



또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평양시내 평양 역전백화점의 경영권이 중국 저장성 출신 한족에게 넘어가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코스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¹⁰⁴⁾ 이와 관련,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북한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소매 물품시장인 ‘보통강 공동 교류시장’이 2005년 6월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교류시장은 북한 무역성 산하 중앙수입물자교류총회사와 랴오닝(遼寧) 태성국제무역유한공사 등 중국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북한의 기관과 기업에 ‘경제건설에 필요한 제품’을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한다.¹⁰⁵⁾ 사실 이러한 형태의 시장은 북·중간 처음으로 개설되는 것이다.¹⁰⁶⁾ 중앙통신은 교류시

104) 『동아일보』, 2005. 7. 5.

105) 『연합뉴스』, 2005. 6. 24.

106) 시장 개설에 깊숙이 관여했던 단둥시 정부 간부에 따르면, 공동 교류시장은 기본적으로 중국기업이 북한에 농업용 및 공업용 원자재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한다. 소비품도 일부 판매하고 있으나

장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평양 보통강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서비스·수송 분야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소규모 서비스업체 확대와 중국상품 유입

최근 북한에서 늘고 있는 것의 하나가 당구장, 가라오케, 볼링장, 사우나 등 서비스업체이다. 물론 식당도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국가 무역기관이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서비스업체의 매장에 들어가는 설비는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9]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업체 매장에 들어가는 설비의 95%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응답이 46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90% 정도라는 응답이 31명(23.5%)이었다. 탈북자와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⁷⁾

기본 원자재 및 설비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107) “2003년 당시 무역회사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당구장, 식당, 상점, 사우나 시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이에 필요한 설비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식당의 경우 식탁, 의자, 주방 설비, 주방화식기재, 부탄가스콘로, 접시류, 술잔, 에어컨 등 일체의 설비를 들여왔다. 당구장의 경우 당구대, 당구채, 초크, 알, 카펫 등을 수입했다. 사우나 설비도 마찬가지였다.” (탈북자 K4 씨, 인민보안성 산하 무역회사에 근무)

“국가가 운영하던 식당이나 건물의 일부를 개인에게 식당으로 준 경우도 꽤 있다.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더 많다. 그리고 중국사람이 운영하는 식당도 꽤 있다. 회령에는 화교가 운영하는 호텔이 있다. 식당만은 화교가 모든 물자를 공급해서 운영한다. 국가가 회령호텔까지 물자를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화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식당에서 쓰는 것은 일체 중국에서 들여온다. 육류, 조미료는 말할 것도 없고 음료수, 맥주, 쌀, 라면 등을 들여온다. 그런데 북한 식당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 북한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을 보면 재료가 나쁘니까 수준이 떨어진다. 중국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은 수준이 높다. 가격도 당연히 비싸다.” (탈북자 C1씨)

표 4-19. 소규모 서비스업체 설비의 중국산 비중

	응답자 수(명)	비율(%)
60% 정도	18	13.6
70% 정도	17	12.9
80% 정도	20	15.2
90% 정도	31	23.5
95% 정도	46	34.8
합계	132	100

나. 수송 분야

북한에서 수송 분야는 원래 취약한 부문이다. 그러나 경제개혁 진전, 시장발달을 배경으로 수송에 대한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북한당국이 수송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 결국 개별 경제주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송 부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북한의 각 기관들은 식량수송 및 자체 수송수단 마련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원유 및 차량 부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⁸⁾ 또한 7·1조치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의 하나가 외화주유소의 등장이다. 기존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108) “내가 있던 대학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소요액의 50%도 충당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학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외무역을 수행한다. 벌어들인 외화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석유의 조달이다. 두 번째는 차량의 부품, 타이어의 조달이다. 세 번째는 교원, 학생들에 대한 생활품 공급(이른바 후방공급사업)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석유확보이다. 국가는 식량을 공급받을 곳을 지정해 식량공급처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 임무를 끝낸다. 즉 그 지역까지 가서 식량을 받아오는 것은 해당 수요 기관의 몫이고, 해당 수요기관이 직접 해당 농장까지 가서 식량을 실어 와야 한다. 따라서 석유 확보의 최대 목적은 다름 아니라 식량 수송을 위해서인 것이다. 각 기관들은 국가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 휘발유, 디젤유, 모빌유(엔진오일)을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한다.” (탈북자 K4 씨, 국가기관 산하 모 대학 소속 무역회사 지도원 출신)

연유공급소가 있었으나, 이제는 무역기관이 중심이 되어 일반인에게 휘발유 등을 판매하는 외화주유소를 신설하고 있다. 더욱이 신설된 외화주유소는 대부분 중국 산 설비를 들여왔다.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은 열차가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제난의 영향으로 기차 운행도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정이 나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전력부족, 기관차와 철로 노후화 문제 등으로 원활한 운행이 어려운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 4월 등장한 평양 ‘운림운송합영회사’의 장거리 버스는 열차의 불안정한 운행을 보완해줄 합법적인 운송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이 버스회사는 국가가 투자하고 운영·조직·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다. 국가의 승인 아래 개인 자본을 투입하여 중국 베이징의 한 운송 회사와 합영으로 건립한 것이다.¹⁰⁹⁾ 물론 수입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4. 금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 실태

가. 화교와 사금융

북한에서 화교는 대규모 현금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화교들이 자택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다 보니 화교들이 북한사람을 상대로 사금융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즉 북한사람들이 화교자본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북한의 국가 무

109) “중국에서 수입해온 2층짜리 버스가 여러 대 있다. 평양에만 100대 정도 된다. 100대가 전부 2층 버스는 아니다. 똑같은 회사 차인데, 2층짜리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단층에 100대를 들여온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수입해온 것이다. 중국에서 수입된 주요 이유는 일본 것보다 싸기 때문이다.” (탈북자 J1씨)

역기관도 화교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작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선 화교의 경제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모은, 즉 부를 축적한 사람을 돈주(錢主)라고 부른다. 그러면 돈주 가운데 화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을 실시했다. 전체의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33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10% 정도(19명, 15.6%), 5% 이하(18명, 14.8%), 20% 정도(18명, 14.8%), 30% 정도(18명, 14.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4-20. 돈주 중 화교의 비중

	응답자 수(명)	비율(%)
5% 이하	18	14.8
10% 정도	19	15.6
20% 정도	18	14.8
30% 정도	18	14.8
40% 정도	16	13.1
50% 이상	33	27.0
합계	122	100

화교가 이러한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금융, 특히 고리대금업을 영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채업자 중 화교의 비중을 물어보았다. [표 4-21]에서 알 수 있듯이 사채업자 중 화교의 비중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하라는 응답이 33명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20% 정도라는 응답이 23명(19.2%)이었다. 그러나 50% 이상이라는 대답도 15명(12.5%)이나 되므로 사채업에서 화교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4-21. 사채업자 중 화교의 비중

	응답자 수(명)	비율(%)
5% 이하	33	27.5
10% 정도	21	17.5
20% 정도	23	19.2
30% 정도	12	10.0
40% 정도	16	13.3
50% 이상	15	12.5
합계	120	100

주목해야 할 것은 공장, 기업소가 화교 자금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화교가 공장, 기업소에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85명(70.8%)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35명, 29.2%)보다 훨씬 많았다. 더욱이 비교적 자주 있는 일이다(25.8%) 및 자주 있는 일이다(24.2%)라는 응답이 약간 있는 일이다(20.8%)라는 응답을 웃돌았다.¹¹⁰⁾

110) “국가 외화벌이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외화벌이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한다. 중국사람들한테 가서 국가무역기관이 꾸어 달라고 요청한다. 물론 당연히 이자를 준다. 예를 들면 월 20~30% 이다. 그 돈으로 수출원천 동원을 한다. 물론 북한사람한테서도 빌릴 수 있다. 북한에 있는 개인한테 빌리긴 빌리는데 북한에 있는 개인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빌려주지 못한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검열 들어오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개인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감추고 안 내놓는다. 북한인은 사채업을 하지 않는다. 듣기는 날이면 당장 잡혀간다. 무역은행 가서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안 빌려준다. …예를 들어 내가 수출원천을 동원해야 되겠는데, 회사에는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개인적으로 꾸어 달라고 하면 믿지 않고 안 꾸어준다. 그러니까 회사이름을 걸고 회사에서 담보를 선다. 회사라는 것이 국가가니까 그렇게 담보를 서서 개인한테 꾸어 쓰는 것이다. 돈을 빌릴 때 계약서, 차용증 다 쓴다. 실제로 나도 그렇게 했다. 1999년도에 2만 달러 정도를 빌렸다. 친한 화교에게 꾸었다. 다만 잘 아는 사이니까 이자를 6개월에 10%를 붙이자 했다. 특히 무역부 소속 무역회사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군중외화벌이 단위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적게 빌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빌리는 사람도 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 정도. 크게 빌릴 때는 대체로 송이철, 성계철이고, 겨울에는 실뱀장어, 게 철에 돈을 많이 빌린다.” (탈북자 C1씨, 인민무역부 산하 무역기관 지도원 출신)

표 4-22. 공장·기업소에 대한 화교의 자금대여

	응답자 수(명)	비율(%)
자주 있는 일이다	29	24.2
비교적 자주 있는 일이다	31	25.8
약간 있는 일이다	25	20.8
들어본 적 없다	35	29.2
합 계	120	100

나. 상품수출 조건부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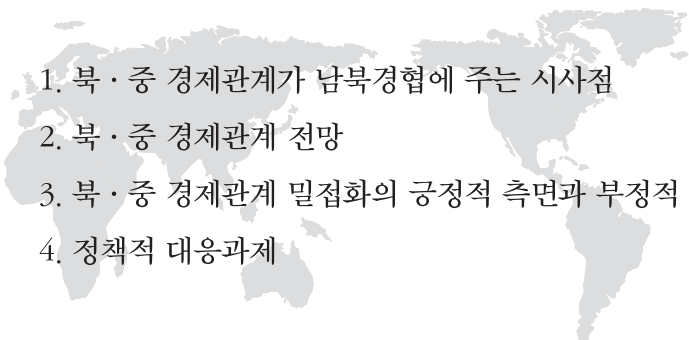
중국과 북한 간 무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또 하나의 금융형태는 상품수출 조건부 금융이다. 즉 중국기업이 북한기업에 대해 미리 현금이나 현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를 수수한 북한기업은 정해진 기간에 상품수출을 통해 이 자금을 상환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자금이 필요한데 북한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하니까 중국기업들이 조건부 금융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주요한 조건부 금융 방식은 중국회사들이 수산물 수출을 조건으로 배와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¹¹¹⁾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서비스업 설비의 수입인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한 북한 무역회사는 중국으로부터 식당, 상점, 당구장, 사우나 등 4개 시설의 설비 일체를 중국에서 20만 달러 규모의 현물로 들여왔다. 이것 역시 수출조건부 금융이었는데, 6개월 이내에 폴리브텐을 수출해서 이 돈을 상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111)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서해, 동해에서 나는 수산물이다. 중국회사는 북한회사와 ‘너희 돈도 없고 설비도 없으니까 우리가 돈, 설비 다 대줄 테니 그 대신 너희 사업하는 만큼 쫓겨 얼마를 언제까지 우리에게 달라’는 식으로 계약을 맺는다. 설비라면 배가 대표적이다. 150마력, 200마력, 400마력 배에다 많이 투자한다.” (탈북자 L1씨)

제5장

한국의 대응과제

- 
1. 북·중 경제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3.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4. 정책적 대응과제

1. 북·중 경제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의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3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혔듯이,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2005년에는 남북교역을 포함한 전체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역의존도 편중현상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가 북한과의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불균형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3장-1에서 보듯이, 이것은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십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보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자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은 북한의 산업구조가 수출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중공업 위주의 불균형적 산업구조인 데다, 경제난이 심각하여 수출보다는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입원자재 물자가 대부분 내수산업을 가동시키기 위한 생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출 확대효과가 대단히 적으므로 불균형적 무역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적된 적자는 중국 중앙정부의 대북한 차관지원으로 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북·중 무역의 불안정성은 북한의 경제난, 제도의 비합리성, 외화난, 신용의식의 부재 등에 의해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주로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저부가가치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입품목은 산업원자재와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2장-2에서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산업원자재는 내수용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수출품목은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렵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나 산업이 적어서 북·중 무역의 고급화는 상당기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중 경제협력은 유리한 거래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장과 3장-3에서 알 수 있듯이, 북·중 경제관계에 있어 유리한 환경으로는 △북한과 중국은 유일한 우호적 접경국가이며 △양국 모두 정치·안보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부분 공유하고 있고 △접경국가에 걸맞은 각이한 우대적 제도(변경무역제도, 세금 및 관세우대, 통행, 통관, 통신, 물류 등)를 가지고 있으며 △접경지역으로 인한 거래코스트가 낮고 △많은 부분에서 상호 보충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 개인이 모두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환경은 북한 중앙당국의 지나친 대외무역권한 집중과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강력한 통제에 의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양국이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경제협력을 하면서도 기대만큼의 양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절대적인 대외무역규모가 작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투자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장-2-나에서 설명했다듯이,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1억 7,350만 달러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지만, 투자 추이상 나타나는 중국의 대북투자는 기복이 대단히 심하다. 이것은 같은 기간 무역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상이한 현상이다.

예컨대 2003년 중국의 대북투자가 130만 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중국 대북투자의 영세성은 △규모의 영세성 △투자업종의 영세성 △투자방

식의 영세성 △투자관리의 영세성 △투자회수방식의 영세성 등에서 잘 나타난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영세성을 보이긴 하지만, 그 규모는 당분간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기업들이 북한의 채무를 투자를 통해 받아내려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즉, 현물로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돈이 되는 자원이나 산업부문에 우선 투자하고 생산물을 가져간다는 전략이다.

여섯째, 중국의 대북지원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음성적이며 기복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3장-2-다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의 대북지원이 역사성에 있어서나 현실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이다. 북한의 산업 각 부문에 중국의 지원으로 개발된 시설이 대단히 많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지원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대북지원이 전략적이라는 점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상반되게 규모와 시기가 정해지는 패턴을 보이는 데서 나타나고 △자국의 정치·외교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데서 나타나며 △양국, 특히 최고지도자의 관계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데서 나타나고 △국제정치적 현안과 적절히 연계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3장-2-다에 나타나 있듯이, 중국은 가장 우호적 인방이면서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북지원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보다도 인도적 지원에서 뒤처져 있다. 그리고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늘어나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지원이 대부분의 경우 음성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겉으로 나타난 통계자료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의 대북지원이 음성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측면은 △국내에서 일반주민들이 접하는 일상 생필품 중 중국제품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역통계상에 나타나는 생필품 거래량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점 △중국의 통계 자체

에 대한 불신 △중앙정부 차원 외에 지방정부 차원이나 기업·개인 차원의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대부분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일곱째,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외형상 나타나는 의존도 심화보다는 내부적으로 고착화되는 의존도 심화가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5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지만,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전반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미치는 중국 상품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중국으로부터의 공식 생필품 수입물량은 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할 만한 물량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또 다른 공급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는 앞서 지적했듯이 비공개 지원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소위 변경지역에서 가장 흔히 행하고 있는 ‘보따리 무역’일 수 있다. 보따리 무역은 1990년대 전 기간 북·중 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북한 주재 화교, 방중 북한주민, 방북 여행객·친척방문객 등에 의해 주로 보따리 무역이 전체 변경무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 현지 세관의 주장이다. 그리고 보따리 무역의 대부분은 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의 주장이다.

현시점에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높을 뿐만 아니라 점점 심화되어 가는 추세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기본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본 보고서가 연구·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는 북·중 경제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북한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비중은 대단히 높게 나타나지만,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절대적인 의존관계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존관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대적 의존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를 한·중, 중·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관계와 비교해 보아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북한경제는 구소련에 대한 의존관계가 높았던 적이 있었고, 한때는 서방에 대한 의존관계가 높았던 적도 있었으며, 지금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즉,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시기에 따라, 대외정책에 따라, 국제환경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져 왔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주변국과 한국의 대북 경제정책 여하에 따라 향후 북한의 의존도 대상국가는 또다시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대남 의존도로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밀접화는 제도와 행정적 규정의 유리성 때문에 이루어지므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분산시키려면 북·중 경제관계가 가지고 있는 교역제도나 규정보다 더 유리한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북한과의 경쟁에 임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관계 확대는 제도와 규정의 합리성과 현실성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약, 즉, 바세나르 협약이나 한·미 관계, WTO상의 의무조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과연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제도적 접근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만일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 풀리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경쟁력 있는 제도구축을 통해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문제를 남북경협 확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셋째, 북·중 경제관계의 밀접성은 다양한 물리적 연계 인프라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중 연계 인프라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남북연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북·중 무역은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여 각이한 형태의 물리적 연계 인프라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양국 무역관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중간에는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다양한 연계 인프라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연계 인프라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중국과의 무역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북한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만큼 북·중 연계 인프라보다 크고 효율적이며 기동적인 연계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편중현상을 극복해낼 수 있다.

넷째,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교역통로를 개발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북·중 무역은 접경지역에 11개 이상의 무역통상구를 설치하고 물자의 통관과 검역, 사람의 통행을 비교적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이 통상구들은 접경지역의 각 성과 지역의 기업과 사람들에게 대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통로들은 북·중 무역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도 인접지역에 다양한 통상구를 설치하여 지역마다 남북교역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에서 다양한 거래방식이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북·중간에는 일반무역과 함께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보따리 무역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북·중 무역에서 변경무역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변경무역에서도 보따리 무역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무역형태가 북·중 무역에 이바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섯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남북경협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참여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가능성을 넓혀 주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에서 접경지역인 동북3성 지방정부의 참여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동북지역 지방정부는 각자 북한과의 경협에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장치를 현실성 있게 많이 만들어놓은 상태다. 따라서 우리도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기업 및 개인의 남북경협 참여도를 높여주기 위한 제도 구축이나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곱째, 북·중 경제관계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은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경협은 투자의 선점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물론 북핵문제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황에 맞춰 대북투자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해야겠지만,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현실성이 크고 가능성도 높다.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현재 북·중 경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역, 투자, 지원 등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북·중 경제관계는 정치·안보적 이해관계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2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북·중 경제관계는 북한을 자국의 안정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군사전략적 이해관계와, 체제를 고수하려는 북한당국의 정치우선적 이해관계가 일정하게 합치되어 일어나는 경제 행위다. 중국은 이러한 정치·안보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체제의 안정을 추구하

면서 동시에 체제안정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하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가 중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만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둘째, 중국의 일방적 양보와 지원 성격의 북·중 경제관계는 특혜적 교역을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원료, 연료, 산업원자재, 기계재 등을 국제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왔다. 물론 1992년 이후 북·중 교역의 특혜적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변경무역의 제도적 혜택을 통해 받고 있는 북한의 이익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북·중 무역에서 북한이 받고 있는 수혜적 혜택의 성격은 교역 형태에서도 잘 나타난다. 구상무역형태의 북·중 교역은 자국에 필요한 물자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가치적으로 맞바꾸는 형태이며, 지금 시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북·중 교역에서 이러한 관례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교역에서 산생되는 기업들의 손해분을 항상 보상해주는 입장을 지켜왔다. 그 주된 방법의 하나가 주기적으로 북한에 재정적 차관지원을 하여 채무를 청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셋째,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국의 산업원자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조이면서도 그것을 보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철강, 화학, 기계, 식량 등 중요부문의 산업원자재는 북한에 없거나 대단히 적으며, 이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중국과의 교역으로써만 해결 가능하다.

북한이 원유, 코크스, 화학원자재 등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비교적 싼값에 들여와 쓰면서도 그것을 보상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의 산업구조가 전형적인 내수경제구조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산업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중국에 넘겨주어야 할 대치물자는 적게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들어서 대중국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산업

구조 역시 금속, 기계 등 중공업 비중이 월등히 높고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이 대단히 취약하여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시킬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이러한 대북한 경제정책은 경제문제에 있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정책과 산업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으며, 어려운 기회 때마다 중국과 정치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관행을 고착화시켰다. 북·중 경제관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아직 양국 당국의 협력의지가 존재하고 협력의 구체적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중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중 경제관계는 무역 및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북·중 무역은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4년에는 13억 8,521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4%로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최근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북·중간 무역규모는 7억 4,15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3%나 폭증하였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중앙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전략적 안보와 지역적 안정추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경무역을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대북 경제정책은 대체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¹²⁾

최근 변경지역의 기업과 지방정부의 대북경협 참여가 증가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북·중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보인다. 변경지역의 기업과 정부기관들은 현재 북한의 광산, 도로, 항만 등 전략자원과 인프라 등에 투자진출을 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 기업 및 홍콩을 비롯한 해외 화교기업들에 대북투자 진출을 유도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 투자협력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마그네슘, 티타늄, 금, 은, 동 등 북한의 자원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112) 린지슈, 「북·중 변경무역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실제로 무산광산을 비롯한 북한의 대규모 광산과 탄광에 투자하고 있다. 북한산 철, 금, 티타늄 등 희귀금속은 중국산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¹³⁾

전통적 우호관계, 지리적 접근의 용이성, 중국의 한반도 안정추구 전략,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볼 때 북·중 경제관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물론 김정일 정권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실제로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기업과 지방당국에 무역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 조치 이후 북·중 변경지역에서의 북한 무역회사와 기업들의 교역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경제관계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고 대북 지원규모가 확정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중국기업들의 대북 투자나 교역 열기도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북·중 경제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더불어 북한과 중국의 변경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동북3성 개발의 추진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막대한 개발 원자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 변경지역의 지방정부는 개발 원자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철재, 시멘트, 각종 비금속, 화학제품 등 다양한 생산용 원자재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무역체제가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생산 및 무역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변경무역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의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북한 지방당국의 무역권 확대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특히 북·중 양국 국경지역 주민들의 상거래 참여가 급증하고 있어 변경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113) 앞의 책.

둘째, 국가간 무역도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북한이 무역권한을 지방 정부에 일부 이양한 주요한 목적의 하나가 지방의 생산과 주민생활을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데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주요한 국내경제 핵심부문만 책임지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 현재 중앙당국 주요 산업의 가동률을 높이고 새로운 개발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 원부자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려나갈 것이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적자·채무 누적문제인데, 최근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게 되는 큰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중간 무역확대를 위한 장애물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동북3성 개발, 북한의 경제난 해결노력 등이 접합되면서 북·중간 일반 무역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역방식과 결제방식은 내년에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이 아무리 구상무역 타파와 경화결제를 요구한다고 해도 북한의 무역구조와 경화결제 능력 부재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 물론 기업 차원의 거래에서는 이미 경화결제방식이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국가간 무역에서 전면적 경화결제방식의 교역이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이 해결되기 이전에는 구상무역과 청산결제방식이 완전히 없어지기 힘들 것이다.

넷째, 북·중간 교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연계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며, 북·중간 이미 합의서가 체결된 것도 있다. 따라서 2006년에는 이러한 합의된 사업들이 시작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중국의 간접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예방 차원의 대북투자 확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동북3성 개발과 한국 및 일본과의 물리적

연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중간적 위치에 있는 북한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중국당국의 인식이다.

다섯째, 북한 경제난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중국의 대북한 경제원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전략적으로나 인도적인 면에서도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지원 시기와 규모에 따라 중국의 대북지원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3.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밀접화되고 있는 현상을 놓고 사회 일각에서 다양한 논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경제에 있어 무역, 투자, 지원 등 전 분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일부 물류 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놓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 현상을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향후 남북한은 통일경제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이고, 북한경제도 우리의 민족경제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현재의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각을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 긍정적 측면

우선 현재의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중 경제관계의 긍정적 측면은 주로 북한의 입장에서 출발되며,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당장의 경제문제 해소 측면에서 접근된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밀접화는 북한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이 각 국가의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하게 함으로써 무역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무역을 통해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보다 가치가 높은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무역개방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의 핵심은 무역개방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내생적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¹¹⁴⁾

그러나 현재의 북·중 무역관계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창출할 정도로 북한 산업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욱이 북한이

114) Krueger(1978), Sachs and Warner(1995)는 경제개방과 GDP의 성장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Levine and Renelt(1992)는 실증분석에서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난 50여개의 변수들을 재검토하여 경제성장과 투자 그리고 투자와 무역이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무역유인·투자주도의 성장(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은 Baldwin and Seghezza(1996)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Dollar and Kraay(2001)는 1975~79년 기간과 1995~97년 기간 사이에 GDP 대비 무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를 개방된 국가로, 1985~89년과 1995~97년 기간 가장 적게 평균 관세를 인정한 국가를 미개방국가, 그리고 이 두 그룹에 모두 속하는 국가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개방된 국가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수출은 수출재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높은 질의 재화와 서비스 수입이 가능해져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이 확대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개도국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수출과 경제성장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Balassa; 1978, 1985). Michaely(1977), Lopez(1991), Edwards(1999)는 국가간 횡단분석을 통해 개도국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Marin(1992)은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 즉 수출주도 성장가설(export-led growth hypothesis)을 분석한 결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수출과 생산성의 긍정적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수준의 무역개방도가 높은 나라도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 증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무역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과거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예컨대 진(2003)과 양문수(2001)는 북한의 무역규모와 총산출량 사이에는 그랜저(granger)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영훈(2004)은 북한의 총산출량이 대외무역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¹¹⁵⁾ 본 연구에서도 북한의 대외무역 증대가 북한의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보고서 4장-1에 의하면 북한의 대외무역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0.23%, 소득은 0.4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분석과정은 부록 참조).

북한경제는 1998년부터 미미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해오고 있다. 선행연구와 본 보고서의 분석을 근거로 한다면,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은 외부지원과 대외무역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현재 북한 내부에는 스스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유인할 만한 정책적 및 재정적 수단이 별로 없다. 3장-1에서 서술하였듯이, 1998~2004년 사이 북한의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 즉 대외무역 증가가 북한경제의 플러스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고, 대외무역의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원부자재의 가장 큰 공급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생산 및 고용 증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기동률 증가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실질

115) 이 석, 「북한경제와 경제제재」, 『북한경제동향』, KDI, 2005.

적 고용증대 효과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원자재, 에너지난에 의해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형식적 고용직, 내용적 실업자가 많다. 3장-2와 4장-2, 그리고 5장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북한은 주요 기간산업과 경공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아직도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고 산업생산 가동률이 대단히 낮지만, 그나마 지금의 수준으로 산업 가동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대북한 산업원자재 공급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간 교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북한의 산업생산과 고용은 그만큼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확대는 북한산업에 대한 개발 및 기술이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3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최근 중국은 광산, 유리, 광산, 기계, 서비스,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설비일식을 투자하는 것도 있고, 설비일부를 투자하는 것도 있으며, 기술을 이전해 주는 지원도 있다. 이러한 투자와 지원은 북한 산업에 설비갱신과 추가 개발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가동이 중단된 일부 산업공장들이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있다.

북한은 자연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하지만 에너지난, 설비 노후화 및 부족, 자금난 등에 의해 자원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미 개발된 탄광, 광산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투자는 북한에 개발 및 생산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특히 설비투자로 인한 기술습득효과도 동시에 보게 된다.

넷째, 중국의 대북한 교역 및 지원의 확대는 북한주민의 생활난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3장과 4장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육류, 식용유, 설탕, 섬유, 식량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의 비중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식량부 분에서는 한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지원국이다. 또한 일반무역과 특히 변경무역을 통해 다양한 생필품들이 중국으로부터 대거 유입되고 있다. 5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현재 북한의 유통분야에서 중국산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북·중 무역이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대단히 깊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중국산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북한주민들의 생활난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다섯째, 우리가 북·중 경제관계의 밀접화를 적절히 활용하기만 한다면 남북한 경제통합이나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재건과 남북한의 경제통합 및 통일은 막대한 비용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한국 혼자 힘으로는 해내기 어려운 과제이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대북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당장의 북한 경제난을 일부 해소시켜주는 역할도 하겠지만, 남북한 경제통합 비용을 사전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이 기간산업과 항만 및 도로, 철도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남북 경제통합과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 개발에 중국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중국이 북한의 각이한 산업에 투자하여 기술수준을 높이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부정적 측면

북·중 경제관계의 밀접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주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측면,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가능성 측면, 북한경제의 주권적 측면, 그리고 한국의 입장과 미래의 통일경제 입장에서 접근되고 분석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중 경제관계의 밀접화 과정을 볼 때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 전면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지원과 교류 확대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북·중 경제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북한경제는 미미하게나마 성장하고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개혁의 대상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개선조치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북한이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한 이후 더 진보된 추가적 개혁조치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체제수호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체제에 위협을 주는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서 고도성장을 이루어낸다면 그보다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혼자 힘으로 북한의 경제난을 완전히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며, 그러한 의지도 없을 것이다.

2장과 3장에서 지적했듯이, 북·중 무역은 중국의 시장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거래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비효율적 거래구조를 안고 있다. 1994년 북한과의 무역에서 취했던 조치들은 북한의 사정어기는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도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상무역은 곳곳에 존재하며, 외상거래와 청산결제도 일부이지만 지속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외무역구조의 변화가 미진한 상황에서 북·중 교역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

다는 점이다. 3과 4장, 그리고 5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듯이, 북한의 산업생산 의존도와 주민들의 소비품 의존도는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북한경제는 중국의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순조로울 때는 문제가 크지 않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경제정책이 급격히 변하면 북한경제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최근 중국에서 원자재난이 심각해지면서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 2004년도 원유도입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었지만 실제 도입량은 줄어들어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결국은 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원유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경제의 지나친 대중 의존도에 의해 북한의 경제성장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의 경제상황에 좌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중국시장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산업원부자재가 다른 시장에서의 구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시장은 원부자재 가격이 낮고 물류비용도 적게 들어서 만성적 외화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최적의 시장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외시장의 다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북한으로서는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워 고스란히 경제난을 맞을 수도 있다.

셋째, 북한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다변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개발정책과 산업 및 기업정책, 소비와 노동정책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변화를 사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남북경협을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 중국의 눈치를 보아 가면서 남북경협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통일경제를 예견하고 고려하는 경제개발정책보다는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개발정책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3장에서 설명했듯이, 예컨대 중국이 최근 나진과 취안허를 잇는 도로개발에 투자하는 대가로 북한의 나진항 제3부두를 50년간 임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상 통일경제하에서 중요한 전략적 물류중심지 역할을 해야 하는 곳으로서 다른 나라에 조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당장의 경제문제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산광산 개발, 서해어장 제공 등 자원개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넷째, 북한의 산업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중국시장 친화적 구조로 이루어져 보다 나은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시장과 긴밀해지고 친화적인 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고, 경제수준이나 산업구조 및 기술 수준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더욱이 아직까지 중국의 경제개발은 친환경적이지 않고 지역간, 산업간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와 긴밀히 연계되는 방향으로 경제·산업 구조가 재편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다 유리한 나라, 특히 선진국과의 연계를 차단하여 성장 가능한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북한경제에 대한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은 줄어들고, 그것은 결국 북한경제의 고도화·선진화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결과 중국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경제개발이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형이 아닌 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특히 가장 경계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발전략이 중국의 전략적 거시경제개발전략의 지역적 부속물로 짜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장차 한반도의 통일경제 구축에 있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통일경제 구축은 경제의 구

조직 통합과 동시에 경제주권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경제는 단일한 경제체제하에서 통합된 경제주권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특히 그 시가 되면 북한지역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발수준이 낮은 수많은 대상들이 개발정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개발대상들이 이미 중국에 개발권이 넘어간 상태라면 우리의 독자적인 개발정책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최근 중국이 보이고 있는 북한의 전략자원과 일부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진출이 우리에게 우려스럽게 다가오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섯째,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는 과정은 곧 북한의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는 과정으로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동북아와 세계 정치에서 중국과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상이하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 중·미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실에서 심화되어 가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결국 정치적으로 북한이 항상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동북아지역의 지속적인 안정에 기초한 고도경제성장 추구라는 중국의 전략과 맞물려 항상 북한의 개혁수준이 결정되고 대외정책 방향이 설정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중국이 북한의 신의주 개방정책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견제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과 우리에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 같이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적 측면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과 실천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의 부정적 측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거나 완전한 예측의

성격을 띠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남북경제협력의 밀접화를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시키려면 우선 북한이 변해야 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하며, 남북한이 미래의 통일경제에 대한 합리적 구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4. 정책적 대응과제

앞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북한경제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당장의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한국의 대북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향후 국제정치관계에 있어서나 남북경협 확대, 남북경제 통합을 추구하는 데 있어 많은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중 경제관계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은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을 남북경제관계 밀접화로 대체시키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한반도의 경제 통합에 유리한 방향에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북한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실패한 주체사상과 자립경제건설노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데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제도적 및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적으로 협력자세를 배가하며, 북·중 경제관계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현상을 이 시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

을 보면, 북한경제가 이미 중국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지탱하는 수준이고,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및 산업 각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략적 지하자원과 인프라에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든다. 그리고 지금 대응을 시작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고, 늦으면 늦을수록 대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금은 대응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면, 핵문제가 남아 있고 기타 국제적 해결과제가 남아 있으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무작정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체제가 변하고 국제적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대응해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을 정리하면 대응시점과 전제조건에서 이견이 있지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대응과제를 제시함에 있어 논쟁을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출발하려고 한다.

첫째, 핵문제, 기타 국제적 이슈들의 해결시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순수하게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해소 차원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제시된 대응과제는 핵문제 해결 이전이나 이후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중국의 대북경협에 대한 한국의 대북경협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대응과제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을 한국경제 의존으로 유도하려면 당연히 경쟁력 있는 제도와 환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가능해진다. 그리고 유도과정은 필연코 중국과의 상호 경쟁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쟁에서 이기자면 당연히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야만 한다.

셋째, 열린 자세, 즉 중국을 배제하거나 역할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부정적 측면을 축소하고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에서 대응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넷째, 같은 맥락에서 다른 나라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비판하고 대립시키는 자세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가능한 방안을 찾는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응과제 활용여부는 정책당국자에게 맡기지는 것이다.

가.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

법적·제도적 수준만 보면 우리는 중국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남북 투자보장합의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듯이, 남북한은 투자에 관한 보호가 되어 있고, 이중과세방지장치가 있으며, 분쟁을 상호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서 교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합의된 청산결제제도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거래에 있어 ‘민족내부간 거래’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무관세로 교역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역 측면에서 보면, 남북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구축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제도의 실질적 적용의 어려움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서 각종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국제협약 의무사항에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명되어 있어서 국제적 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역에 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외에도 WTO상의 규약저촉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 이후나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현재 남북교역을 북·중교역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하는 제도적 과제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장-2, 특히 3장-2-가-3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제도적 환경에서 중국보다 불리한 측면을 보면 북·중간 교역에는 제한품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승인품목이나 사전승인제도도 거의 없지만, 우리는 남북경협합의서를 창출하고도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을 취하고 있어 제도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제도적 제한조

치들을 요약하면 △교역금지품목이 있고 △반출금지 품목이 있으며 △교역허가 절차가 있고 △까다로운 교역관리절차와 통관절차가 있으며 △방북승인절차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제한장치들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여건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유가 어떠한 중국과 비교에서는 결과적으로 경쟁력 저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003년 12월 22일부터 발효된 「남북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따르면¹¹⁶⁾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모두 195개다. 정부는 고시를 다시 개정함에 있어 수산자원보호령의 바뀐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위장반입을 방지하며, 반입실적에 따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외적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제한품목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녹용전지·녹용기타·녹각의 한약재·냉동밤·냉동대추·냉동자·냉동호두의 임산물·건명태(북어)·건조어류필릿(명태포) 수산물의 냉동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신설하였으며, 이외에도 꽃게의 산란기간 중 반입을 제한하고 붉은대게 외 대게의 암컷 및 일부 치게의 반입을 제한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다.¹¹⁷⁾

남북교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는 통상 △북한주민접촉 승인 △북한방문 승인(필요시) △물자반출입 승인 등이 있다.

남북간을 이동하는 모든 물자는 물품의 소유자, 원산지, 종류 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교역물품을 통일부 장관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한 '포괄승인품목'과 개별적인 승인이 필요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포괄승인품목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서 없이도 세관통관이 가능하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반드시 승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품목의

116)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함.

117) 통일부, 「남북교역 실무안내」, p. 21

구분은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품 계약체결 전에 반출입(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반출입 승인은 북한과의 계약서가 구비된 경우, 소정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대체로 20일인데, 북한물품반입 승인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이 시급하며, 대북사업을 장기간 해온 업체도 서류제출이 너무 복잡하다고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서는 무역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접촉승인서 등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승인 기간에 있어서도 현재 20일로 통관이 늦어져 납기 지연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신청 후 2~3일 내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⁸⁾ 중국 기업들은 우리처럼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대북거래를 하고 있다. 특별한 제한품목도 많지 않고, 승인절차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쉽게 이루어지며, 통관절차 역시 대단히 간편하다.

표 5-1. 반입금지품목¹¹⁹⁾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3.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5.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
|---|

향후 이러한 제한조치들을 더욱 간소화하거나 철폐해 나간다면 남북경협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으로 제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으며, 북한의 대중국 편중 현

118) 무역진흥본부, 「2005년 남북경협 전망 및 애로 조사보고」, 남북교역팀, 2005. 1, p. 17.

119)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통일부고시 제99-1, 1999 개정.

상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축소나 철폐의 단계와 방법은 유관국가와 국제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북한의 호응 정도를 적절히 보아가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각이한 형태의 대화나 협상을 통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긍정적 조치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표 5-2. 반출금지품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목록에 규정된 품목) 4.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
|--|

나.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북한의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면 최우선적으로 북한이 중국보다 남한과의 경험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연계 인프라 개발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보다 경제적 연계가 용이하도록 경쟁력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다 같이 북한과 접경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북한과의 교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자연적이며 추가적인 경쟁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볼 때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이점의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철도, 도로로 직접 연계되어 있고, 항만과 공항도 특별한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은 10개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철도도 3개 이상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항만

대부분을 중국선박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항공편은 북측 항공 3편, 중국측 항공 1편 정도가 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간 교역에서 물리적 인프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비교적 적고, 오히려 거래물량이 적어서 이미 있는 인프라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간 교역이 제도적으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연계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가 없으면 그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남북간에는 육로를 비롯한 물리적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다. 남북간에는 평양~개성~서울 철도, 원산~동해 철도, 원산~서울간 철도와 수십 개의 도로를 연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청진~함흥~원산~동해~포항~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해로도 있으며, 인천~남포~신의주를 축으로 하는 해로도 있다. 내륙지역에도 접경마을이 많아 도로연결이 손쉬운 지역이 많다. 남북이 의지만 있다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도로연계를 할 수 있다.

만일 물리적 인프라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북한 수출기업들의 생산물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중국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에는 철도, 도로 등 연계 가능한 인프라가 있지만 아직도 이용 여부가 협의 중이라 실질적인 연계 인프라가 가동 중인 것은 거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 철도, 도로가 연계 가동된다 하더라도 각각 2개 정도다. 이는 중국에 비해 훨씬 적은 연계 인프라이며, 특히 도로 연계인프라가 훨씬 적은 상태다.

연계 인프라 부족은 남북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물리적 연계 인프라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수준의 남북 연계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크고 기동적이며 현대적인 연계 인프라 개발을 구상하여야 한다.

철도연계 인프라 개발이 방대하고 대단히 긴 시간을 요하는 사업인 반면, 도로연계는 비교적 투자비가 적어 당장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북·중 국경지역에 여

러 개의 다리가 있고, 이를 통해 육로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방대한 고속도로나 큰 규모의 도로 건설만 염두에 두지 말고 작지만 연계기능만 착실히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로연계는 동서에만 집중하지 말고 남북한 마을이 접해 있고 거리가 짧으면 어디든 건설한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에 10개 이상의 통상구가 있듯이, 우리도 접경지역에 도로연결을 통하여 통상구와 같은 수준의 연계장치를 만들어 지역마다 자유롭게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실 북·중 국경지역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다리를 놓아야 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반면, 남북한은 육로로 직접 도로연계가 가능하여 투자비용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도로연결을 우선 추진하되 접경지역 여러 곳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소규모 도로연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둘째 중장기적으로 경부선처럼 한반도의 명맥을 잇는 중추적 기능을 하는 고속도로를 2~3개 정도 건설 및 현대화 하며, 셋째 철도는 지금 있는 남북 주요 철도 기간선을 살리면서 보충적으로 단선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넷째 북한의 모든 항만을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점진적인 현대화 및 추가 개발을 기획하며, 다섯째 공항 등 기타 보충적인 연계인프라 운영 및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다. 새로운 물류·통행·통신·통관체계 확립

대북교역환경에 있어 중국에 크게 뒤지는 부분은 물류, 통신, 통행 등 3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접경지역 통상구에는 비교적 큰 물류창고와 통관 및 검역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통신도 비교적 자유롭다. 중국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언제든지 상대방 거래 파트너와 통신이 가능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왕래하고 있다. 통

관을 위한 검역이나 통행절차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된 수출입물자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도 크고 처리속도도 빠르다. 현재도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 시설들을 확장·개건하고 현대화하려 하고 있다. 통행, 통관을 보장해 주는 기관과 인원도 잘 짜여 있고, 전문성도 비교적 높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한에는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물자 반출입 통관과 관련된 원의 통행을 위한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고 남북교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시적인 기관이나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즉 남북 접경지역에는 중국의 국경세관이나 통상구 같은 전문적인 통행, 통관 검역, 통신을 보장해 주는 성격의 기관이나 시설이 없다. 물류, 통행, 통관, 통신의 연계 낙후는 남북교역의 거래 코스트를 높이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남북이 교역을 함에 있어서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지리적 인접성인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육로로 직접 거래하면 원가가 훨씬 절감될 것을 항만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중국을 경유하여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으로 말하면, 중국이 한국을 경유하여 대북거래를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가능한 인프라를 이용하고 정보적 연계도 신속히 한다. 즉 거래비용면에서 우리는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컨대 물류비용 문제만 보아도 현재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경우, 300~350달러 / TEU이지만 남포~인천 항로는 두 배 이상 높다. 그것도 인천~남포간 정기화물선의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바이어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통신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중국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상대방과 전화연거나 팩스연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 기업과 민경연 등 일부 NGO를 제외하면 북측 협력자와 직접 통신연계를 할 수 없다. 통신연계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중국에 가서 연계를 취하거나 중국기업이 대신 하는 경우가 많다. 통행, 통

신의 어려움은 남북교역 참여업체 수를 늘리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거래를 트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를 터놓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기동적인 연계가 어려워 제품관리나 물류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접경지역에 중국 통상구와 같은 크고 작은 통관시설을 많이 만든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통상구에 전화, 팩스, 영상대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신연계가 자유롭도록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항만 이용비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동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북한 항만 현대화 및 확장개발에 참여한다.

넷째, 모든 통행과 통신, 통관 검역관련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의 기동성을 높인다. 다섯째, 접경지역에 물류창고, 보세창고, 거래시장 등 물류기지를 형성한다. 여섯째, 통관과 통행에 필요한 일부 기능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분산하여 기동성을 높여준다. 특히 각 지방기관과 기업을 남북교역에 부담없이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방에 통상구와 같은 통관시설을 구축해 줌과 동시에 지방정부가 통상구를 관리·감독하면서 지방정부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남북교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려면 남북경협 양적 성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남북경협 양적 성장은 곧 북한경제의 대남 의존도 증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대중 의존비중을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북교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현재의 교역제도나 관행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남북교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남북자유무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남북경협은 교역자유화를 통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지금까지 남북교역의 형태와 규모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이 국제통상규범을 근거로 남북교역제도에 문제를 제기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남북교역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국제 안보 및 통상규범은 크게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rrangement) 등의 국제적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남북교역의 무관세혜택 부여로 인한 최혜국대우(MFN) 위반과 같은 WTO협정 저촉문제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양자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 제재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이 교역자유화로 확대될 시기에 대비하여 국제통상규범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대안에는 △남북교역에 대한 WTO의 적용예외 방안 △개도국 특혜규약(Enabling Clause)을 원용하는 방안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원용하는 방안 △가입의정서를 개정하는 방안 △WTO의 웨이버 획득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연구·제시되고 있다.¹²⁰⁾ 그리고 이 대안 가운데 남북교역자유화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이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민족내부거래로 규정된 상태이고, 이에 근거하여 남북 거래는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한품목, 통제품목, 승인절차 등 교역자유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도가 남아 있고, 특히 북한 지급능력의 한계, 북한당국의 체제에 대한 우려, 국제경제 제재 대상국의 오명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해결된다

120) 남북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분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조명철, 『남북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외교부 용역)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고 가정 할 경우 남북한은 교역자유화로 양적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교역자유화에서 핵심은 원산지 문제다. 남북한 교역자유화체제가 형성될 경우 북한산 제품은 기본적으로 남북합작으로 생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해외 수출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산지규정에 의거, 이 제품들이 남과 북 중 어디로 원산지를 판정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WTO의 원산지협정은 원산지 판정을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에 맡기고 있으며, 한 상품의 생산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최종적인 실질적 변화(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무엇이 최종적인 실질적 변화인지는 각국의 입법과 판례에 의해 구체화된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법적·제도적 장치는 비교적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기본적인 기초는 마련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확실하게 법적으로 공인시키기 위한 법률적 수준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 교역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간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라는 것은 이미 92년 기본합의서에서 천명하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남과 북의 법제도에서 이것을 공식화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공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WTO 등에 민족자결권을 인정시키기 위한 가장 중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둘째, 앞서도 지적했듯이, 남북한 민족내부거래의 성격에 맞게, 그리고 무관세 거래가 목적하는 취지에 맞게 수출입 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철폐하는 새로운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미 체결된 쌍무적 및 다자적 협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남북 무역자유화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거나 협정수정의 기회가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 교역자유화는

남북간 거래를 증가시키지는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교역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과 규정을 종합점검하고 부처간 상충되는 규정부문을 조정하며, 간소화할 것은 간소화하고 철폐할 수 있는 것은 대담하게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우리가 먼저 남북 교역자유화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해 내며 공식적인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섯째, 향후 우리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대해 한국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게 하는 전략도 구사해볼 수 있다.

마. 남북한 산업의존성 확대

남북간 상호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에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부문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일부 원료, 연료, 산업원자재 등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재원으로 대치시킬 수 있는 부문도 상당히 존재한다. 예컨대 원유, 코크스 등 에너지 원료들은 지리적으로 보나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화학제품 원료와 가공품, 산업설비 등은 중국보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공업용 원료, 자재 수입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식량이나 생필품, 식료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도 남북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산업의 대중의존은 산업시설보다는 산업원료 및 원자재에 치우쳐 있고, 그 비중도 전체 교역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산업별 대중의존 원료 및 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중의존율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교역시장

을 개척 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최근 북한에 대한 경공업 지원과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연계하기 위한 협상은 남북한 산업의존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한 산업의존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산업분야별 협력 가능성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미 남북경협이 주요 협력형태로 자리 잡은 임가공 사업도 남북한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협력형태로서 남북의 경제의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의 산업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임가공 사업 같은 의존적 구조형성을 위한 사업의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 활용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해소하는 노력은 결코 중국의 역할을 억지하거나 배제시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하며 그 과정에 우리의 역할을 배가시키자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과 북·중 경제관계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긍정적 측면을 찾아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내부 경제개발전략도 남북경협이나 북한의 경제개발에 도전과 기회를 다 같이 제공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개발전략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는 대단히 많다. 예컨대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3성 개발전략은 북한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동북지역개발전략에 따라 막대한 설비와 자재, 에너지와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과 주변국들은 동북3성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최근 북·중 교역이 급증하고 중국기업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동북

지역 개발이 적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관련한 정교한 접근전략 실천과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에 담긴 기회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바,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구분하고 추진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동북아지역의 협력 확대를 통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환경 조성으로 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한반도가 동북아경제협력체에서 중심적 기능을 하고 △중국의 동북3성 지역을 우리의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으로 육성하는 것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중·단기적인 목표로는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지역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개발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에 맞춰 이 지역에 대한 선점효과를 창출하며 △동북지역 개발과 동시에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수요를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회생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지역 개발에 남과 북이 공동대응하여 이익창출을 극대화하고, 그 과정에 북한의 대중의존도도 함께 낮추어 나가는 것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사. 남·북·중 3각협력 추진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해소시키는 방안은 중국의 경제전략과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제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은 이미 동북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대단히 크고, 이 비중과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하고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긴박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의 협력을 배제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용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북·중 3각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 북한, 중국의 상호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의 경험은 3각 협력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과 3자간 경제협력에서 북한으로 인한 지리적 분단은 3자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3자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불안요소 해소와 함께 3자간에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과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변방이면서도 한국·북한·중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북·중 접경 지대를 남·북·중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컨대 단둥·신의주 공동개발과 인천~개성~신의주~단둥으로 이어지는 경제개발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중이 공동협력하여 경의선 북측 지역의 철도 개보수 및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베이징~단둥~신의주~평양~개성~서울~부산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훈춘·나진·선봉을 공동개발하여 나진·선봉을 남·북·중 경제협력의 중계수송거점으로 키울 수도 있다. 중국의 훈춘~북한의 나진·선봉~일본의 니가타로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다롄을 통하는 것보다 육로로는 10분의 1, 해로로는 2분의 1 단축되며, 일본에서 나진항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경우 대서양으로 가는 것보다 수송거리는 2분의 1, 수송시간은 3분의 1로 단축된다.

개방경제하에서 한국, 북한, 중국 간에는 산업간 경쟁력, 임금 등에 있어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므로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조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남·북·중은 주어진 비교우위가 아니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조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비교우위는 수산업, 광산업 등 1차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경협이 활성화되고 외부지원이 증가하면 의류, 신발, 전기·전자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10%의 고성장으로 조만간 산업의 중심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비교우위를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은 해외로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한국은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식기반산업(IT,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비중을 32%로 증가(2004년)시킨다는 목표이고, 향후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비교우위를 토대로 한 남·북·중 3각협력은 교역증대, 경영인적자본, 기술 및 자본투자 확대 등을 통해 산업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한·중 기업이 공동출자한 자본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북한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여 제품을 생산, 이를 중국과 남한 및 제3국에 수출하며 △남·북·중이 공동협력하여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시설 개·보수작업을 지원하며 △북한의 주요 생필품 등 경공업 생산부문, 그리고 수산업 부문 등에 대한 공동진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한·중이 공동 출자하여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과 인접한 북한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거나공단 중심의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신의주특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순수 공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신의주특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에 특구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남·북·중 3각 추진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중 3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결성을 공식 제안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이 과정에 다른 나라의 참여 제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바, 예컨대 러시아나 일본이 참여할 경우 동북아 경제협력차원에서

3각협력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남·북·중의 경제적 연계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으면서도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편중현상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제6장 결론



북한에 있어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무역과 투자 및 지원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경제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와 원부자재 및 식료품의 가장 큰 공급원이며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 가장 우호적인 국가이다. 북·중간 무역·투자를 둘러싼 개인, 기업, 무역기관 등 개별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은 기본적으로는 이윤동기가 배경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자본은 시장선점이라는 장기적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이윤획득이라는 목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최근 북한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 현상의 2대 조건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경제개혁 내지는 시장화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종합시장의 등장, 국영상점의 수매상점화, 개인 서비스업 확대, 수송수요 급증 등이 대중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7·1조치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가 국가의 부담을 축소하고 기업과 개인의 자생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을 줄여나가는 대신 기업과 개인의 경제행위에 대한 자유도를 일정하게 높여준다는 것이 핵심요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최근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경향은 정책적 시장화가 아닌 방임적 시장화이며 이 틈을 중국과 연계된 기업과 개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북한 국내에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여서 외부세계와의 경제활동을 통해서만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대외무역 활동을 더욱 더 분권화했다. 이러한 분권화와 개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용인은 개인과 기업이 생존을 위해 더욱 더 중국과의 무역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국영상점의 수매상점으로의 전환과 종합시장의 형성은 중국 수입상품들이 북한 국내유통망을 급속히 잠식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종합시장의 출현과 수매상점의 확대, 생산수단 유통시장의 형성은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주는 셈이다. 보고서에서 지적 했듯이, 7·1조치 및 종합시장 허용 이후, 북한의 시장은 시장 참여자 수나 시장유입 물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중, 중국산 제품의 증가율은 절대적이다. 둘째는 북·중 양국 정책당국의 북·중 경제관계 확대 의지이다. 북한당국은 기본적으로 당장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적 필요성이 관계설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적 필요성은 부차적 요인에 속한다.

이들 조건은 2002년 7·1조치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2002년 7·1조치 이후 훨씬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이라는 상대가 더욱 중요해졌고 중국은 전략적 안보차원에서 북한이 더욱 더 중요해진 것이다. 하지만, 북·중 양국의 분업구조는 아직 정착되지 못했으며 교역품목, 교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무역구조에 가깝다.

중국은 사실상 대북한 경제관계에서 독점적 지위(수요독점)를 향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건 속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 동북 지역 개발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정부는 더이상 우호가격이나 청산계정을 통한 지원성 대북한 수출을 지속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오히려 동북개발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재를 북한으로부터 끌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북·중 무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대중 채무를 상환 받으려는 중국 기업들의 노력의 결과는 대북 지하자원 개발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외정책의 장기 목표는 책임 있는 초강대국의 건설이며, 중단기목표는 국내 정치개혁과 경제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가발전에 매진하기 위한 안정된 안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안정된 주변환경 조성의 일환으로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이전처럼 공

고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여전하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사고에서 여전히 우선순위에 놓일 것이다.

한편 중국은 6자회담을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식량과 같은 전략물자에 대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감안한다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경제상황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의 개혁을 권고하면서 북한에 대해 지원성 수출 및 무상지원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식량 사정 악화는 향후 북한의 대중 경제, 무역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또한 중국의 대북 물리적, 심리적 부담감은 더욱 커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소모적인 지원을 계속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전략적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현재 북·중간 경제적 연계의 환경보다 더 경쟁력 있는 제도적,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활용하거나 중국과의 협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도 가져야 한다. 특히,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관계를 남북경협관계의 확대로 해결하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북한의 합리적 협력자세를 유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유도해내지 않고서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대중 의존현상을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KOTRA. 1990~2004 각 월호.

_____. 2005. 5. 『2000~200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김명식. 2000. 5.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통일경제』.

김재관. 2005. 「중국 신지도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대북정책과 남북통일관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2호.

문준조. 2002. 「남북교역의 민족내부거래성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박노형. 2000. 10. 「WTO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박두복. 2005. 7. 25.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주요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박석삼. 1999. 9.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 공여 가능규모 추정」.

박순찬. 2005. 10. 『북·중 교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05. 10. 『북한과 중국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영호 · 김영춘 · 여인곤 · 전병곤. 2005. 3.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통일정세분석』. 통일연구원.

서헌재. 2005. 5.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경협, 교역의 민족 내부 거래성 검토」.

안병민. 2000. 여름. 「남북경협 활성화와 교통기반시설 확충」, 『통일과 국토』.

『연변일보』. 2004~05년.

『연합뉴스』 (주간종합판), 북한·통일·재외동포, 각호.

_____. 2004~05년.

오승렬. 2005. 「동북진흥계획과 북중 경제관계」,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남북한』.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이교덕 · 신상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분석」, 『통일정세분석』. 통일연구원. 2004. 2.

이동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실증연구」. 『중국의 대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전경련. 2005.

이영훈. 2004.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금융연구』 제201호

이종석. 2001. 『북한·중국관계:1945~2000』. 서울: 중심,

이찬우. 2000. 7.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 『통일경제』,

- 이홍식 · 이종화 · 신관호 · 왕윤중. 2004.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장효과』, FTA 협동연구시리즈 04-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강택. 2000. 7.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 경제재건」. 『통일경제』,
- 전병근. 2004. 12.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통일경제분석』. 통일연구원,
- 조명철. 2002. 8 「남북경협 로드맵 연구」. 산자부 용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7. 10. 「북한경제정책의 변천과정」. IBRD 보고서.
- _____. 1997. 12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선중앙통신』. 2005. 3. 16.
- 통일부. 2004. 「통일백서」.
- _____. 1998.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 _____. 「북한동향」. 각호.
- _____. 2004. 2. 『남북교역실무안내』. 통일부 교류협력국.
- 통일부 · 무역협회. 2003. 9. 29. 「남북교역 실태조사 결과」.
- 『통일신보』. 2005. 2. 28.
- 통일연구원. 1995.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
- 통일연구원.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2~2003』 서울
- 한국개발원. 1996. 『북한경제지표집』.
- 『흑룡강신문』. 2004. 11.

[외국문 자료]

- The SAS System Version 6.12.
- UNIDO. “D.P.R.Korea’s Rajin-S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An Investment and Business Guide.” July 1998.
- Alcala, Francisco, and Antonio Ciccone. 2001. “Trade and Productivity.” CEPR Discussion Paper. No. 3095.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Bhagwati, Jagdish N. 1988. “Export-Promoting Trade Strategy: Issues and Evidenc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Vol. 3. pp. 27~57. (January)
- Balassa, B. 1985. “Exports, Policy Choices,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1973 Oil Shock.”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8. pp. 23~35.
- _____. 1978. “Exports and Economic Growth: Further Evidence.” *Journal of*

- Development Economics*. Vol. 5. pp. 181~189.
- Baldwin, R.E. and E. Seghezza. 1996. "Testing for 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 CEPR Working Paper. No. 1331.
- Dollar, David, and Aart. Kraay. 2001. "Trade, Growth and Poverty." (unpublished) Washington: World Bank.
- Engle, R. F. and Granger, C. W. J. 1987.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55. pp. 251~276.
- Edwards, S. 1999. "Openness,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 1358-93.
- Greenaway, D.; W. Morgan, P. Wright. 1999. "Exports, Export Composition and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Vol. 8: 41-51.
- Grossman, G.M., and E. Helpman. 1991. *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MA: MIT Press.
- Johansen, S. and Juselius, K. 1990.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integration with Applications to the Demand for Mone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2. pp. 169~210.
- Krueger, A. 1978. *Foreign Trade Regimes and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_____ . 1980. "Trade Policy as an Input to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0. pp. 288~292.(May)
- Lee, Jong-Wha. 1995. "Capital Goods Import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8. pp. 91~110.(October)
- Levine, R. and D. Renelt. 1992. "A Sensitivity Analysis of Cross-Country Growth Regres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2. 942~963.
- Lopez, R. 1991. "How Trade and Macroeconomic Policies Affect Economic Growth and Capital Accumul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625. Washington, DC: World Bank.
- Lucas, Robert L., Jr.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 pp. 3~42.(July)
- Marin, D. 1992. "Is the export-led growth hypothesis valid for industrialized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 678~688
- Michaely, M. 1977. "Export Fluctuations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Analysis."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 pp. 49~53.
- Romer, P. M.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 S71-S102.
- RIVERA-BATIZ, L.A. and ROMER, P.M. 1991. "Economic integration and endogenous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pp. 531~555.
- Sachs, J.D. and A. Warner. 1995. "Economic Reform and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1-118.
- Segerstrom, P. C. T. C. A. Anant. and E. Dinopoulos. 1990. "A Schumpeterian Model of the Product Life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1077-1091.
- Young, Alwyn. 1991. "Learning by Doing and the Dynamic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pp. 369~405.(May)

부 록

북·중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1.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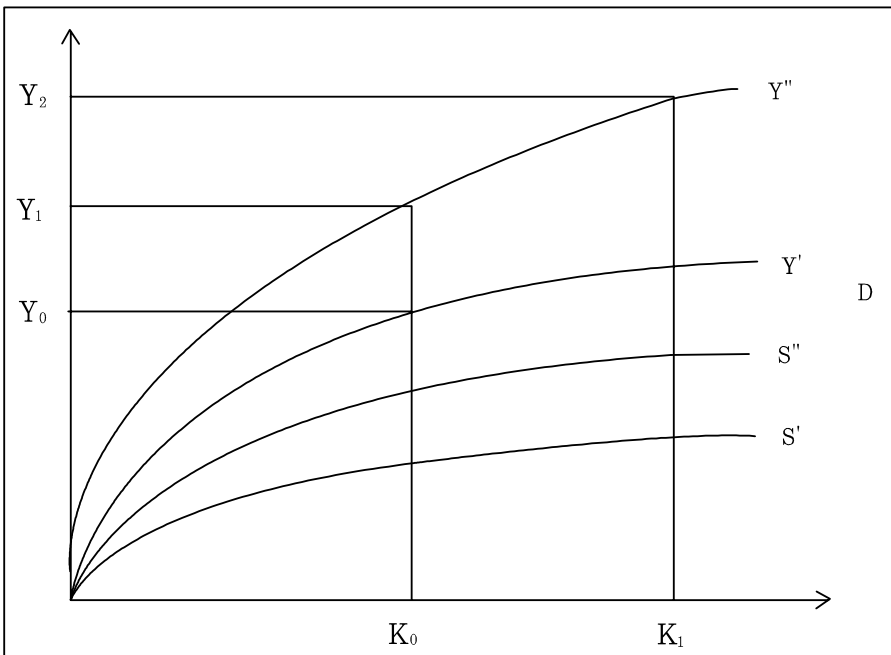
전통적 무역이론(Ricardo model, Heckscher-Ohlin model)은 무역 또는 무역자유화로 각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특화함으로써 무역이익(gain from trade)을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주된 메커니즘을 무역자유화로 비효율적인 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보다 가치 높은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데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이홍식 외(2004)는 지금까지 밝혀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약하고 있다.

- ① 무역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수입 자본재에 기술이 체화되어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Lee, 1995).
- ② 무역은 국내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규모가 큰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③ 비숙련 저임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
- ④ 투자효율성이 높거나 수출시장접근도가 높을수록 높은 국내저축률과 외자유입이 이루어진다.
- ⑤ 무역개방정책을 실현하는 정부는 다른 정책들의 수행에 있어서도 성장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 ⑥ 무역개방이 이루어지면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rent-seeking) 행위가 줄어든다.
- ⑦ 경쟁과 더 큰 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적 행태가 촉진된다.
- ⑧ 무역이 개방되면 아이디어와 혁신에 대한 개방도 함께 이루어진다.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주로 Solow 모형과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그림 1. 무역의 자본축적효과



Baldwin(1989, 1992)은 Solow 모형에 기초하여 무역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무역으로 인해 생산요소는 비효율적인 산업에서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동함으로써 해당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즉, 경제 전체로 볼 때 자원투입량은 변하지 않는다 해도 향상된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전통적 무역이론과 완전경쟁에 기초한 정태적 일반균형연산(CGE) 모형이 파악하는 무역의 정태적 효과다.

두 번째 단계는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어 산출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된 소득 중 일부는 다시 저축되기 때문에 투자와 자본스톡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단계는 정태적 효과가 자본스톡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Baldwin(1989, 1992)은 이러한 자본축적의 효과를 그래프로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의 생산함수는 Y' , 총저축함수는 S' 로 표시되어 있고, D 는 감가상각선을 나타낸다.

먼저 무역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되면 이 효과는 생산함수 (1)에서 효율성을 나타내는 계수인 A 의 증가로 파악될 수 있다. 이제 A 가 증가하면 생산함수는 Y' 에서 Y'' 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자본스톡은 변하지 않고 K_0 에 머물러 있지만 산출량은 Y_0 에서 Y_1 으로 증가한다. 즉, $Y_1 - Y_0$ 만큼 국내총생산이 증가된 것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향상된 결과다. 저축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증가된 소득의 일정부분은 다시 저축되기 때문에 저축곡선이 S' 에서 S'' 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자본스톡 K_0 는 정상상태(steady-state)를 나타내지 않으며, 새로운 정상상태에서의 자본스톡은 K_1 을 나타낸다. 새로운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본스톡은 계속 증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국내총생산도 Y_2 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Baldwin(1989)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자본스톡이 $K_1 - K_0$ 만큼 추가로 축적됨으로써 증가되는 국내총생산 $Y_2 - Y_1$ 을 중기적 성장보너스(medium-run growth bonus)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두 부문 모형에 적용될 수 있다. Solow 모형과 같이 완전경쟁과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가정한다. 일국의 경제는 재화 X 와

Z 를 생산하는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재화 X 와 Z 는 Cobb-Douglas 함수에 의해 복합재화 Y 로 결합된다고 가정한다.

$$Y = (X)^{\alpha} (Z)^{1-\alpha}, \quad 0 < \alpha < 1 \quad (1)$$

$$X = A_x K^{\beta} (L_x)^{1-\beta}, \quad 0 < \beta < 1 \quad (2)$$

$$Z = A_z L_z \quad (3)$$

여기서 K , L 와 A_i 는 각각 $i \in X, Z$ 산업의 자본, 노동과 효율성 계수를 나타낸다. 식 (1)의 Y 는 국내총생산이며, 노동은 산업 X 와 산업 Z 에 투입되기 때문에 $L = L_x + L_z$ 가 성립한다. Y 는 소비되거나 투자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P_y Y = P_y C + P_x I \quad (4)$$

P_y 는 Y 의 가격이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P_y = 1$ 을 가정하며, 자본은 산업 X 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I)의 가격은 곧 P_x 이다.

자본스톡은 투자를 통해 변하며, 투자는 일정기간 내 이루어진 자본스톡의 변화와 감가상각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

$$I = \frac{dK}{dt} + \delta K \quad (5)$$

여기서 δ 는 감가상각률을 나타내며, dK/dt 는 자본스톡의 변화를 가리킨다.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 소득이 저축과 소비로 배분되는 경로를 확정해야 하는데, 우선 여기서는 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에 따라 저축은 소득에 비례한다는 고정저축률을 가정한다.

소득이 저축과 소비로 연결되는 경로를 가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역으로 인해 저축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저축률을 가정한다. 즉, 총저축은 소득에 비례한다.

$$S(t) = sY(t) \quad (6)$$

S 는 총저축, s 는 저축률을 나타낸다.

자본스톡의 변화는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상상태에서 투자는 총저축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

$$\frac{dk}{dt} = sy - \delta k \quad (7)$$

$$k \equiv \frac{K}{L_y}, \quad y \equiv \frac{Y}{L_y}$$

정상상태에서 자본스톡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스톡과 소득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식 (1)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 = \frac{s}{\delta} y = \frac{s}{\delta} A \left(\frac{D}{L_y} \right)^\beta \quad (8)$$

여기서 δ 는 감가상각률을 가리킨다.

중간재 기업은 대칭적이라는 가정을 이용하면 정상상태에서의 자본스톡과 총생산을 도출할 수 있다.

$$K^* = A \frac{1}{1-\alpha} \left(\frac{s}{\delta} \right)^{\frac{1}{1-\alpha}} \left(\frac{\beta(\varepsilon-1) n^{\rho-1}}{(1-\alpha-\beta)\varepsilon b} \right)^{\frac{\beta}{1-\alpha}} L_y \quad (9)$$

$$Y^* = A \frac{1}{1-\alpha} \left(\frac{s}{\delta} \right)^{\frac{\alpha}{1-\alpha}} \left(\frac{\beta(\varepsilon-1) n^{\rho-1}}{(1-\alpha-\beta)\varepsilon b} \right)^{\frac{\beta}{1-\alpha}} L_y \quad (10)$$

무역개방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되면, 식 (9)와 식 (10)에서 A 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상상태에서의 자본스톡 K^* 와 국내총생산 또는 소득 Y^* 도 증가한다. 고전학파의 경제성장모형에 기초한 무역자유화의 자본축적효과는 소득수준을 높이는 수준효과(level effect)를 나타내며, 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경제성장효과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고전학파의 경제성장모형이 아닌 Lucas(1988), Romer(1986, 1990), Grossman and Helpman(1991)으로 대표되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따라 자본(K) 물리적 자본(physical capital)만이 아닌 인적 자본(human capital) 또는 지식 자본(knowledge capital)을 포함하는 광의의 자본으로 파악하면, 무역의 효과는 단지 소득향상으로 표현되는 수준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효과(long-run growth effect)를 갖게 된다.

간단한 예로 생산함수를 $Y = AK$ 로 가정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다. 여기에 고정저축률의 경우와 같이 총소득에서 광의의 자본에 투자되는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자본축적률은 $g_k = sA - \delta$ 이며, $sA > \delta$ 가 성립하면 정상상태에서도 자본스톡은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따르면 무역은 자본스톡과 소득을 영구히 증가시키는 경제성장효과를 갖게 된다.

무역개방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핵심은 무역개방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내생적 기술진보(technology progress)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Helpman and Grossman(1991)은 무역개방을 통해 상품교역이나 직접투자(FDI)가 늘어나면 이와 함께 기술확산이 이루어져 성장이 촉진된다고 하였고, Bhagwati(1988), Krueger(1980)는 무역개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산업 특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에 기초한 수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수출이 규모의 경제 활용, 기술이전을 통한 외부효과 창출로 인해 총요소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Grossman and Helpman 1990; Rivera-Batiz and Romer 1991; Segerstrom et al. 1990). 그러나 Lucas(1988), Young(1991)은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에 의해 성장이 촉진되는 모형을 통해, 개방으로 인해 학습 효과가 낮은 산업에 특화가 일어나는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선행 실증분석 연구

무역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Krueger(1978), Sachs and Warner(1995)는 경제개방과 GDP 성장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Levine and Renelt(1992)는 실증분석에서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난 50여개 변수를 재검토하여 경제성장과 투자 그리고 투자와 무역이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무역유인-투자주도의 성장(trade-induced investment-led growth)은 Baldwin and Seghezza(1996)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Dollar and Kraay(2001)는 1975~79년 기간과 1995~97년 기간에 GDP 대비 무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를 개방된 국가로, 1985~89년과 1995~97년 기간에 평균 관세를 가장 적게 인하한 국가를 미개방국가, 그리고 이 두 그룹에 모두 속하는 국가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개방된 국가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수출은 수출재 생산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높은 질의 재화와 서비스 수입이 가능해져 국가의 생산가능곡선이 확대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개도국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수출과 경제성장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Balassa 1978, 1985). Michaely(1977), Lopez(1991), Edwards(1999)는 국가간 횡단분석을 통해 개도국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Marin(1992)은 수출과 생산성 간의 관계, 즉 수출주도 성장가설(export-led growth hypothesis)을 분석한 결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수출과 생산성 간의 긍정적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3. 북·중간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본 보고서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북한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6~03 연간 시계열 데이터(time series data)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이영훈(2004)은 북한의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실증분석의 기본모형으로 수입이 추가된 확대된 생산함수(import-augmented production function)를 사용하고 있다.

$$Q = AK^\alpha L^\beta M^\delta \quad (1)$$

여기서 K 는 자본스톡, L 은 투입된 노동, M 은 수입을 나타낸다.

이영훈(2004)은 수출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 북한의 수입은 생산요소가 대부분인 반면 수출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식 (1)의 모형에 기초하여 1965~2002년 북한의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수입탄력도를 구한 다음 생산함수와 국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하여 수출에 대한 국내총생산(GDP)의 탄력도를 간접적으로 추론하였다. 수입에 대한 국민소득의 탄력도는 0.15이며, 수출에 대한 국민소득 탄력도는 0.04로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수출이 생산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수입수요를 창출하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생산함수 자체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모두 포함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북·중 교역의 북한 경제에의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가. 데이터

본 연구는 북한의 GDP, 수출, 수입 및 자본스톡에 대한 데이터는 이영훈(2004)을 이용한다.¹²¹⁾ 이는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1995), 『북한경제지표집』(1996),

통일부와 KOTRA, 한국은행의 북한경제자료 등 여러 출처에서 종합한 것이다. 또한 이영훈(2004)은 자본스톡을 인민경제비에 포함된 ‘기본건설투자’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률을 0.05로 가정하여 추정하고 있다. 1995~99년 인민경제비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 기간의 인민경제비는 카플란-무어스틴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데이터를 요약하고 있다.

표 1. 주요 변수에 대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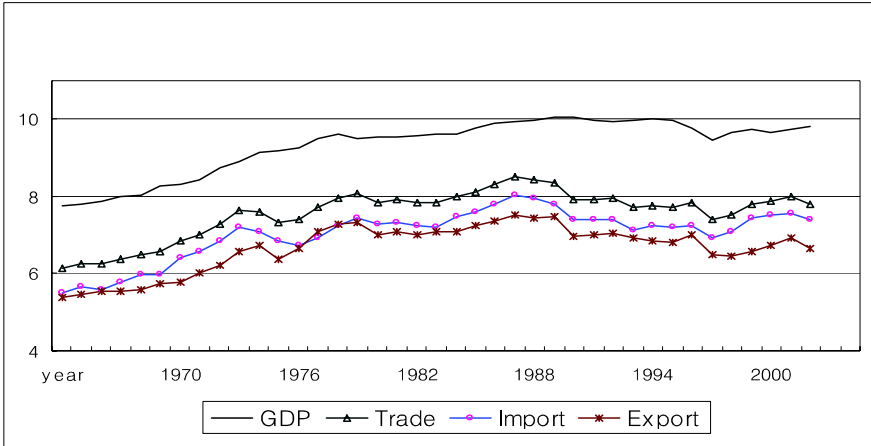
	평균	표준편차	최 대	최 소
ln(GDP)	9.32	0.72	7.76	10.05
ln(GDP/L)	7.27	0.45	6.30	7.78
lnK	8.35	0.87	6.65	9.48
ln(Trade)	7.57	0.63	6.15	8.49
ln(export)	6.67	0.61	5.39	7.53
ln(import)	7.04	0.65	5.52	8.02
ln(K/L)	6.30	6.37	7.10	5.13
ln(Trade/L)	5.52	5.53	6.28	4.69
ln(export/L)	4.62	4.60	5.39	3.93
ln(import/L)	4.99	5.06	5.81	4.06
openness	0.18	0.18	0.29	0.10

나. 북·중국 무역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림 2]는 북한의 연도별 국내총생산과 무역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GDP 및 무역은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다. 국내총생산과 무역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1) 북한의 산업별 수입에 대한 데이터는 이영훈 박사가 기꺼이 제공해 주었다.

그림 2. 북한의 연도별 GDP, 무역, 수입 및 수출



식 (1)은 수입을 포함한 확대된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영훈(2004)은 이에 기초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과 1인당 수입을 합한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명변수로 1인당 자본 및 1인당 수입을 사용하고 있다.¹²²⁾ 여러 실증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자본과 노동 이외에 수출을 포함한 확장된 생산함수이다(Greenaway et al. 1999).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수출, 수입 및 무역을 포함한 확대된 생산함수를 이용한다.

무역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모형으로 분석한다.

$$\ln(GDP/L)_t = \alpha + \beta_1 \ln(K/L)_t + \beta_2 (Trade/L)_t + \varepsilon_t \quad (2)$$

자기상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정과 Breusch- Godfrey

122) 여기서 1인당은 전체 인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 즉 투입된 노동력으로 GDP와 수입을 나눈 값을 의미한다.

LM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자기상관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OLS를 사용하면 OLS 추정량은 불편성을 유지하지만 효율성은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계열이 안정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단위근(unit root) 존재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각 변수들이 시계열적으로 불안정적인 경우에는 회귀분석의 결과가 허구적인 결과(spurious regression)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시차의 선택은 SIC(Schwarz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였다. [표 2]는 GDP, 자본스톡, 무역, 수출 및 수입에 대한 ADF(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준(level)값의 경우 모든 변수는 시계열이 불안정(nonstationary)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즉, 단위근을 갖고 있다. 그러나 1차 차분한 값은 모든 변수가 1~5% 범위에서 시계열은 단위근을 갖지 않고 안정적(stationary)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단위근 검증결과(Augmented Dickey-Fuller Test)

	수준값		1차 차분	
	t-Statistic	p-value	t-Statistic	p-value
ln(perGDP)	-2.4431	0.1372	-4.8622	0.0003
ln(perK)	-1.7573	0.3951	-3.48973	0.0139
ln(perTrade)	-2.0575	0.2623	-4.83438	0.0004
ln(perExport)	-1.6868	0.4297	-5.71452	0.0000
ln(perImport)	-2.2941	0.179	-4.74726	0.0005
openness	-2.2019	0.2089	-6.40236	0.0000
critical values:				
1% level	-3.6156			
5% level	-2.9412			

그 다음으로 변수간의 장기적 균형관계 존재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변수간 공적분 관계를 검정한다. 공적분 관계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시계열 과정이 개별적으로

는 불안정하더라도 이들을 선형으로 결합한 함수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X 와 Y 가 각각 불안정 시계열이라면, X 와 Y 의 선형결합도 역시 확률보행(random walk)일 것으로 예상된다(Engle and Granger, 1987). 하지만 이 두 변수의 특정 조합인 $Z = X - bY$ 는 안정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성질이 성립된다면 우리는 X 와 Y 가 공적분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X 와 Y 가 각각 불안정 시계열이지만 공적분되어 있다면 표준적인 Granger-인과성 검정으로부터의 추론은 유효하지 못하며,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에 근거한 보다 포괄적인 인과성 검정을 해야 한다(Engle and Granger, 1987). 만약 시계열 변수가 단위근을 갖고 공적분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오차수정모형이 이용된다. 오차수정모형은 변수들의 장기균형의 특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변수들의 단기적 동태과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위근이 있으면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분을 이용한 회귀분석이 이용된다.

상수항과 추세를 포함하여 Johansen 공적분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n(\text{GDP}/L)$ 과 $\ln(\text{K}/L)$ 간에는 5% 수준에서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공적분 벡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자본스톡의 관계에서만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무역을 수출과 수입으로 분리하여 공적분 분석을 하였는데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의 자본스톡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공적분을 형성하고 있는 시계열 자료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오차수정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단위근을 갖지 않는 1차 차분으로 회귀분석한다.

표 3. 공적분 검증(Johansen cointegration test) 결과

	ln(perGDP), ln(perTrade)				ln(perGDP), ln(perK), ln(perTrade)			
	Eigen value	Trace Statistic	Critical Value	p-값	Eigen value	Trace Statistic	Critical Value	p-값
None	0.326	20.983	25.872	0.180	0.397	38.808	42.915	0.121
At most 1	0.199	7.579	12.517	0.288	0.305	20.084	25.872	0.221
At most 2					0.163	6.610	12.517	0.386

주 : 상수항 및 추세 포함.

표 4. ln(GDP/L)과 ln(K/L)의 공적분 검증

	Eigen value	Trace Statistic	Critical Value	p-값
None*	0.292	16.584	15.494	0.034
At most* 1	0.132	4.843	3.841	0.027

주) 상수항 및 추세 포함.

[표 5]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자 1인당 자본스톡은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1)에서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 또한 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계수 값은 0.229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무역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23%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형 (2)는 무역을 수출과 수입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인데, 수출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수입은 영(0)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수출주도 경제성장(export-led growth)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본스톡과 수출만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수출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북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 무역, 수출, 수입이 GDP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Delta\log(\text{GDP}/L)$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항	0.018 (0.016)	0.020 (0.016)	0.021 (0.015)	0.020 (0.017)
$\Delta\log(K/L)$	0.329*** (0.108)	0.302*** (0.110)	0.301*** (0.108)	0.350*** (0.117)
$\Delta\log(\text{Trade}/L)$	0.229*** (0.086)			
$\Delta\log(\text{Export}/L)$		0.212* (0.107)	0.224*** (0.078)	
$\Delta\log(\text{Import}/L)$		0.019 (0.108)		
$\Delta(\text{openness})$				-0.590 (0.549)
n. obs.	38	38	38	38
Adj. R-squared	0.313	0.313	0.332	0.201
D.W. statistic	2.22	2.19	2.18	1.93

주 : *, **, ***는 각각 5%, 1%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며, 괄호 안은 표준편차다.

한편 모형 (4)는 무역규모 대신 개방도(openness)¹²³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역개방도를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무역규모 자체가 소득증가에 영향을 받는 내생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Alcala and Ciccone(2001)는 교역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비교역재의 상대가격이 증가함으로써 개방도가 감소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을 유발하는 무역의 증가로 인해 무역개방도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에 있어 하향 편향(biasing downward)이 발생할 수 있다.

123) 개방도는 (수출+수입)/GDP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력에 근거한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을 측정함으로써 ‘실질 개방도(real openness)’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물가지수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력에 기초한 GDP를 추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 북·중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는 수출, 수입 및 무역이 북한의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무역과 소득의 관계를 분석한다. 소득은 국내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내총생산(per capita GDP)으로 정의한다. 실증분석의 기본모형은 식 (3)과 유사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국내총생산을 비롯한 각 변수를 생산에 투입된 노동(L) 대신 전체 인구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ln(GDP/pop)_t = \alpha + \beta_1 \ln(K/pop)_t + \beta_2 (Trade/pop)_t + \varepsilon_t \quad (4)$$

먼저 자기상관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과 Breusch-Godfrey LM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자기상관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무역 등에 대한 ADF 단위근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어 있다. 고려된 모든 변수의 시계열이 불안정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단위근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상관이 존재할 때 사용되는 코크레인-오컷(Cochrane-Orcutt) AR(1) 추정 방법을 이용한다.

표 6. 무역과 소득간의 분석을 위한 단위근(unit root) 검증 결과(Augmented Dickey -fuller Test)

	t 통계량	p-값
log(GDP/Pop)	-4.441	0.000
log(K/Pop)	-4.355	0.000
log(Trade/Pop)	-4.395	0.000
log(Export/Pop)	-4.426	0.000
log(Import/Pop)	-4.489	0.000

코크레인-오컷 AR(1) 추정방법은 자기상관 현상이 존재할 때 ε_t 와 ε_{t-1} 의 상관 계수값을 추정한 다음 이 값을 근거로 오차항을 함수전환하는 일반최소자승법 (generalized least squares method)의 일종이다. 추정계수는 최소분산을 가지며 불편추정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종속변수로 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 그리고 설명변수로는 인구 1인당 자본스톡, 무역, 수출 및 수입을 이용하였다. 모형 (1)은 인구 1인당 자본스톡과 인구 1인당 무역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설명변수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인당 무역규모의 계수 값은 0.408이며,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구 1인당 무역규모가 1% 증가하면 소득은 0.40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는 무역규모 대신 인구 1인당 수출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계수 값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은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인데, 1인당 수출과 수입은 모두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출이 1% 증가하면 소득은 0.21%, 수입이 1% 증가하면 소득은 약 0.20%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무역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log (per capita GDP)	코크레인-오컷 AR(1)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항	1.291*** (0.190)	1.689*** (0.265)	1.566*** (0.191)
log(K/Pop)	0.600*** (0.083)	0.633*** (0.087)	0.603*** (0.086)
log(Trade/Pop)	0.408*** (0.085)		
log(Export/Pop)		0.368*** (0.265)	0.210* (0.124)
log(Import/Pop)			0.199* (0.117)
n. obs.	38	38	38
R-squared	0.98	0.98	0.98
D.W. statistic	1.87	1.94	1.90

주 : 표5와 같음.

4. 시사점

[표 8]은 북한의 주요 국가와의 교역 현황을 요약하고 있다. 2004년 북한은 약 10억 달러를 수출하고 18억 달러를 수입하여 총교역 규모는 2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2003년 대비 19.5%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가는 중국이며, 2004년 북한은 약 5억 8천만 달러를 수출하고 8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2003년 대비 35.4% 증가하였고, 특히 수출은 2003년에 비해 48.3% 증가하였다. 그 다음이 일본인데, 2004년 총 무역규모는 약 2억 5천만 달러로 북한 전체 무역의 8.8%를 차지하였다. [표 8]에 의하면 북한의 교역상대국 중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고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북한의 주요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무역규모		점유율(%)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중 국	395	586	628	799	1,023	1,385	42.8	48.5
일 본	174	163	92	89	265	252	11.1	8.8
태 국	51	91	204	239	254	330	10.6	11.5
인 도	2	1	158	134	159	135	6.7	4.7
러시아	3	7	116	206	118	213	4.9	7.5
5개국 합계	624	848	1,196	1,468	1,820	2,316	76.1	81.1
총 계	777	1,020	1,614	1,837	2,391	2,857	100	100

자료: KOTRA,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앞서 북한의 1965~2002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역이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구 1인당 무역규모가 1% 증가하면 소득은 0.408% 증가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03년 대비 2004년 북한의 전체 교역은 약 19.5% 증가하였는데, 상기 분석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4.485% 증가해야 하고, 이러한 교역의 확대에 북한의 1인당 소득도 7.96%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북한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2.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른 추정치와 실제 성장률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몇 가지 있다.

첫째, 실증분석에서는 자본스톡을 포함하는 장기적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하였다. 자본스톡은 투자에 의해 증가되는 바, 자본재의 수입 및 국내투자가 당해연도 곧바로 자본스톡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증분석은 무역과

경제성장 및 무역과 1인당 소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것이어서 1965년 이후 두 요인간의 추세 및 관계에 대한 평균 및 통계적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정연도에서의 성장률과 무역과의 정확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은 향후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2004년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48.5%에 달할 만큼 중국과의 교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의 교역확대를 본 연구결과에 적용하면, 중국과의 교역이 1% 증가하면 북한의 전체 교역은 0.485%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약 0.112% 증가하며, 북한의 소득은 약 0.198%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2004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인해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추정치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역개방도를 GDP 대비 수출과 수입으로 측정하면 무역개방도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역개방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보다 엄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구매력으로 평가한 GDP로 무역개방도를 측정하여 개방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통계자료의 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못하며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Executive Summary

The Increase of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Its Implications of South Korea

Myung-Chul Cho *et al.*

North Korea has remarkably increased th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because Soviet Union was broken down and Western countries have taken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Especially from 90s,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drawing closer and in 2000s, have expanded their relationship in all economic sectors such as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China is the first trade partner for fifteen years and becomes the first investor in North Korea from 2004. The situa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is sharply developed could be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North Korea's economy rehabilitation. However, it could be also worried that this relationship would raise more dependence on China and would make North Korean economy be subject to Chinese economy structurally.

In fact, North Korea has largely increased the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It means that North Korea has become much closer with China in the area of economic relationship.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can be clearly observed in trade, investment, and assistances sector. At first, in the case of trade sector, North Korea's total trade volume was 3,554million dollars in 2004 and, if excluding the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reached 2,857million dollars. The

amount of trade with China was reached 1,385million dollars. This amount is become 39% of total amount of external trade and 48.7% except trade with South Korea. In 2004, North Korea's total amount of trade was increased to 19.5% compared with in 1993 and in the same time, the amount of trade with China was increased up to 35.4%. Thus, China has greatly contributed to North Korea's trade. Second, in the case of investment sector, in 2004, China invested 173.5million dollars to North Korea and increased one hundred thirtyfold of investment compared with 1.3million dollars in 2003. From 2000s, some Chinese companies began to invest to the border areas in North Korea and particularly in 2004, North Korea has held public investor offerings in several provinces of China. Third, in the case of assistances sector, China has decreased assistances to North Korea that was at the peak of 69million and 1,290thousand dollars in 2001. However, China has tended to assist North Korea informally rather than formally.

This report analyzes using times series data from 1996 to 2003 to investigate effects on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caused by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result shows that, if increasing 1% of trade with China, North Korea' would increase 0.485% of total trade amount, 0.112% of economic growth rate, and 0.198% of national income. However, these estimates are evaluated based on the date in 2004. When considering China's high economic growth rate and intensific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and income would be affected from China.

In fact, North Korea is a quite isolated country so it is hard to grasp the role of China in domestic economic activities by and large. we interviewed 165 North Korean defectors and carried out a survey of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his report shows North Korea seriously depends on China most economic area such as production, transportation, sales, and finance.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can partly help North Korea's urgent economic difficulties and divide the burden of assistance from South Korea. However, in other aspect, it can be negatively effected for expansion of inter-Koreas economic cooperation and in-

tegration of two Koreas' economies. Henc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approach toward role of China for North Korean economy and prepare policy measures to maximize positive effects with the open mind. At the same time, we should make effort to decrease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by strengthen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hip. Finally, it would be difficult to reduce North Korea's sustainable dependence on China withou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趙明哲

김일성종합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김일성종합대학교 경제학 박사

김일성종합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대의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담당장(現, E-mail: mjcho@kiep.go.kr)

著書 및 論文

『북한경제백서』(공저, 2002)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2003) 외

梁文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교수(現, E-mail: ymoonsoo@paran.com)

著書 및 論文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공저, 2003)

『북한과 통일문제의 이해』(공저, 2004) 외

鄭勝鎬

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

대의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two@kiep.go.kr)

著書 및 論文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방안』(공저, 2005)

朴淳讚

독일 잘란트대학교 경제학 석사

독일 문헌대학교 경제학 박사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現, E-mail: spark@kongju.ac.kr)

著書 및 論文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2004)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Asian Economic Papers, Vol.4(1), 2005) 외

정책연구 05-17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2005년 12월 20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 景 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대표 강대원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1237-6 94320 정가 10,000원
89-322-1072-1(세트)

The Increase of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Its Implications of South Korea

Myung-Chul Cho *et al.*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증가는 시급한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한국의 대북지원부담을 덜어 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향후 남북경협 확대, 남북경제통합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개방된 시각을 가지고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활용하거나 극대화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을 남북경제관계 밀접화로 대체시키는 방향에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남북경협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유도해내지 않고서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대중 의존현상을 해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http://www.kiep.go.kr)



ISBN 89-322-1237-6
ISBN 89-322-1072-1(세트)

정가 10,000원